

#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

| 주최 | 헤럴드경제,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 일시 | 2013. 2. 20(수) 14:00~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지하2층)



## ■ 세미나 프로그램

13:30~14:00

□ 등록

14:00~14:20  
(20분)

□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 김 주 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환영사 : 이 영 만 대표이사 ((주) 헤럴드)

14:20~15:20  
(60분)

□ 발제 :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

- 주제 1: 성장잠재력의 하락 원인과 제고 방안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주제 2: 생애맞춤형 복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
- 주제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통합력 제고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20~15:30

□ 휴 식

15:30~17:00  
(90분)

□ 종합토론

\* 좌 장 :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 패널 토론
  -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희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 발제자 3인 (김정식 교수, 김용하 교수, 이종욱 교수)

17:00

□ 폐회



# 목 차

---

|  |    |
|--|----|
| ■ 개회사 .....  | 1  |
| ■ 발 표  |    |
| - 주제 1 : 성장잠재력의 하락 원인과 제고 방안 .....   | 5  |
| - 주제 2 : 생애맞춤형 복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  | 27 |
| - 주제 3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통합력 제고 .....   | 45 |
| ■ 토 론  |    |
| - 토론문 .....  | 59 |
| <br>   |    |
| <별첨>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br>(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2, 2013.1.8) ..... | 77 |



## ■ 개회사



## ■ 개 회 사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만큼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유럽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작년 성장률은 2.0%에 그쳤으며, 올해도 3%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2월 2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새 정부 앞에는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엄중한 국내외 환경에 잘 대처해야 하며,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할 때 희망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복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고용률도 높아지고 중산층도 늘어나는 선순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헤럴드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공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로 모신 분들은 그야말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현대경제연구원과 더불어 오늘 이 같이 뜻 깊은 행사를 함께 주관해주신 (주)헤럴드 이영만 대표님,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희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주제 :

##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

발표 :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

이 중 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제 1

## 성장잠재력의 하락 원인과 제고 방안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민행복시대의 경제정책방향 세미나

# 성장잠재력 하락 원인과 제고 방안

2013.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 I.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 저성장기조 정착

- 현재 잠재성장률 3% 중후반에서 2020년대에는 2%대로 하락
- 일자리 부족으로 높은 실업률
- 생계형 가계부채의 증가
-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준비가 없음
- 복지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성장기조정착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증가로 인해 남미형 경제로 진입전망

## 한국의 기간별 평균성장률

| 연도              | 경제성장률(%)  |
|-----------------|-----------|
| 1960-1969       | 8.46      |
| 1970-1979       | 10.16     |
| 1980-1989       | 8.64      |
| 1990-1999       | 6.68      |
| 2000-2009       | 4.43      |
| 2010-2012(2012) | 4.10(2.1)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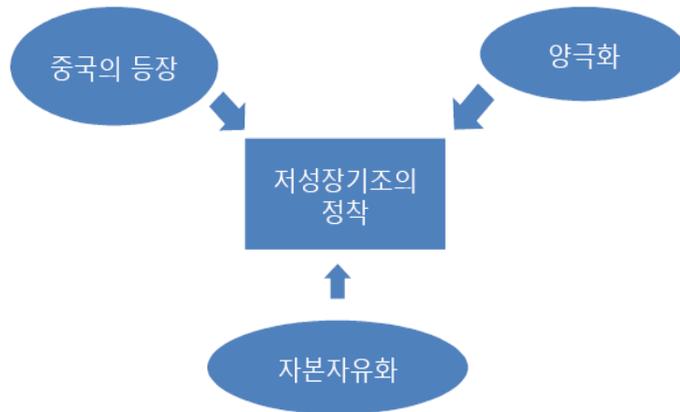
| 기간        | 잠재성장률(%) |
|-----------|----------|
| 1981-1990 | 8.6      |
| 1991-2000 | 6.4      |
| 2001-2010 | 4.5      |
| 2011-2020 | 3.6      |
| 2021-2030 | 2.7      |
| 2031-2040 | 1.9      |
| 2041-2050 | 1.4      |
| 2051-2060 | 1.0      |
| 2061-2070 | 0.8      |

자료 : KDI, 2012

## 양극화와 한국경제의 성공조건

- 평등(equality)을 좋아하는 국민성
  - 농지개혁 : 3정보 상한 (1950년)
- 경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국민성 : 자본주의적 특성
  - 새마을 운동 (1960년대) : 경제하려는 의지 자극
-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높은 경제성장 가능

## 한국경제의 문제점



7

## II. 성장잠재력 하락원인



8

##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

-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 중국의 등장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 높은 대외무역의존도와 낮은 내수 : 대외의존도 110%
- 세계경기침체로 수출부진
- 낮은 과학기술력과 기업투자부진 : 높은 생산원가
- 높은 임금과 생활물가 상승의 악순환 (Vicious Circle)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

9

## 1. 기업투자의 구조적 부진

- 수출 :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
  - 세계경기 침체와 높은 대외의존도
- 투자 :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
  - 높은 임금과 낮은 과학기술
  - 산업구조 변화 : 서비스업화
- 높은 임금의 원인
  - 연금체제의 미비
  - 경제하려는 높은 의욕
  - 높은 생활비용 (교육 및 식탁물가)
- 소비 :
  - 일자리 부족
  - 미래 불확실

10

## 일자리 부족의 원인

- 과도한 노사분쟁
  - 조기퇴직으로 50세 이상 실업률 증가
  - 연금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중소기업 일자리 부진
  - 중소기업 (300인 이상 고용) 일자리 창출 : 88% 이상
  -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임금의 50% 수준
- 높은 임금과 생활물가
- 탈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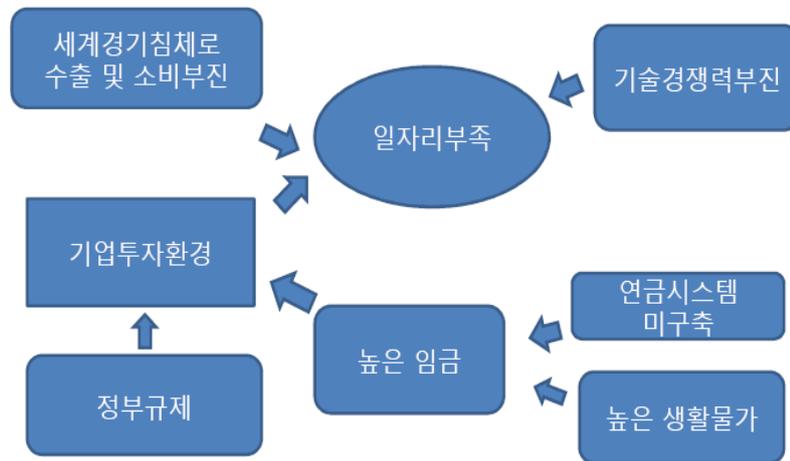
## 산업별 취업자수

|      | 전체취업<br>자수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림어업             |
|------|------------|------------------|-----------------|-------------------|------------------|
| 2001 | 21,572     | 4,267<br>(19.8%) | 1,585<br>(7.4%) | 13,497<br>(62.6%) | 2,148<br>(10.0%) |
| 2011 | 24,244     | 4,091<br>(16.9%) | 1,751<br>(7.2%) | 16,768<br>(69.1%) | 1,542<br>(6.4%)  |

단위 : 천명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 2012.11

12

## 일자리 부족의 원인



13

## 2. 낮은 과학기술력

- 실물부문의 낮은 임금(금융부문에 비해)
- 금융부문에 우월한 인력 배분 : 실물부문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인력 배분
- 낮은 과학기술력으로 기업투자 부진
- 국내 과학교육체제의 문제점

### 3.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 출산율(15세-49세 여성의 평균자녀수) : 한국 1.2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 : 미국 2.0명
-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 노동생산성 하락과 복지지출 증가

### 4.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비감소



##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성

- 2011년말 가계부채 1,104조원, 가계신용 913조원, 가계대출 858조원)
- 2004년까지는 5%미만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임
- 2012년 들어 증가률이 높아지고 있음 (11%)

17

## 가계대출의 국제비교

- 가계대출을 거처분소득의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 9위로 155.4%(2010)임. 이는 OECD 평균 136.5%에 비해 높음
- 가계대출을 GDP 대비로 비교하면, 한국은 세계 12위로 85.0%(2010)임. 이는 OECD 평균 77.2%보다 높음

18

## 5. 자본자유화와 국부의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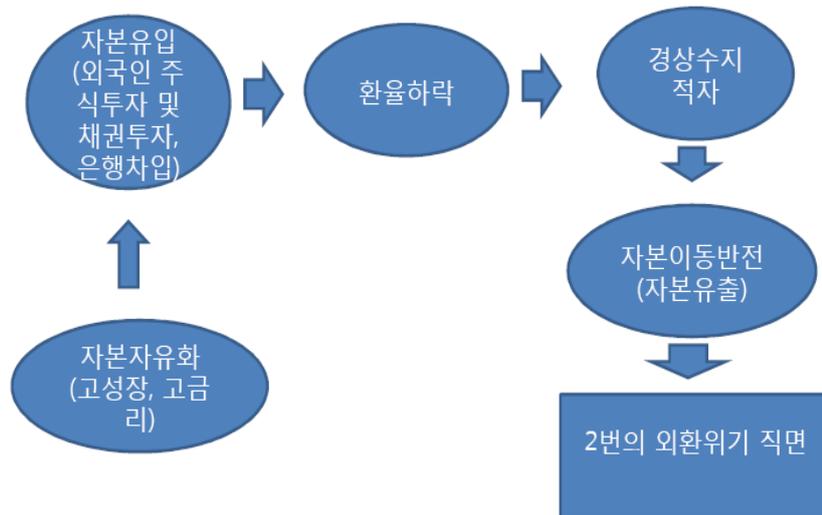
19

### 한국 자본자유화의 특징

- 자본자유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
  - 원화의 국제화 이전에 시도
  -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과 높은 금리 : 과도한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 단기외채 증가의 구조화
  -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자유화 (자본유입자유화에 초점) : 선진국은 경상수지 흑자시기 자유화 (자본유출에 초점)
  - 외환보유고 부족
  - 효과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20

## 자본자유화와 구조적 외환위기



21

## 중국의 대응전략

- 고성장 필요, 고금리와 높은 주가수익률
- 자본자유화 유보
-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고정환율제도 실시
- 높은 외환보유고 보유 (3조 달러)
- 위안화 국제화 시도 : 잘못된 정책 : 자본자유화와 같은 효과 :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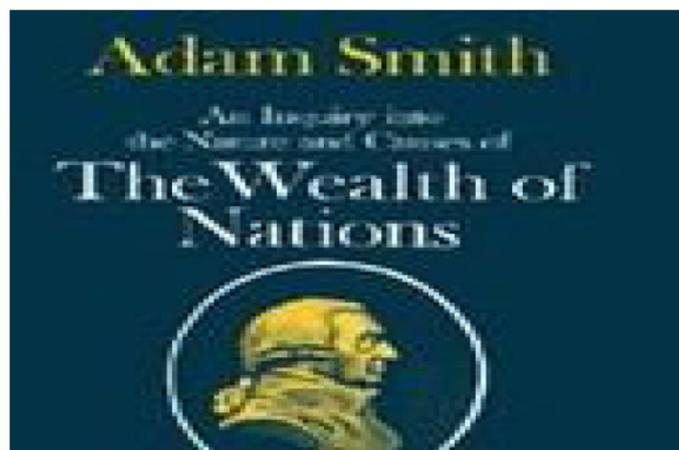
22

## 미국의 대응전략

- 세계적 불균형(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및 일본과 환율조정 시도 : 중국반발로 실패 가능성
- 일본(1985년)과 한국(1998년)의 경우 미국은 자본시장개방으로 대일,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일본 20년 불황, 한국 성장률 정체 경험
- 중국에도 같은 전략 : 위안화 국제화나 자본자유화 압력 높임
- 아시아 역내 환율전쟁

23

## III. 국부의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24

## 1. 자본자유화에 적합한 경제정책 필요

- **한국 경제학의 부재 : 한국여건에 맞는 경제정책 선택 필요 : 정부개입 필요**
  - 평등을 선호하는 국민성을 간과 :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효율성을 강조)으로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 실업과 조기퇴직 : 기업부채 ▶ 가계부채 ▶ 국가부채
  - 독과점시장구조와 과도하게 견제하려는 의지로 경쟁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음
- **자본자유화라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 잘못된 정책선택**
  - 1993년 자본자유화 : 비교환성 통화와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과 금리를 가진 국가가 자본자유화할 경우 : 통화정책의 한계와 자본이동의 반전을 고려해야 함

25

## 한국 경제학의 정립필요

- **지나치게 강한 경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제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 복지와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로 들어감 : 강한 이익추구 동기 존재
  - 대부분 시장구조 : 독과점구조
  - 과도한 경제하려는 의지로 경쟁시장도 이익집단을 구성 독과점같이 행동
- **비대칭정보가 많은 금융업의 감독 강화해야**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 도덕적 해이 줄이도록 감독 강화

26

## 자본자유화 시대에 적합한 경제정책 수립필요

-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
  - 금리정책의 독립성 낮아짐
- **금융감독정책 강화 필요**
- **외화유동성 확보 및 과도한 외화유입 규제 필요**
- **자본자유화로 적정환율에서의 괴리 (misalignment)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필요**

27

## 외화유동성 확보 필요

- **비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있어 교환성 통화를 가진 국가와 위기이론 및 방지대책에 있어 차별화 필요**
  - 교환성 통화국가 : 외환의 수요측면에서 위기 발생 : 환투기
  - 비교환성 통화국가 : 외환의 공급측면에서 위기 발생 : 자본유출과 같은 자본이동의 반전
- **대책도 차이가 나와 함**
  - 교환성 통화국가 : 핫머니 규제
  - 비교환성 통화국가 : 외화유동성 확보체제구축

28

## 외화유동성 확보체제 구축

- 외환보유고 확충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 양국간 혹은 다자간 통화스왑협정 체결
- 지역 외화유동성 협력 강화 : CMIM
- IMF의 국제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체제구축
-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억제
- 원화의 국제화 추진

29

## 환율정책의 방향

- 적정환율 유지해야 함 (최소한 경상수지 180억 달러 유지해야)
-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고환율정책 필요
- 내수경기는 저환율 정책으로 부양되기 어려움 : 현시점에서 구조적으로 내수경기가 좋아지기 어려움
- 일본 엔화환율 상승에 관심가져야 : 한국 수출급감 우려
- 환율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함(저금리, 고환율 정책 조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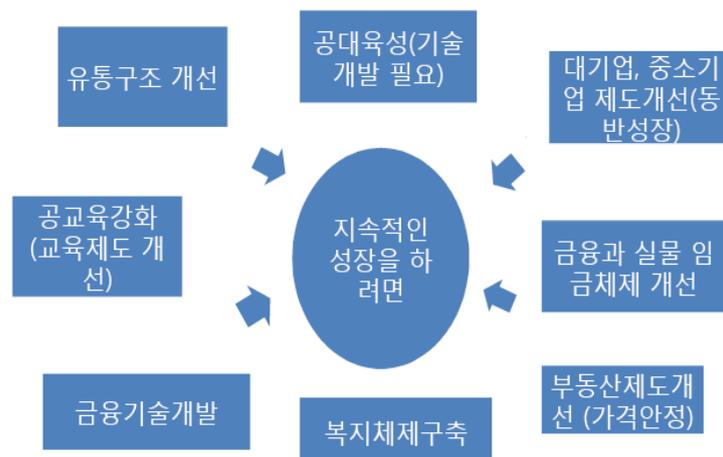
30

## 2.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대책방안

- 노사분규 억제를 위한 연금체제 구축
- 식탁물가 안정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단절
- 과학기술경쟁력 향상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 고용확대
- U턴 제조업 우대정책으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

31

## 제도 개선해야



32

### 3. 과학기술경쟁력 높이고 제조업 부활해야

- 과학기술 인력 우대정책
- 과학기술 인력 교육비 지원
- 실물과 금융의 임금격차 해소
- 박사과정 해외유학 권장
- 제조업의 안정적 고용
- 제조업과 금융업 균형 맞추어야

### 4. 출산율 높이고 노동생산성 높여야

- 출산 장려금 지급
- 보육 양육비 지원
- 공교육 정상화로 낮은 교육비 실현
- 고령인력 활용
- 재교육훈련 강화
- 질 높은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 5. 가계부채 연착륙

- 1,100조원의 가계부채 연착륙 시도 : 저금리로 부실 막아야
-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가계부채를 제도권으로 흡수 : 햇살론 등
- 부동산 가격 붕괴 막아야

35

## 6. 금융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부유출의 원인

- **과도한 외국인 금융투자 허용**
- **금융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해외자산 운용 손실 :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미흡**
  -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윤을 장기적인 금융기술에 투자하기보다 임금과 배당으로 나누어 가짐
  - 금융업의 독과점으로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 미흡
  -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36

## 금융업과 서비스업 발전방안

-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 외국인 채권투자 및 은행의 외화차입 규제 (채권소득세 및 은행세 부과 필요)
- **금융인재 양성에 투자확대**
  - 금융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비중 확대
  - 민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시 BIS 비율 외에 교육훈련비의 비중을 장기건전성 지표로 고려

37

## 국부창출의 방법

-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창출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 기술력을 통한 국부창출 : 과학기술 발전
- 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창출
- 금융투자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창출
- 서비스 수출을 통한 국부의 창출

38

## 7. 양극화 해소대책

- 선택적 복지지출 확대
- 식탁물가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낮추어야
- 의료서비스에 대한 복지 확충
-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 확충
-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
- 외환 및 금융위기 피해야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 8. 새로운 성장전략 구축해야

-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의 중국이전을 대비해야
- 과학기술인력 우대하고 양성해야
-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고 신 성장전략 세워야

■ 주제 2

# 생애맞춤형 복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





## 박근혜정부 복지: 국정목표와 연관성

3

역대 정부의 국가비전 및 국정지표 박근혜 정부 내용은 인수위 1차 인이어서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안은 달라질 수 있음.

|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
| 정부 명칭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  |  |
| 국정이념         | -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참여민주주의                                     |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실천이념)                      |  |
| 국정비전         | 신한국 창조                               | 제2의 건국   |  | 선진일류국가                                       | 함께 행복한 100% 대한민국   |
| 국정목표 (지표)    | 깨끗한 정부<br>튼튼한 경제<br>건강한 사회<br>통일된 조국 | 참여민주주의, 총합안보, 제2경제도약, 국민화합, 21세기 지식사회, 남북 화해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 섬기는 정부<br>활기찬 시장경제<br>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 안전사회 구축<br>지속가능 성장<br>국민의 삶 향상<br>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br>정부 역량 강화 |
| 국정원리 (핵심 가치) |                                      |  |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  | 민생, 공생, 진정성  |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국민행복 7070 : 중산층 비중 70%, 고용률 70%**

## 박근혜정부 복지: 맞춤형 복지국가

4

### 대선공약 : 편안한 삶

(단위: 억 원)

|                                  |         |
|----------------------------------|---------|
|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 23,205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46,410  |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18,200  |
|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28,420  |
|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8,000   |
|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 468     |
|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 632     |
| 기초연금의 도입                         | 146,672 |
|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 11,339  |
| 합계                               | 283,346 |

## 박근혜정부 복지: 맞춤형 복지국가

5

### 대선공약: 보육·장애인·주택 등

(단위: 억원)

|                           |         |
|---------------------------|---------|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168,187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19,600  |
|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 32,487  |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1,508   |
| 장애인 복지                    | 9,448   |
| 렌트푸어 대책 2: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3,720   |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2,066   |
|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 7,348   |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1,728   |
|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 7,007   |

## 박근혜정부 복지: 재원조달 계획

6

### >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규모

(단위: 조원)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재량지출 7% 일괄축소        | 4.9  | 10.2 | 10.6 | 11.1 | 11.6 | 48.5 |
| 지출 구조조정 대상 7% 추가 감축 | 0.0  | 2.5  | 2.3  | 2.1  | 2    | 8.8  |
| 실효성 점검 대상 2% 추가 감축  | 0.0  | 1.6  | 1.6  | 1.7  | 1.7  | 6.6  |
| 기타 지출절감             | 0    | 2.3  | 2.3  | 2.3  | 0    | 7    |
| 재정지출 축소 소계          | 4.9  | 16.6 | 16.9 | 17.2 | 15.3 | 71   |

### >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규모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비과세·감면 축소/정상화 | 1.4  | 3    | 3.3  | 3.5  | 3.8  | 15   |
| 세정강화로 탈루세금 축소 | 4    | 5.6  | 6    | 6.3  | 6.7  | 28.5 |
| 금융소득 과세 강화    | 0.01 | 0.8  | 1.1  | 1.2  | 1.3  | 4.5  |
| 세수효과 소계       | 5.4  | 9.4  | 10.4 | 11   | 11.8 | 48   |

### > 복지행정 및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복지행정 개혁 | 1.9  | 2    | 2.1  | 2.2  | 2.4  | 10.6 |
| 공공부문 개혁 | 1    | 1    | 1    | 1    | 1    | 5    |

## 인수위 복지공약 쟁점 1: 기초연금

### 인수위 기초연금 파장

- (1) 국민연금 기금으로 재원일부 조달
- (2)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불지급
- (3)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 제도개선의 기본원칙

- (1)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제고
- (2)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구축
- (3) 국민연금제도 안정성 불침

**기초연금 개념도**

현재: 기초노령연금(9만7000원) + 국민연금 = 소득·재산 70% 지급

공약안: 국민연금 + 소득배례연금 = 기초연금(20만원) = 소득·재산 100% 지급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연금 수급 현황**

|           |                          |                      |
|-----------|--------------------------|----------------------|
| 국민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수           |
| 142만8400명 | 20만2200명                 | 535만6800명(100%)      |
| 26.7%     | 3.8%                     | 국민연금 직역연금 못 받는 69.5% |

※ 65세 이상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 100% 기준

###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방안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
|---------------------------------------|---|
|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소득 하위 70%: 기존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9만7000원)+소득·가입 기간 따라 0~92만7100원 차등 지급 |
| 소득 상위 30%: 기초연금 미지급 원칙, 소액이라도 불지 검토 중 | 소득 상위 30%: 기존 국민연금+소득·가입 기간 따라 0~92만7100원 차등 지급                 |

※ 소득 하위 70%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상위 30%는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 인수위 복지공약 쟁점 2: 4대 중증질환 100%

### ▶ 새누리당 대선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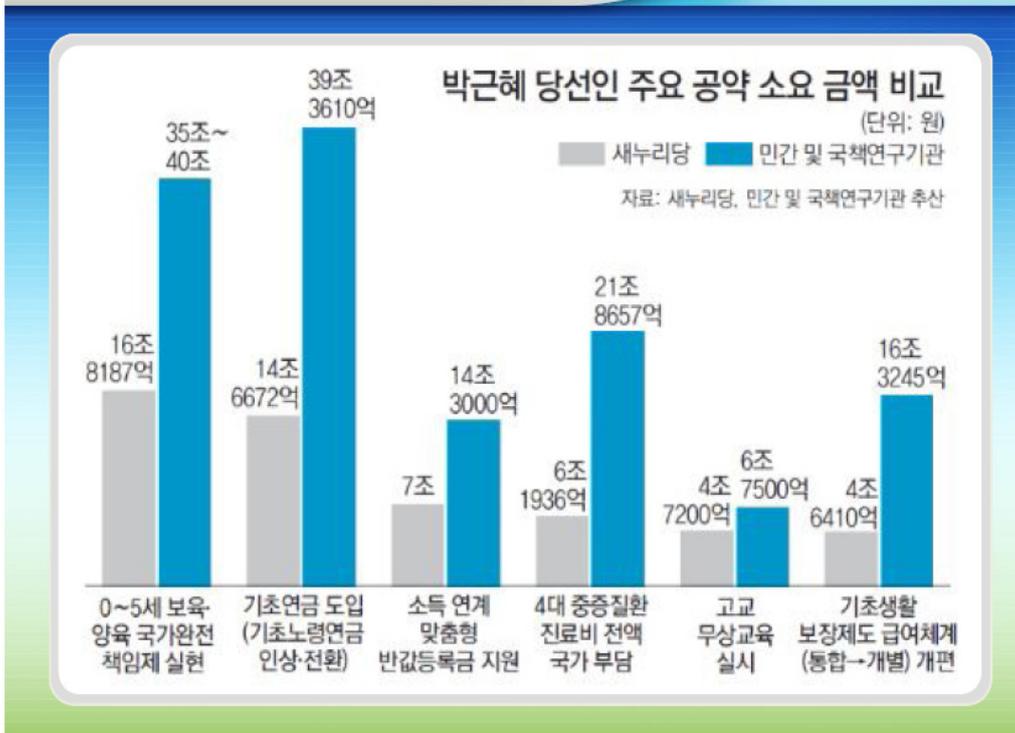
-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8조4802억 원이며 이 중 6조3913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 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 원을 커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 내년부터 4년 동안 21조865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
-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암 21.3%, 심장질환 19.9%, 뇌혈관질환 19.1%, 희귀난치성질환 11.7%로 계산한 뒤 여기에 과거의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
- 선택진료비, 4인 이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정

### 인수위 복지공약 쟁점 3: 재원조달 가능성

9



###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건

10

#### 복지재정 증가

- ▶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10.95%, '08년)은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OECD평균: 23.7%).
-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10.8%)은 OECD국가 중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증가율(4.9%)의 2.2배로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

#### 총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연평균 증가율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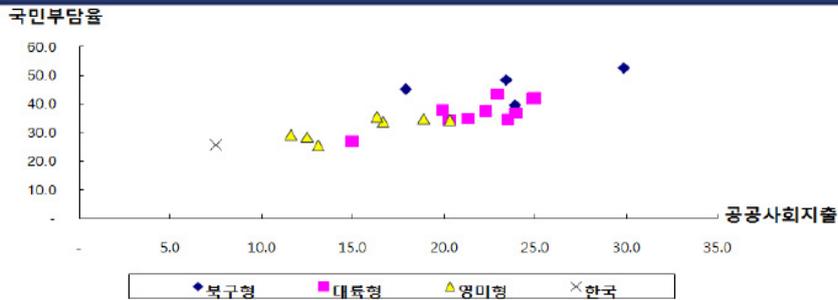
##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건

11

###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 ▶ 한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공공복지지출이 낮음.
-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공공복지재정지출이 높을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짐.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70%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 대비 8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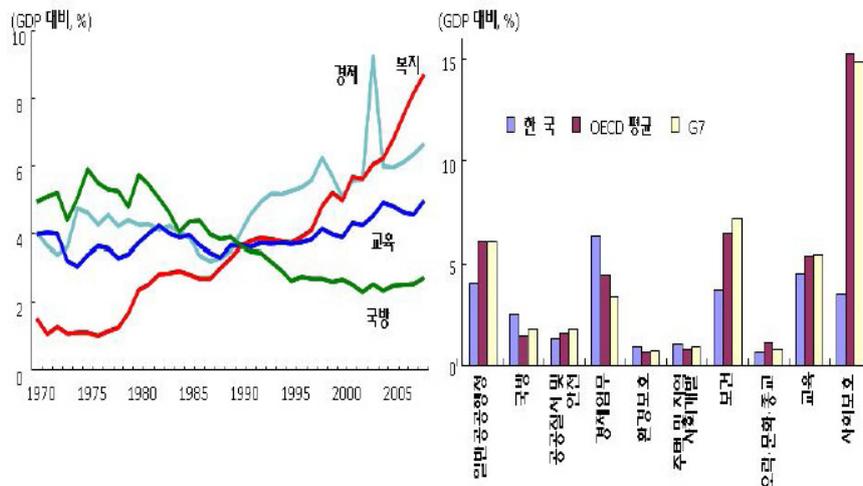
### 1만8천불 소득대의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율의 관계



##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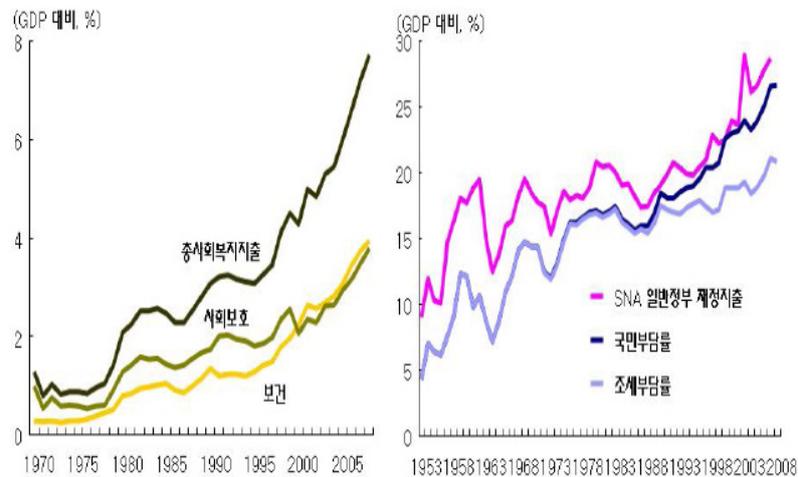
### 정부지출 구조의 변화와 OECD 비교



##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건

13

###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 변화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14

### 1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과 부담

- ▶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
  -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에 의한 복지부담 증가
  - 건강보험 등의 재정위기가 급속고조와 정부책임 증가 가능성
- ▶ **남북한 대립 혹은 통합 모드 어느 쪽이나 재정부담 증가**
  - 대립의 경우에는 국방비 등의 증액 필요
  - 화해 분위기 조성과정에서 분담금은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
  - 중간모드에서도 통일대비 기금 적립 필요성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15

2

### BIG 정부 V.S. SMALL 정부 :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 ▶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 ▶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 새로운 재정지출 수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 ➔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16

3

###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 ▶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 2011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26.3조원, 급여지출은 10.4조원 15.9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ding-out
  -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3.2%로 사상 최저, 선진국에 비해도 낮은 수준
  
- ▶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 증가
  
- ▶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17

4

###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 중심으로 전환

#### ▶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 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18

5

### 국가부채 종합관리

#### ▶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가열

-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에 대한 적용
  -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에 대한 적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지출 통계 한계
  - 중앙정부 지출 예산 역시 정보의 공개성 측면에서 한계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재정정책적 의미 제고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19

### 6 잠재적 국민 부담을 관리 필요

####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 ▶ 각종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의 조정 필요성

- 현재 절반이상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세금안내는 사람이 다수자가 되면 재정팽창 통제의 어려움 증가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20

### 7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20% 이상 초과

-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구조로는 한계에 봉착 전망

#### ▶ 새로운 재원은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함

- 개방경제하에서는 세부과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발생시킴
-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세목 및 세율 조정은 바람직 하지 않음  
소수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절차 반드시 필요

##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방향

21

### 조세구조로 본 재원조달의 방향성

#### ▶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의 수입이 작은 편이나
- 재산세 수입은 큰 편

#### 항목별 수입

(단위: GDP 대비, %)

|         | OECD 평균 |      |      |      |      | 한 국  |
|---------|---------|------|------|------|------|------|
|         | 1965    | 1975 | 1985 | 1995 | 2006 | 2006 |
| 개인소득세   | 7.0     | 8.8  | 9.7  | 9.4  | 8.9  | 4.1  |
| 법인소득세   | 2.2     | 2.2  | 2.6  | 2.8  | 3.9  | 3.8  |
| 사회보장기여금 | 4.6     | 6.7  | 7.2  | 8.6  | 9.1  | 5.6  |
| 재산세     | 1.9     | 1.9  | 1.7  | 1.9  | 2.0  | 3.5  |
| 일반소비세   | 3.8     | 4.3  | 5.4  | 6.2  | 6.8  | 4.5  |
| 특별소비세   | 5.7     | 5.2  | 5.3  | 4.5  | 3.9  | 4.0  |
| 국민부담    | 25.5    | 29.4 | 32.7 | 34.8 | 35.9 | 26.8 |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2

비전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장애·노령·재해·  
사망 등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보장

#### 사회안전망 체계화

- 맞춤형 복지체계 확립
- 사회보염역할 재정립
- 최저보장-적정 보장 이원화

#### 생애주기 노동·보건·복지 통합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 생애주기별 건강보장
- 노동-복지의 연계 통합

#### 고용창출성장 기여복지구축

- 고용우선복지 체계
- 시장기능의 활용 체계
- 사회재의 가치 극대화

####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정보화 등의 최대한 활용
- 수요자 중심 통합 관리
- 관리 이전비용의 최소화

####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 복지자원의 효과적 확보
- 사회주체간 역할 재정립
- 가족기능지원 사회보장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3

### 가) 사회안전망 체계화

- 선별적·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 구축
-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 사회보험료 납입능력 부재에 따른 광범한 사각지대의 축소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필요
- 사후적·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
-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4

### 나) 생애주기적 노동·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 구축
- 평생에 걸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정비
-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
-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5

### 다)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
  -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함.
- 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사회적 후생 증대
- 공공재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경쟁 및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
  -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의 낭비를 줄임.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6

### 다)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
  -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함.
- 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사회적 후생 증대
- 공공재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경쟁 및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
  -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의 낭비를 줄임.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7

### 라)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 중복적 급여와 제도 통합
-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統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
- 노동, 보건, 복지의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요자의 노동, 보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히 통합하여 비용효과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1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2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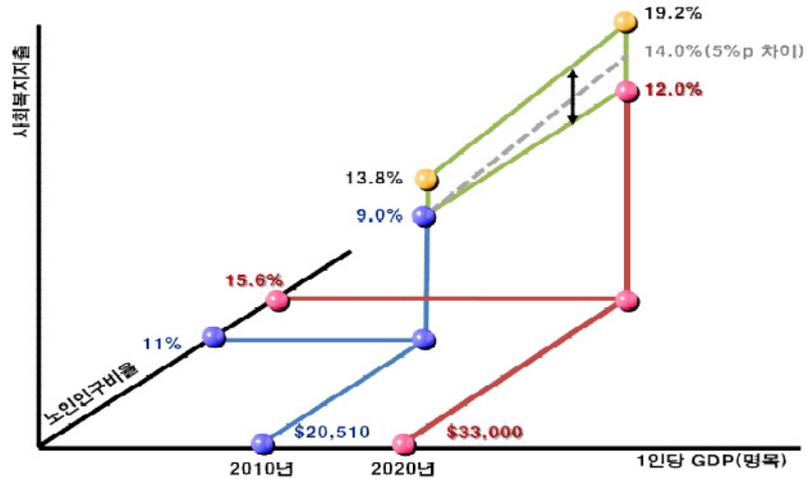
### 바) 복지재정지출의 적정 관리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GDP의 9.0% 수준이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현재의 격차(약 5%p)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2%p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이 가능할 것(GDP 대비 14% 수준)으로 예상됨.
  -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GDP의 5%p 정도 상향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지출이 GDP의 2.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은 GDP의 0.5~1.0% 수준으로 예측
- 보육, 가족 등에 대한 지출은 2020년경에도 GDP의 0.5% 선으로 전망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DP의 1%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 등 기타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GDP의 0.5~1% 정도 지출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29

2010~2020년 적정 복지재정 지출



주: 1) 201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510(2,379만원, 한국은행 추정), 노인인구비율은 11%이며, 이를 통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13.8%로 나타남(회귀분석).  
 2) 202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3,000, 노인인구비율은 15.6%임. 이를 통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하면 19.2%임(회귀분석)

## 맺는 말

30

- ▶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수지 회복 노력
    - 재정위기 대응방안으로 연금개혁 등 복지분야 개혁조치 실시
    -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적 부담 증대
  - 남유럽 복지국가의 실패사례, 고령화사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일본 사례, 영국 등 유럽 복지국가의 개혁사례 등
- ▶ 복지시스템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
  - 복지는 교육과 고용 그리고 분배구조를 포함한 경제 시스템과 밀접한 유기적 관계 형성
- ▶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 국민경제적 부담 최소화, 실현가능한 단계적 재원 계획 구상
  -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 개혁 병행

## 맺는 말

31

- ▶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 선택 필요
  - 조세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자원조달방식에는 한계 존재
  -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하는 전략수립 필요
- ▶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 필요
  - 복지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어도 이를 충당할 자원 조달 계획이 없으면 무의미
  - 2050년에는 복지확충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의 두 배 이상인 GDP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불가피
- ▶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성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
  -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주제 3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통합력 제고

이 종 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통합력 제고

2012.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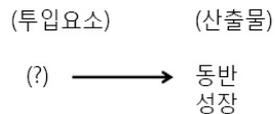
이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상생협력연구회 회장)

❖본 연구는 헤럴드 경제 및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위해 준비된 원고임.

### 1.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의미, 기업성장단계, 및 기업간 거래 단계

(1) 의미의 차이

◆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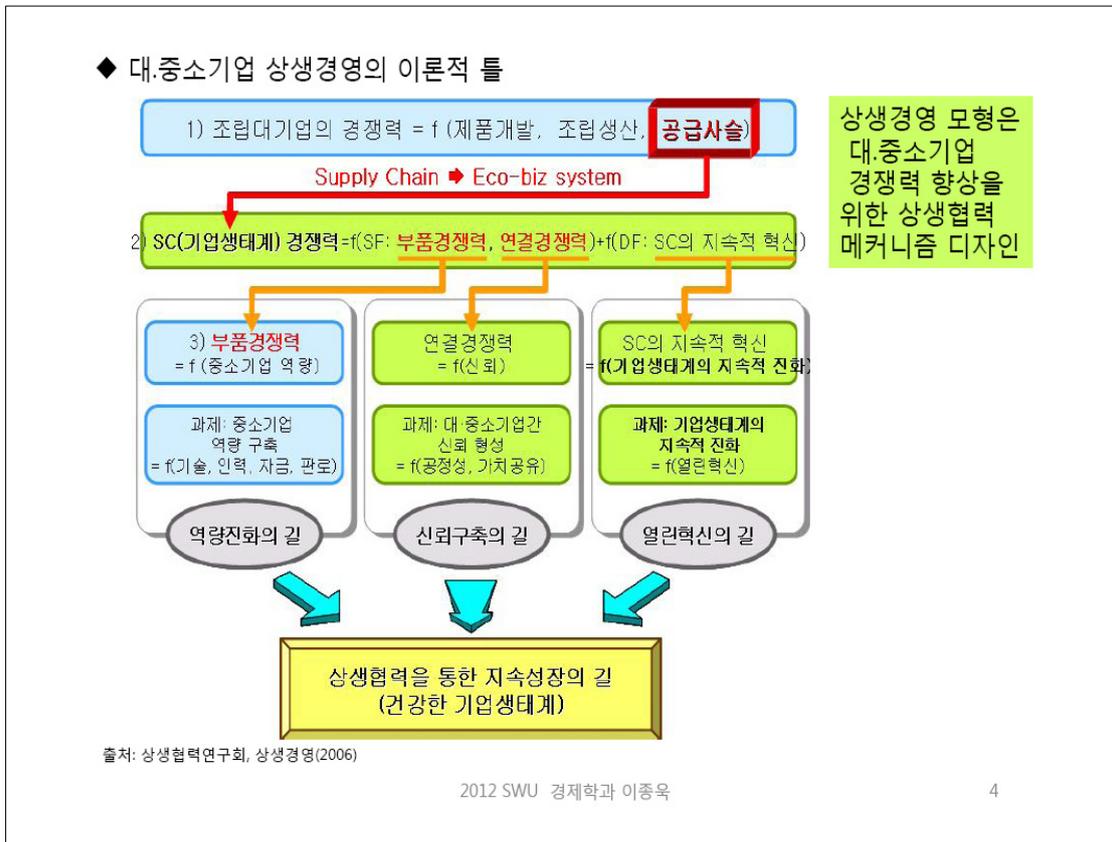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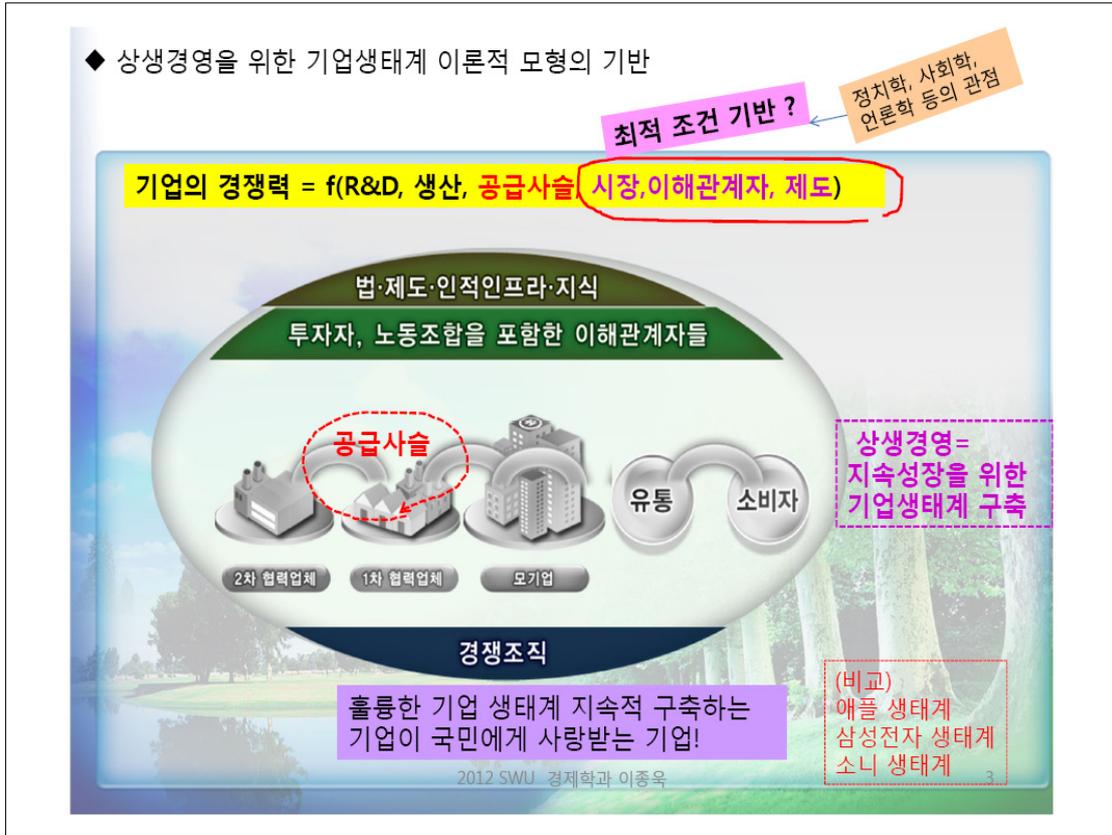


◆ 상생경영



◆ 2013년 이후 상생협력의 뉴패러다임

| 구분      | 올드 패러다임(Old paradigm)  | 뉴 패러다임(New paradigm)             |
|---------|--|----------------------------------|
| 동반성장 인식 | · 제로섬 갈등을 양산하는 네거티브적 인식  | · 플러스섬을 높이는 포지티브적 인식             |
| 동반성장 대상 | · 대기업·1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주력  | ·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         |
| 달성 목표   |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 · 기술력 제고를 통한 수출 촉진, 경제 성장        |
| 추진 방식   | · 동반성장에 획일적인 잣대 적용   | · 산업별·역량별 특성 반영되도록 대중소기업의 자율성 존중 |
| 추진 주체   | ·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 강조<br><small>자료:이종욱(2012),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small> | · 정부·국회·노사·국민·대·중소기업의 공동 노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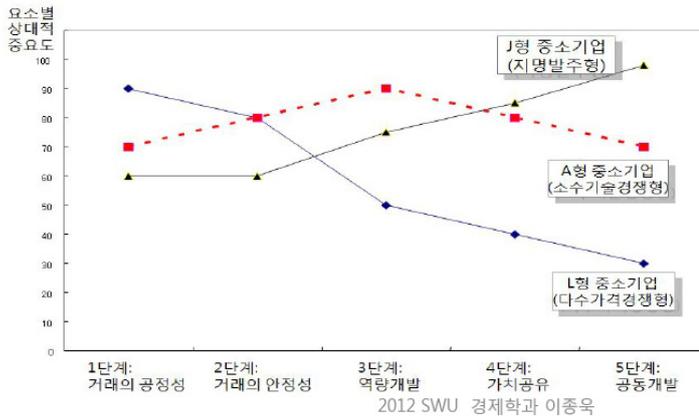


(2) 역량별 차이와 기업성장 역동성

◆ (현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역량평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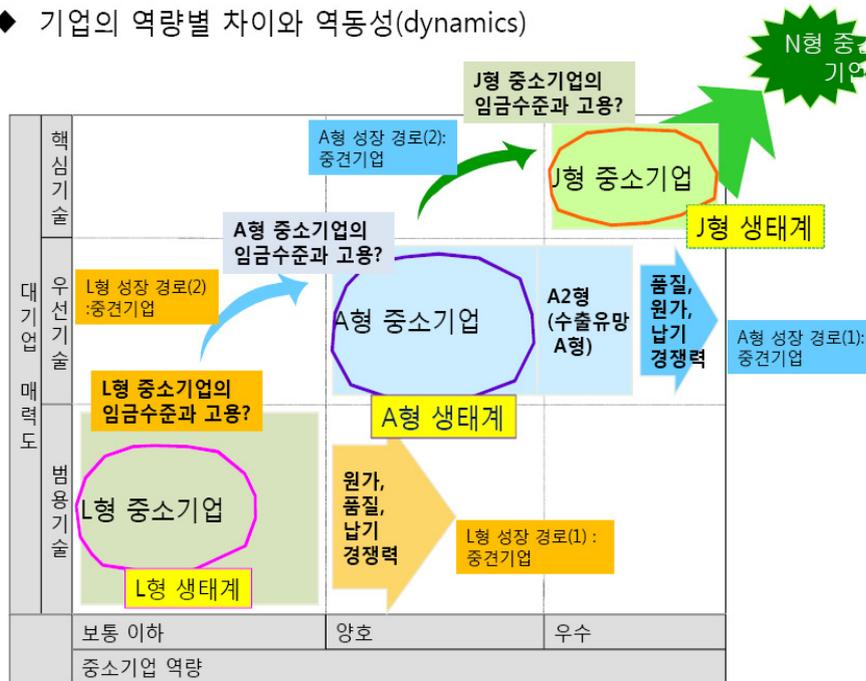
|    |              |              |               |                       |   |
|----|--------------|--------------|---------------|-----------------------|---|
| A사 | 핵심업체<br>(J형) | 협업업체<br>(A형) | 일반업체<br>(L형)  | -                     | 협력업체 중<br>J형 15%,<br>A형 20% 자격<br>획득 가능 |
| B사 | 전략그룹<br>(J형) | 협력군<br>(A형)  | 거래군<br>(일반부품) | 대사군<br>(거래중지<br>예상그룹) |   |
|    | 식품회사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자료: 이종욱, 김기찬(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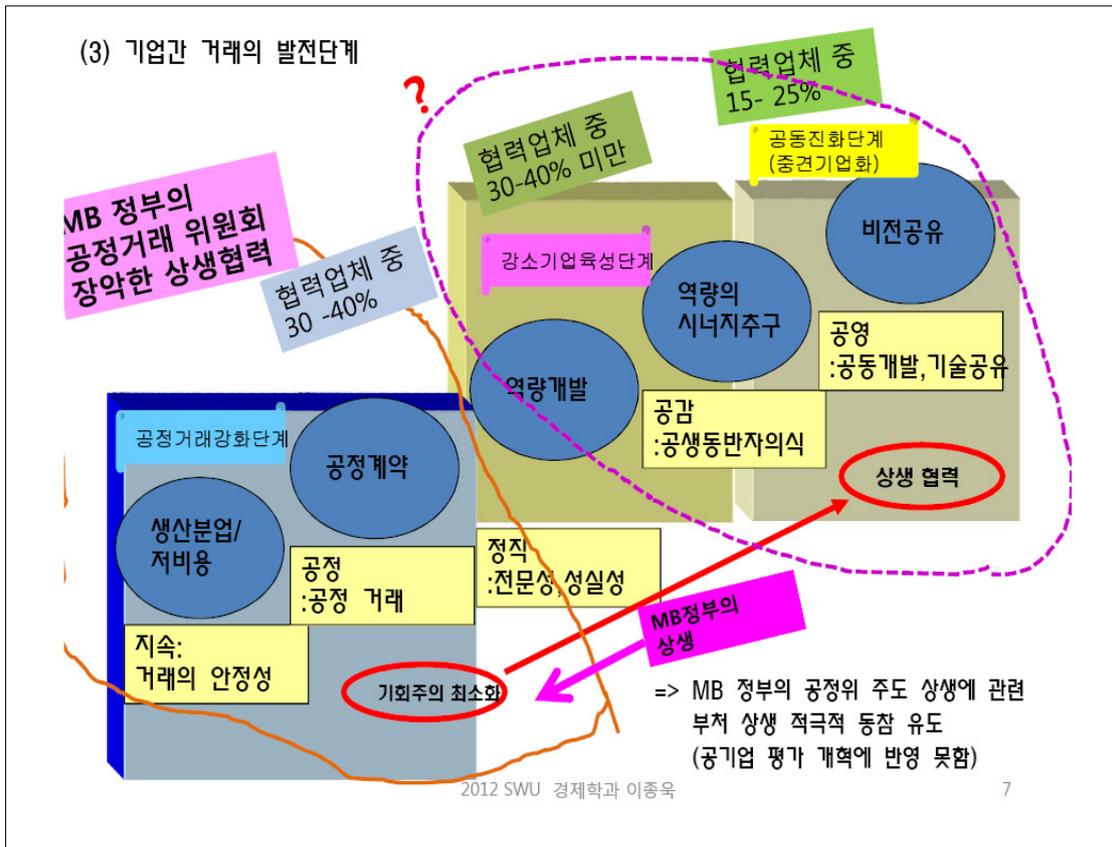
자료: 김기찬, 송창석, 이종욱(2006)

◆ 기업의 역량별 차이와 역동성(dyna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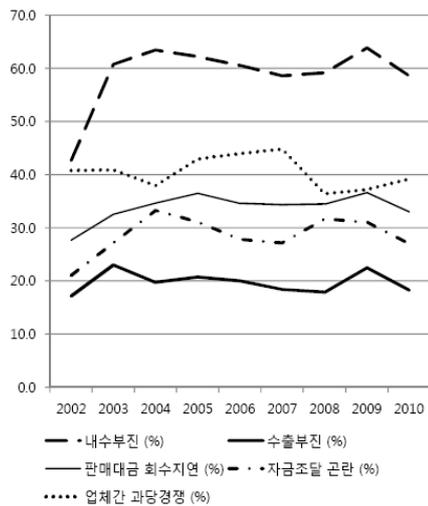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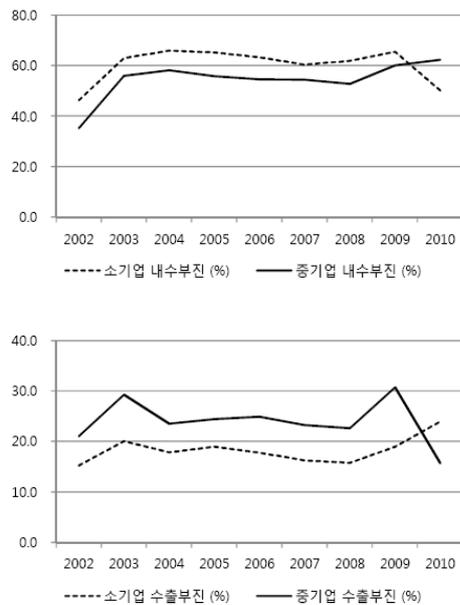


2.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대·중소 갈등과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확대 애로

(1) 중기 애로요인



자료: 중기중앙회



(2) 납품 단가 갈등요인

◆ 납품단가 인하 요인의 합리적 이해를 위한 서베이 조사

- 납품 기업간 가격경쟁이 납품단가 인하에 미치는 영향
- 경쟁구조 및 기술특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 구분    | 빈도  | 비율(%) |
|-------|-----|-------|
| 매우 크다 | 242 | 26.7  |
| 크다    | 248 | 27.3  |
| 보통    | 319 | 35.1  |
| 적다    | 43  | 4.7   |
| 매우 적다 | 56  | 6.2   |
| 전체    | 908 | 100   |

자료: 김승일(2008), 『대·중소기업 납품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연구원

|                        | 납품 단가 조정함 | 인상  | 일년 전과 동일 | 인하  |
|------------------------|-----------|-----|----------|-----|
| 업계는 철수하거나 파산하는 기업이 많다  | 3.4       | 3.4 | 3.0      | 3.8 |
| 경쟁사와 경쟁이 치열하다          | 5.4       | 5.3 | 5.1      | 6.0 |
| 속한 업계는 장수기업이 많다        | 4.7       | 4.9 | 4.5      | 4.2 |
| 대기업 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3.6       | 3.7 | 3.8      | 3.7 |
| 혼자만 가진 기술              | 4.5       | 4.4 | 4.6      | 4.3 |
| 원천기술                   | 4.5       | 4.2 | 4.5      | 4.4 |

납품단가 애로요인의 측정은 최고 = 7점(매우 그렇다), 최저 =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7단위로 나누어 얻은 응답의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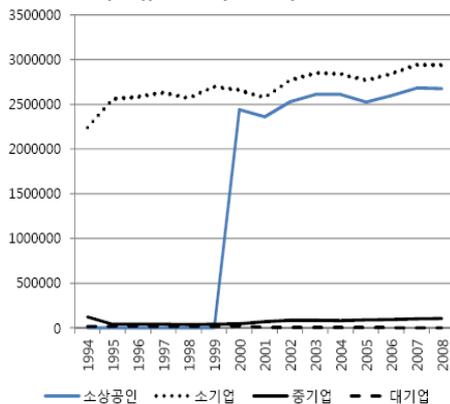
이종욱, 김기찬, 송창석(2009), 『납품가격결정구조 사례연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9

(3)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대 애로요인

◆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의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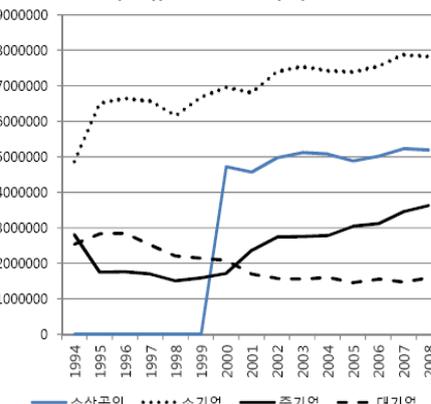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너무 높고, 사업체 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 높음
- 중소기업 성장에서 피터팬 증후군 심각(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되려고 하지 않음)
- 한국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수출에서 중소기업 기여도가 낮고 정책 및 정치 수혜의 내수 지향형

◆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사업체수) 88% 8.68% 3.43% 0.09%

◆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종업원수) 40%, 20%, 30%, 10%

(비고) 위 그림에서 소기업은 "소상공인(10인 미만)+소기업(10인 이상 - 50인 미만)"으로 정의됨  
2013-02-13 SWU, Chong O. R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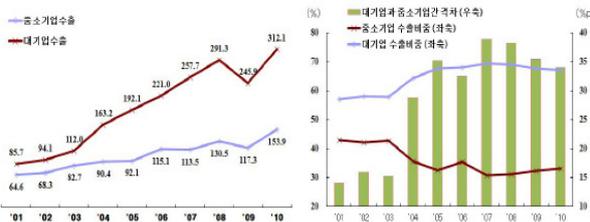
◆ "small is not beautiful, but small and competitive is beautiful"

- 사업체 수당 고용창출 능력을 보면, 소상공인이 가장 낮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고용창출 능력이 높아지므로, 고용창출 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함.  
=> 고용창출 관점에서 'small is not beautiful'이며, 작은 기업이 성장해야 아름답음.

|      | 사업체 수(A) | 고용(B) | 사업체당 고용창출 능력(B/A) |
|------|----------|-------|-------------------|
| 소상공인 | 88%      | 40%   | 0.45              |
| 소기업  | 8.68%    | 20%   | 2.3               |
| 중기업  | 3.43%    | 30%   | 8.74              |
| 대기업  | 0.09%    | 10%   | 11.11             |

자료: 2010년  
사업체 조사

◆ 한국의 중소기업 글로벌화가 부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비중에도 차이가 커져 가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동반성장이 국내시장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2008.4.24)에 따라 과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중 지원하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체계가 여러 기관(KOTRA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체계의 전문성 결여와 복잡 다기화로 수요자 니즈 무시하고 공급자 편의로 전환 됨.

3. 사회통합력 제고를 위한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동반성장)

(1) 상생경영(동반성장?)의 목표는 능력있고 열정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풀-푸쉬(밀고-당기고) 형

**한국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  
① 대한민국은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3조[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24조[소비자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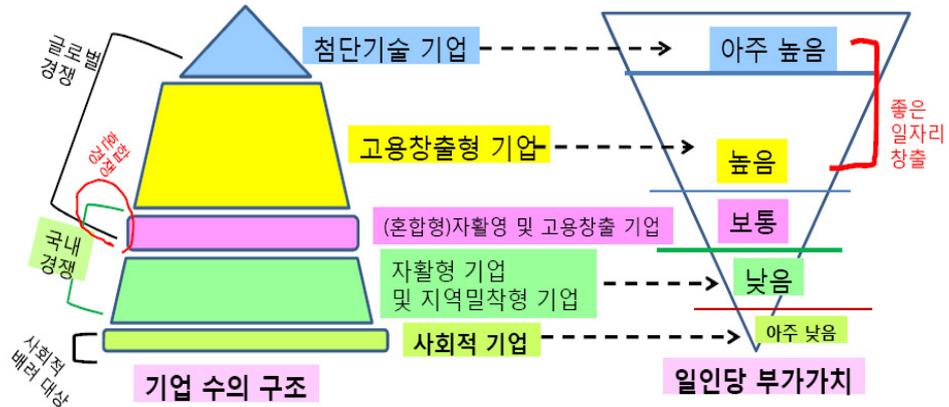
**한국의 중소기업 기본법**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중소기업 기본법**

2(a) 미국 민간기업 경제체제의 본질은 **자유경쟁에 있다** ... **경쟁의 유지와 확대는 경제적 복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정과 복지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및 잠재적 능력을 진흥하고 조성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공정한 부분의 중소기업에 할당되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정부는 가능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지원, 조언, 도움, 보호하는 것이다.  
2(b) ...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법 취지이다.

**(시사점)**  
1인당 GNI 증가하고 빈곤화 성장 방지  
=> 역량별 중소기업 육성과 한계  
=> level-up 성장으로 복지 개선, 시장경제 실패 보완

◆ 사회적 기업과 시장 경쟁형 기업의 특성 및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차별화 지원



-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 대기업 등이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육성함
- 자활형 기업은 품질과 생존의 성장단계 구분
- 혼합형은 시장규모, 생산성 및 고부가가치화에 의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잠재적 성장력 가짐
- 고용창출형 기업은 품질과 생산성 향상의 성장단계 구분
- 첨단기술 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의 성장단계 구분

2013-02-13

SWU, Chong O. Rhee

◆ 글로벌 경쟁 및 국내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종욱·박지윤(2009)의 독일 허든챔피언과 일본 교토식 경영을 한국의 대중소기업 사례 연구에 적용해 보면, 한국의 상생생태계 구축을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보고기업(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pull-push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 우선 지원

|    |                            | 추진력 |   |   |
|----|----------------------------|-----|---|---|
|    |                            | 상   | 중 | 하 |
| 미래 |                            |     |   |   |
|    | 대기업 pull 생태계 구축            | ●   |   |   |
|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push 생태계 구축    | ●   |   |   |
|    | 대·중소기업 pull-push 상생 생태계 구축 | ●   |   |   |
| 현재 |                            |     |   |   |
|    | 대기업 pull 생태계 구축            | ●   |   |   |
|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push 생태계 구축    |     |   | ● |
|    | 대·중소기업 pull-push 상생 생태계 구축 |     |   | ● |

자료:이종욱·박지윤(2009)

14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2) 상생경영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중기지원 차별화

- ◆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한국 중소기업 성장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글로벌 시장 지향, 최고 기술 등이므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필수.
-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성공하려면 히든 챔피언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및 품질 역량이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투입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도록 전환되어야 함.

|       | 제품기획 | 신기술개발 | 제조능력 | 사업화  | 전체평균 |
|-------|------|-------|------|------|------|
| 2003년 | 68.1 | 71.0  | 78.4 | -    | 73.6 |
| 2005년 | 73.9 | 74.6  | 78.2 | 75.0 | 75.8 |
| 2007년 | 73.1 | 74.3  | 78.1 | 73.7 | 74.6 |
| 2009년 | 73.2 | 73.9  | 77.2 | 73.8 | 74.7 |

- ◆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3.57%(2009년 기준)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지만, 한국의 기술무역 적자상태가 확대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입 대비 사업화의 성과가 매우 낮음  
 ⇒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은 연구인력 부족, 유사연구개발사업 난립, 과다 지원경쟁, 특정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로 인해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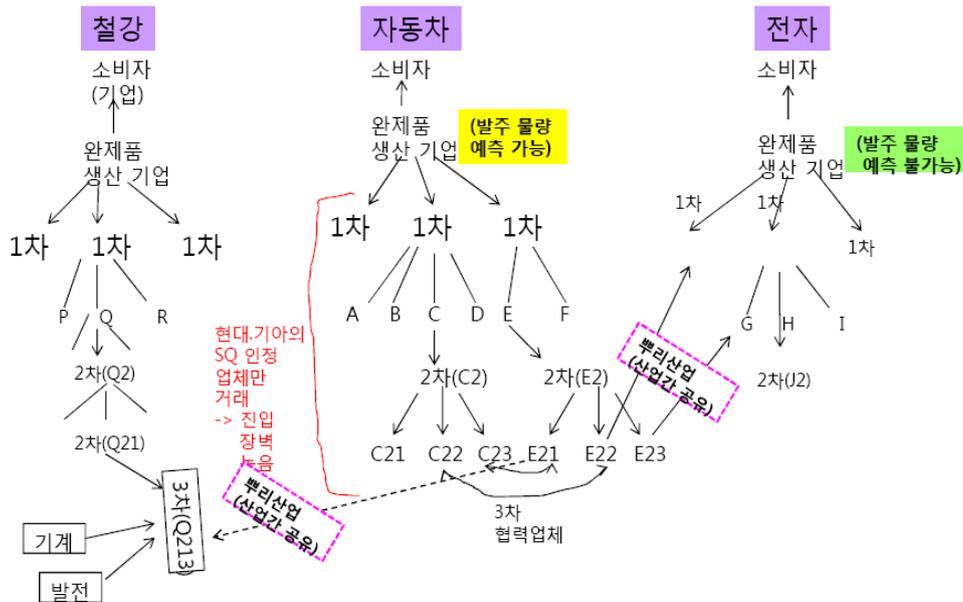
| 구분                         | 1개            | 2개           | 3개           | 4~5개      | 6~9개      | 10개 이상    |         |
|----------------------------|---------------|--------------|--------------|-----------|-----------|-----------|---------|
| 복수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 (2010년) | 중소기업 수 (개, %) | 4,611 (69.2) | 1,182 (18.1) | 433 (6.6) | 234 (3.6) | 151 (2.3) | 7 (0.1) |
|                            | 연구개발 지원액 (%)  | 41.5         | 24.3         | 15.8      | 13.1      | 4.6       | 0.7     |

2013-02-13

SWU, Chong O. Rhee

(3) 일괄적 동반성장지수 평가 보다 산업별 특성 반영한 상생경영과 자율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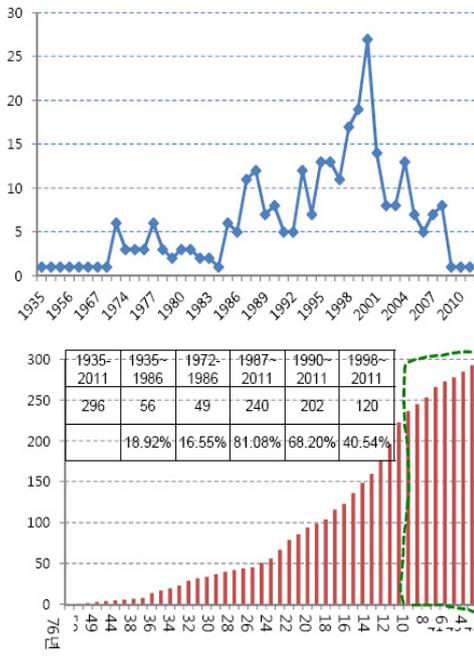
- 업종별 공급사슬 경쟁구조 차이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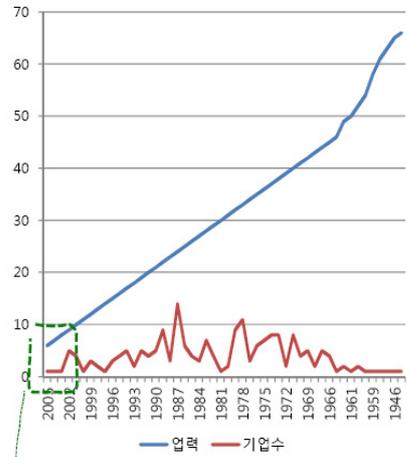
16

▪전자 협력업체 창업 연도별 기업 수 및 업력



자료: 2011년 기준(김기찬,이종욱,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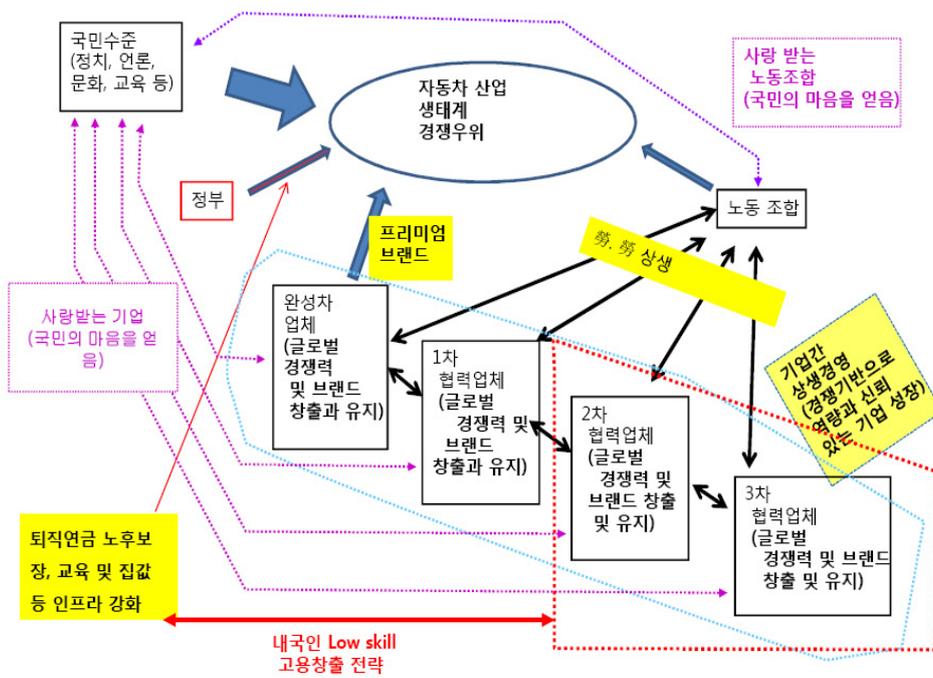
▪자동차 협력업체 창업연도별 기업 수 및 업력



10년 미만 업체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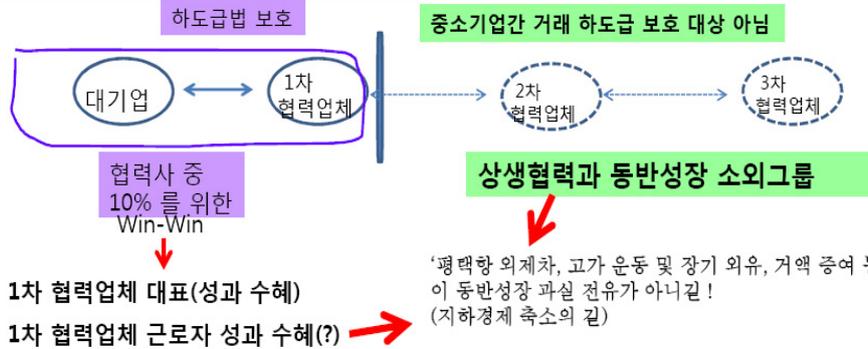
자료: 2012년 기준 (김기찬 외, 2012)

(4)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과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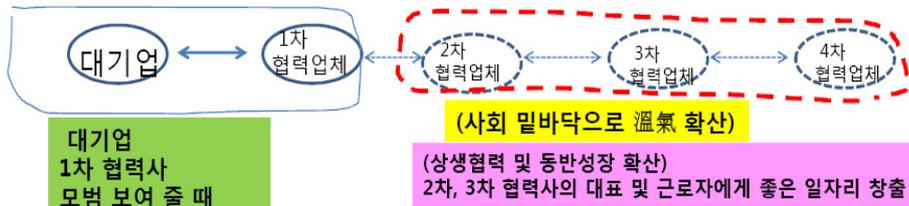


- ◆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한계 인식, 2,3차 협력업체 확산을 법의 부재 속에,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평가 기준 강화로 확산 추진

▶2005 -2012년 상생협력의 수혜자?



▶2013- 미래 ( 상생협력 성과 확산 가로 막는 벽 )을 없애야 함



2013, KASBS, Rhee, Kim and Park

19

(5) 납품단가 해결을 위한 완제품 업체의 내부 목표 가격 설정 및 완제품의 프리머엄 확대 그리고 정부 역할로 신뢰의 시간 지평 확대해야 갈등 완화

- ◆ 협력업체 납품가격 결정에서 입찰의 최저가격에 의존하여 2차, 3차 가격 인하 협상 관행 지양하고, 내부적 목표 가격 설정하여 중기 중앙회의 3不 비난 벗어나 하며, 이런 가격이 2차 및 3차 협력업체 노사관계 임금협상에도 고려되면 상생협력의 공생 실현 됨.  
=>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실현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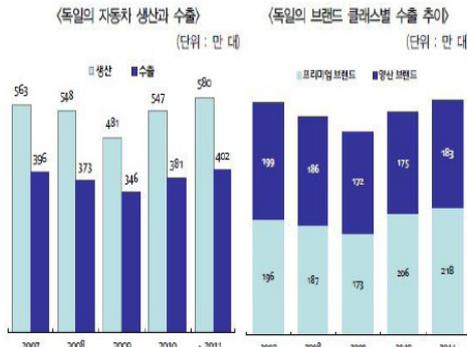
도요타의 1차 협력업체 기후차체는 협력업체를 골프 경기에 비유하여, 협력업체 선정 및 납품가격 결정을 설명함. 협력업체는 싱글 되어야 하며, 이틀테면 80타 되면 영업이 의 체로이지만 그 보다 타수를 낮출 수 있으면 협력업체의 영업이의 증가함.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발간 "2007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2007)

- ◆ 2차,3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에 대한 원성이 높으면, 완제품 업체와 1차 협력업체는 불평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합리적 기준 제시해 나가야 하며,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게 해야 함.
- ◆ 완성품 업체의 성장으로 1차, 2차, 3차 협력업체는 그 동안 희생했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신뢰관계에 대한 믿음의 시간의 지평이 축소되고 있어, CSV 차원에서 완성품 업체와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간 신뢰에 대한 믿음의 시간 지평을 확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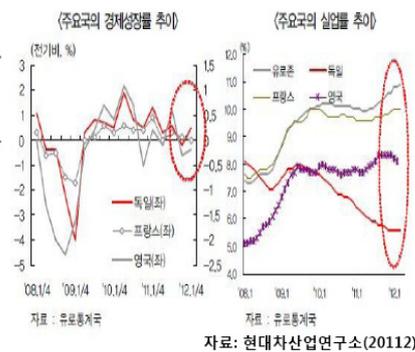
2012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 level-up성장 추구하고 복지 개선의 독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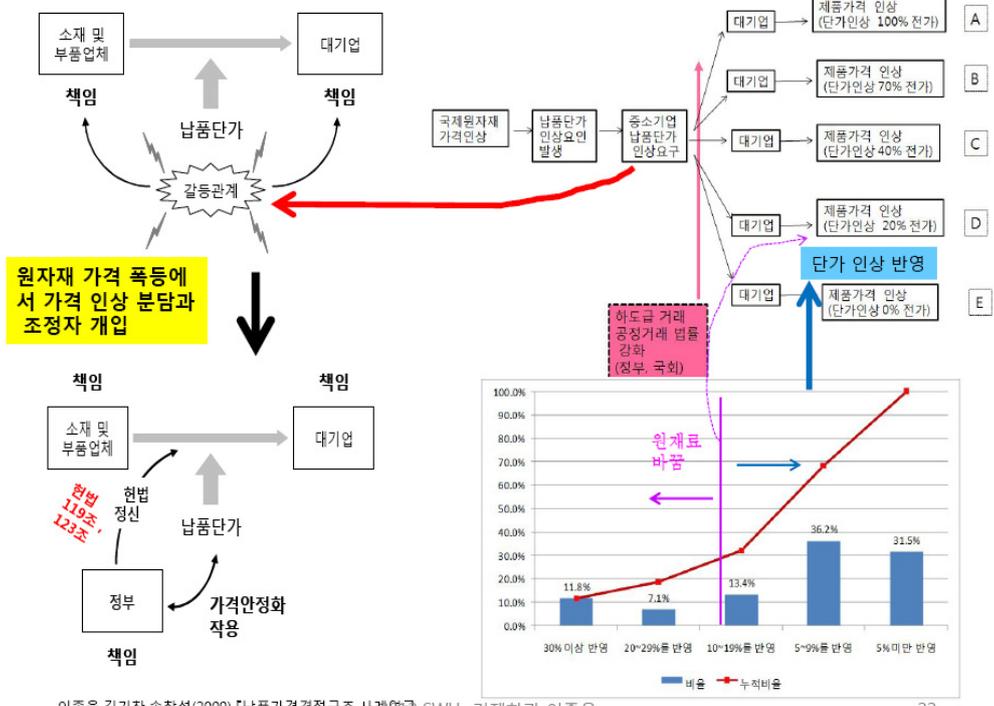
독일 제조업 경쟁력 하락은 독일 정치인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독일 중도 좌파 슈뢰더 개혁이 보수파 메르켈까지 연결되는 국가경제를 장기적 안목으로 끌고 가는 정치

경제안정화 목표 (성장, 고용, 실업, 경상수지흑자)



자료: 유로통계국, 현대차산업연구원(2011.2),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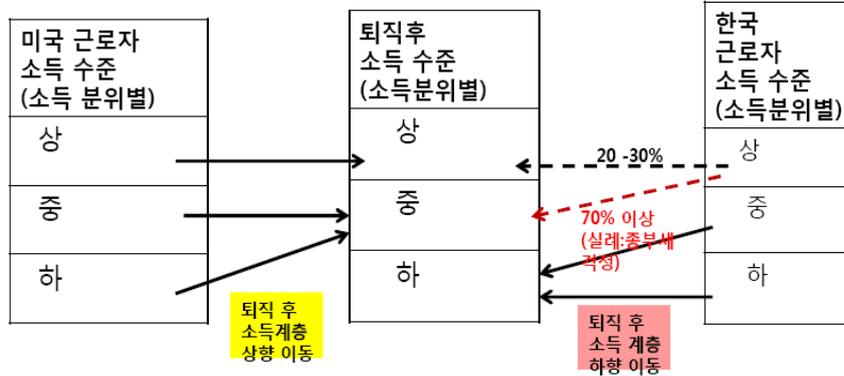
◆ 동반성장 강요하고 뒷집지고 서 있는 정부



이종욱, 김기찬, 송창석(2009), 『납품가격결정구조 사례연구』 SWU 경제학과 이종욱,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6) 장기근로 해소 이후 근로자의 퇴직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기업 성장기반 강화**

- ◆ 생애 근로시간의 피크 타임에 자녀 양육 및 퇴직소득 안정 달성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 위해 강력한 큰 폭의 임금 인상 요구 및 장시간 근로 선호
- ◆ 미국 근로자와 한국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분위별 이동 비교



- ◆ 퇴직후 소득 안정을 위해 노-노 상생 이끌 수 있는 **근로자 선별적 복지 강화 지향**
- ✓ 퇴직 후 연금제도 향상을 위한 선별적 복지 지향
- ✓ 2, 3차 기업 밀집지역의 공교육 강화 및 근로자 임금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강화
- 고소득 싱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가 (육아 및 저출산 재원 활용)
- 각종 특별세를 사회보장세로 전환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23

**(7)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모형의 평가 및 비판과 지속적 발전**

- ◆ 동반성장에는 평가 지표 개발, 평가를 통한 여론 형성으로 동반성장 강요만 있고, **이론적으로 공감되는 동반성장 연구가 없으며**, 상생협력에서는 민간주도 상생협력 연구회가 있지만 **민간주도 연구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음.**
-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공진화로 국민경제에 유익한 조직적 노력이라든가, 집권자의 유일한 업적이 아니면 **정권을 넘어 연속 하는 것을 싫어하는** 속 좁은 한국의 대통령도 문제임.  
(독일의 좌파/우파 정권인 **공감은 '기업경쟁력 유지'**이므로, 2001년 독일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고고실업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파 정권 슈뢰더 총리의 2003년 3월 노동, 복지, 재정, 경제활성화, 교육 및 훈련의 개혁을 위한 'Agenda 2010' 실행, 차기 정권을 잡은 우파 정권 메르켈 총리의 'Agenda 2010' 지속 실행)
- ⇒ 투입된 자원의 동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권을 넘어 연속되게 하지 못하는 속 좁은 대통령 및 전문가들의 노력 부족이 **더 큰 문제.**
- ⇒ **더 더 큰 문제는** 관변 학자들의 integrity 및 지식 부족

2012 SWU 경제학과 이종욱

24

# ■ 토론

토론 :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진영 (고려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교수)  
정희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 ■ 토론 1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1. 국민행복시대의 경제부문 핵심과제

- 경제양극화 해소
  - 기업경쟁력은 가치 창출하는 이해관계인의 네트워크 경쟁력
  - 경제민주화의 중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공정사회의 구현
  - 기회의 창출과 능력에 맞는 공정한 기회제공
  - 가치창출한 성과분에 맞는 공정한 이익배분
- 중산층의 복원
  - 가계부채 과다, 사회안전망 미비
  - 생계형 자영업자문제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 2. 중소기업 취약점과 정책방향

- 영세성, 종속성, 내수지향성
  - 독자적 기술개발능력 확보 + 글로벌화
- 중소기업 정책대상별 차별화된 접근
  - 육성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구축, 기업생태계 조성 (자금, 기술, 인력, 판로의 고도화)
  - 보호대상 :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자생력 강화 +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제한
- 정책평가의 강화와 중소기업지원 DB구축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성 측정과 지원효과 이력관리 system
  - 각종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feed-back과 정책의 효율화

### 3. 동반성장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평가
  - 동반성장 추진체계 구축 (동반성장위원회)
  -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시정노력
- 향후 과제
  -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집행력부족 : 정부 개입의 한계
    - \*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에서의 FC업계의 반발과 갈등
  - 중-중(1차협력업체-2,3차협력업체)간 동반성장 과제 발굴
  - 대기업-중소기업간 가치창출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기술개발, 마케팅, 인력 훈련등) 및 대기업의 기업문화 확산

### 4.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

-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과다/경제 양극화/조기퇴직과 고령화
- 고용이 수반되는 지속성장경제 : 기술창업 및 중소기업이 주도
  - 내수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식서비스업 육성, 공정거래
  - 수출 : 부품소재기업의 수출기업화, 적정 환율유지
  - 투자 : 대기업 주력산업의 핵심역량 투자, 해외진출기업 유턴
- 일자리 창출
  - 이공계인력의 교육시스템 개혁 및 우대
  - 기술창업활성화, 해외취업 확대, 시니어인력의 활용도 제고
  -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의 확대 및 보완
  - 기업의 인력양성시스템 참여 및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우대
- 정부의 역할 : 창조경제를 위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유도와 기술창업활성화
  - 창조적 기술에 대한 평가와 민간금융의 투자활성화 생태계 조성

■ 토론 2

김진영 (고려대 교수)

세 교수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택하신 주제가 모두 시의적절하고 주제의 원인 분석과 정책 제안 모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에서 언급된 이슈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점들과 보충하고 싶은 이슈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관하여는 지식이 부족하여 주로 첫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성장 잠재력 하락 원인과 제고 방안 (김정식교수)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적, 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만으로 이전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움
  - World Bank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1년 한국의 일인당 실질 GDP는 미국의 1968년의 그 것과 비슷한데, 2002-11년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약 3.6%의 성장률을, 1961-68년 기간 동안 미국은 약 3.4%의 성장률을 이루어냄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은 전후 경제 boom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이 더 높았음
- 경제성장의 둔화는 생산성 증가의 둔화라는 공급 측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의한 것이기도 할 수 있음 (또 다른 성장률 하락의 원인)
-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의 적절한 정책수단들이 제시되었는데 몇 가지 더 보태자면

(1) 과학 기술력을 높이는 것 매우 중요

-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중의 하나는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

-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계열의 우수 인력이 풍부하였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됨
- 60년대 이후 80년대 까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을 선호하였고 이 분야에서 많은 대학 졸업자 배출
- 90년대 들어서 발생한 큰 변화의 하나는 우수한 이과 쪽 인재들의 의과대학으로의 쏠림
-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은 이들 우수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의료산업의 개방, 바이오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

(2) 출산율 높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

- 이를 위하여 출산 장려금 지급은 적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보육 양육비 지원은 좋은 정책일지 의심
- 어린 아이의 교육은 가족, 특히 부모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데 보육 양육비 지원은 부모의 교육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뒤에 다시 보충)

(3) 양극화 해소

- 현재 소득 양극화 현상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적절한 해소 대책을 세울수 있음
- 현재까지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은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사람은 유리해졌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은 반면 반복적인 white-collar 일을 하는 중간 계층의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 창출 보다는 생산성 높고 컴퓨터 기술의 타격을 덜 받는 특수한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생애 맞춤형 복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김용하교수)

- 한국 복지정책에 있어서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 앞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었던 고령사회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

공되는 복지프로그램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보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에 16조, 출산장려에 5조 예산 책정
-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0-5세의 아이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실증연구 결과 (James Heckman argues that the most crucial investments a country can make are in the first five years of life, and that parenting matters as much as income in forming a child's cognitive ability and personality, particularly in the years before children start school.)
- 0-5세 시기는 지식습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 인내심 등 나중에 학교와 사회에서 지식습득과 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습득
- 이 같은 인성 습득이 보모에게서 배워질 것인가?
- 차라리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에 쓰고자하는 예산을 출산장려금이나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듯
- 일반적으로 복지문제에 관한 토론은 재정 건전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복지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에 관한 토론이 더 필요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노동, 저축, 출산 등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따라서 경제 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 ■ 토론 3

문진영 (서강대 교수)

### 1. 이중(二重) 과제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

#### 1.1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

근대적응(適應)과 근대극복(克服)이라는 한국 사회 일반의 이중과제론은 복지국가의 건설에도 관철된다.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란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는 이미 21세기 형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분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의 면모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복지의 후진성에 기인하고 있다. 즉 20세기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원칙인 국민기본선(the principle of national minimum)마저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1세기 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건설(old risks, old welfare)'과 동시에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대응 모델의 구상과 실천(new risks, new welfare)'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꽤나 까다로운 이중적(二重的)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 1.2 새로운 위험의 등장배경

- 세계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저성장
- 노동운동의 약화

#### 1.3 새로운 위험의 등장

- 양극화(소득, 자산, 교육, 직종, 기술 등)
- 저출산 고령화
- 가족구조의 변화

#### 1.4 21세기 한국 복지국가의 담론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
- 소득분배 논쟁: 1차적 분배 or 2차적 재분배
- 근로연계논쟁: welfare or workfare
- 복지국가 논쟁: welfare state or social investment state?
- 빈곤 논쟁: poverty or exclusion?

## 1.5 중진국의 함정과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

## 2. 복지국가 건설의 방향: 이중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1 대선 과정에서의 복지담론

지난 해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복지국가의 전면적인 부상이다. 예전부터 친(親)복지 노선을 견지한 야당은 물론이고, 시장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여당에서도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사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공약하고, 이 공약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선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에 기대면서 표를 구걸하거나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통해서 표를 사는 구태의연한 정치보다는 훨씬 발전적이다. 더욱이 선거철 표의 향방에 극도로 민감한 정치인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정치적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복지영역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낙후된 영역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 2.2 복지국가의 적정 규모는?

하지만 선거기간에도 그리고 정권인수위가 활동하는 현재에도,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복지재정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선거기간에 약속하였던 복지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13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뢰를 정치적 키워드로 집권한 당선인의 성격으로 보아, 이번 복지공약은 예전처럼 헛된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훈수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우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과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규모는 GDP 대비 9.2%로 OECD 국가 평균(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칠레나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40년이 지난 2050년이 되어서야 2010년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한다고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반쯤 찬 술병을 보고, '술이 절반이나 남았다는' 낙관주의자와 '술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비관주의로 나누어지듯이, 복지 수준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놓고도 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상반되게 나온다. 우선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재정을 확대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현재의 남부유럽처럼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낙후된 복지의 수준으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합계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현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의 강화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복지를 통한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 2.3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놓고도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해석을 달리한다면,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일한 해법은 우리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던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복지대계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사회지출에 대한 총량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복지지출의 규모는 국가부채 및 경제성장률과 별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이 25%에 이르렀지만, 1980년대 이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되었고, 게다가 경제성장률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둘째, 복지지출의 규모보다는 복지지출의 내용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와 현재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를 비교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 국가의 복지지출을 크게 연금, 의료, 근로연령대 소득지원,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보면, 2007년 현재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네 개의 영역이 거의 동일한 수준(각각 GDP 대비 6% 정도)인 반면에, 남유럽 국가(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는 연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GDP 대비 11.2%) 반면에,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낮음(GDP 대비 1.6%)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복지재정이 확대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리라는 공포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역사는 오히려 복지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북유럽 국가가 복지재정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남유럽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형평성 있는 소득분포, 그리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물론 복지재정 규모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지출구성을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2.4 정부의 트릴레마와 복지국가의 방향

우리보다 한발 앞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고, 세계화에 따른 지식경제로 급격하게 이행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21세기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모순을 딜레마(Dilemma)를 넘어선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하고 있다. 즉 21세기 복지국가는 (1) 고용의 유지와 창출, (2) 평등의 추구, 그리고 (3)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고 이 중 한 가지는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평등지향적 소득정책을 펼 경우에 재정건전성을 담보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지향적 소득정책을 포기하고 고용의 창출과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면,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해져서 내수가 위축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안은 오히려 하나의 정책목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정책목표는 장기적으로 달성하도록 정책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하나의 정책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용의 유지와 창출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

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의 실업자와 취업대기자 그리고 기존의 자영업자를 대거 포섭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형평성과 균형재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a

#### 3.1 생애맞춤형 복지의 등장

새누리당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는 이미 현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는 올해(2013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이에 맞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추어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에서, 보편주의로 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구시대적인 선별주의를 채택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일종의 타협점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다.

#### 3.2 생애맞춤형 복지의 전제조건

-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욕구에 맞추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일생동안 지속되는 건강, 소득보장, 주거 등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보장(national minimum)이라는 반석 위에서 생애주기별 욕구를 충족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가진 전달체계가 튼튼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강, 요양,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민간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복지의 확대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빈곤의 고착화와 확대,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a가 필요하고<sup>1)</sup> 이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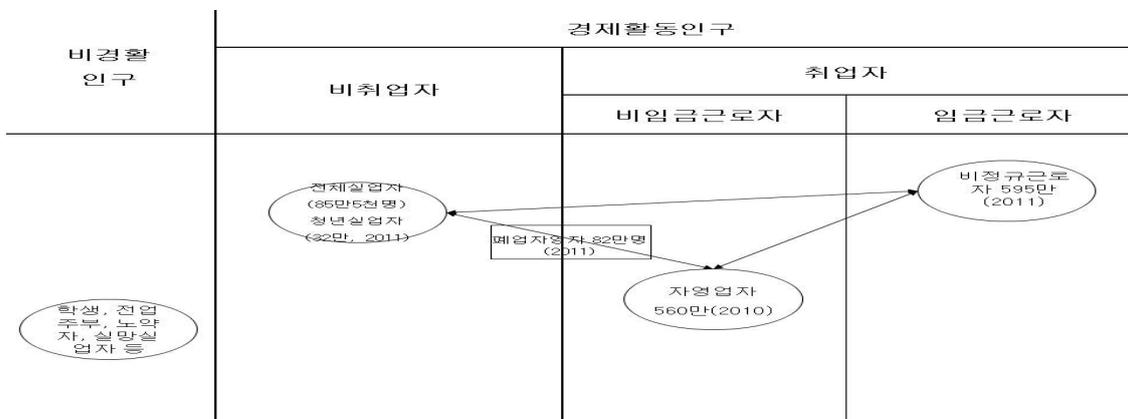
1) 물론 생애맞춤형 복지에도 사회부문 일자리 창출이 있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

3.3 한국 복지국가의 중심 고리: 사회적 일자리

● 한국 노동시장의 박탈의 악순환 구조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고통은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저소득층은 비정규직(595만명, 2011)과 자영업(560만명, 2010; 폐업 자영자 수 83만명, 2011) 사이를 반복하다가 실직자(85만5천명, 2011)로 전락하게 된다.

<그림> 노동시장 박탈의 악순환 구조



이들은 실직한 이후에 다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한 업체에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한다 하더라도 다시 실직에 빠지게 되는 박탈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극히 협소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경우, 비정규직과 소규모 자영업 그리고 실업이라는 악순환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실망실업자로 전락하여 평생 자립의 길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주된 목표는 이러한 저소득층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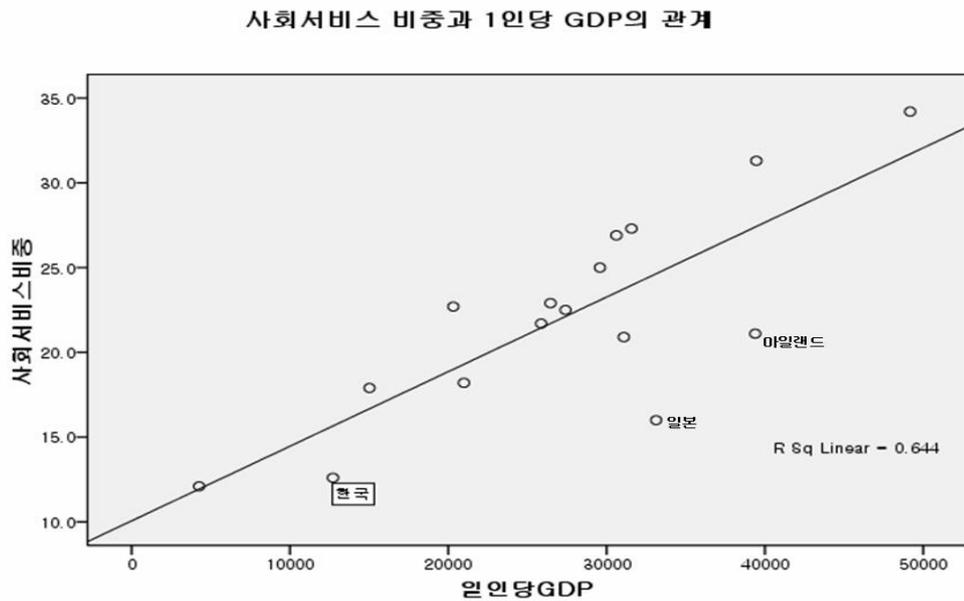
●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선진국일수록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이 높다. 즉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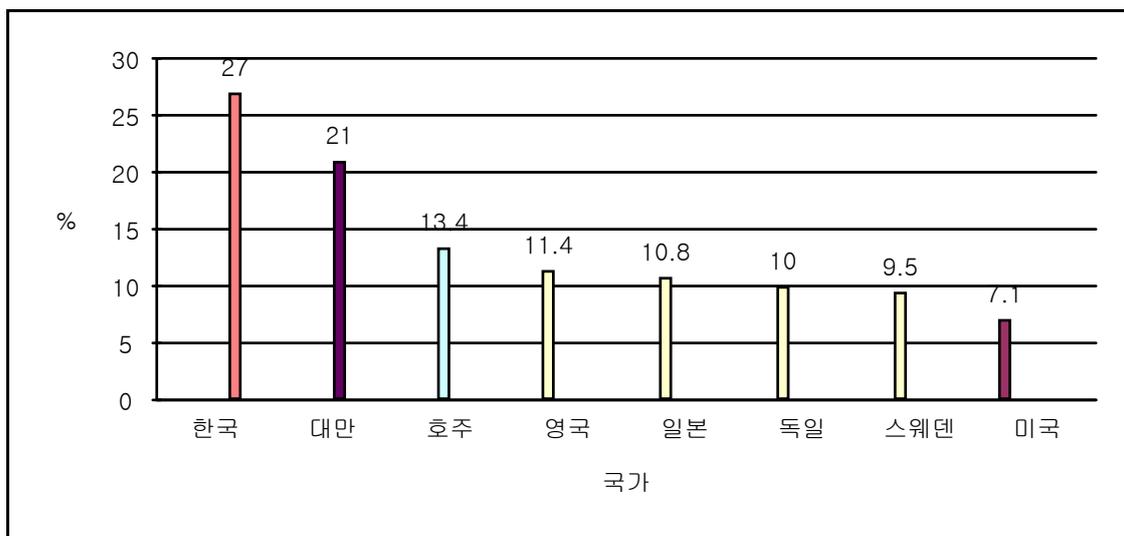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노르딕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형적인 영미권 모델인 아일랜드는 경제수준에 비하여 사회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사회서비스 비중과 1인당 GDP의 상관관계



<그림> 주요국의 자영업 비중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근대적 산업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진출로 인하여 높은 퇴출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차관 도입의 대가로 고용유연성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직장에서 퇴출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취업보다는 자영업 진출을 모색하였고, 준비되지 않은 진출과 자영업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높은 퇴출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고용구조를 볼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인원을 채우고,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감소시켜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인원과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swap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인 소득 양극화를 핵심으로 하는 계급양극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족의 해체 현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은 (1)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2) 사회양극화 현상의 완화, 그리고 (3)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4. 결론: 사회복지를 합의의 영토로 만들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복지는 실종되고 정치만이 남게 된다. 2년 전 한국의 정치지형을 강타하였던 무상급식 논란만 하더라도,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인 쟁점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 여부에 보수주의의 사활이 걸려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진보적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도 아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점심을 먹이는” 무상급식에 거창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국가재정이 파탄 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이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주변적인 성격의 복지 프로그램을 마치 한국 복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것은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무상급식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 유일한 방안은 사회복지를 이념의 쟁투장이 아닌, 이념의 비무장지대, 즉 합의의 영토(terrain of agreement)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전은, 어느 한 세력이 다른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은 아니었다. 복지국가는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서로의 공감대를 현실세계에서 넓혀가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다. 복지국가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세 가지 지주(支柱)인 국민보험제도와 무상의료제도, 그리고 무상교육제도는 각각 다른 이념적 신념을 지닌 양심적 지식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국민보험제도는 냉철한 자유주의자인 베버리지(W. Beveridge)에 의해서, 무상의료제도는 열렬한 사회주의자인 베반(A. Bevan), 그리고 무상교육제도는 온정적인 보수주의자인 버틀러(R. Butler)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복지국가는 태생적으로 이념적 투쟁이 아닌 이념적 조화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이후 '합의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게 된다.

21세기 한국에서도 복지국가의 건설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명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부르게 사회복지를 이데올로기 전장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좌우로 나뉘어 무한 투쟁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이데올로기의 비무장지대 즉 합의의 영토로서 편입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여야는 서로 비슷비슷한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온갖 해괴한 복지 브랜드를 개발하고는 선거 이후에는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여야의 복지공약에서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합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신사협정을 맺게 하고, 선거후에도 실현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일수록 합의의 영토가 넓고 비옥한 법인데, 이러한 합의의 영토를 기초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토론 4

정 희 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 <별첨>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 보고서: 경제주평 13-2
- 총     괄: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 작     성: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외



## Executive Summary

###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한국경제 재도약의 필요성** : 1990년대 6.5%,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7%로 급락했으며, 실질GDP 증가율도 지난 5년간 평균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한국의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분야별 '10+3'(대내10, 대외3)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먼저 **국내 관련 4대 분야 10대 정책**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분야1)과 관련한 ①내수기반의 확충(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②일류한국시대의 개막(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 인프라수출 활성화 등), ③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민관 R&D 역할 정립,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등) 등 3가지다. 둘째,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분야2)와 관련한 핵심 정책은 ④기업 생태계 글로벌화(대·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⑤서민·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 대형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화 등)이다. 셋째, '인적 자본 고도화'(분야3)와 관련한 핵심 정책은 ⑥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임금의 유연화, 실업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서비스 개방과 경쟁 촉진 등), ⑦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탄력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보이지 않는 여성 차별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등)를 포함한다. 넷째, '행복인프라 확충'(분야4)과 관련한 핵심 정책은 ⑧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교육 보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충, 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⑨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법치주의 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등), ⑩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등)다. 마지막으로, **대외분야의 '동북아 상생경제 구축'**(분야5)과 관련한 3가지 정책은 ⑪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3대 기본원칙 확립, 경제협력체 공고화 등), ⑫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동북아에너지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 관연결 등), ⑬글로벌 경제영토 확장(FTA허브, 해외자원 확보, ODA공여 및 역할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 **추진방안** :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와 같은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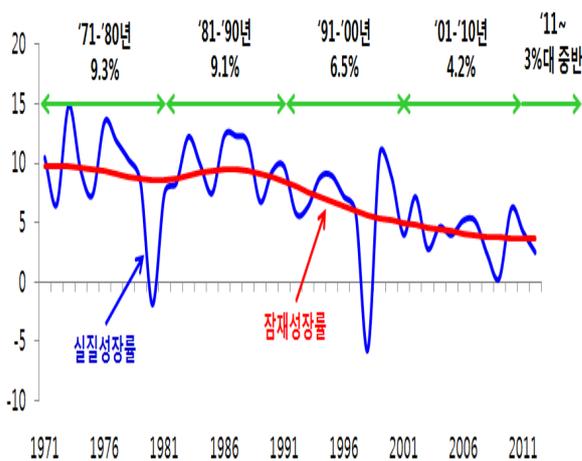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정책 제언 >

| 5대 분야 | '10+3' 핵심 정책과제  | 과제별 정책대안                    | 해외사례  |                               |
|-------|-----------------|-----------------------------|---|-------------------------------|
| 대 내   | ①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① 내수 기반의 확충                 |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br>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와 규제완화<br>부품소재산업의 신성장동력화<br>지역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 핀란드 서비스 혁신기술 프로그램             |
|       |                 | ② 일류한국시대 (Korea As No.1) 개막 |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br>5대 글로벌 New Top (5NT) 산업 육성<br>인프라 수출 활성화<br>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 일본 인프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
|       |                 | ③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관 R&D 역할 재정립<br>연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br>연구개발 금융 활성화<br>정책적 지원 강화                                      | 미국 잡스법 제정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       | ②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 | ④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제고<br>글로벌 동반성장 장려<br>중소기업 해외네트워크(코리아센터) 구축<br>히든챔피언 지원 체계 일원화와 멘토링 강화            | 독일 히든챔피언의 메카                  |
|       |                 | ⑤ 서민·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역모기지 활성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br>건전 서민금융기관 확충<br>대형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지역은행화<br>수요자중심 서민금융 확립 | 일본 제2지방은행의 성공적 변신             |
|       | ③ 인적 자본 고도화     | ⑥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    | 직무급 도입과 임금의 유연화<br>직업훈련 내실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br>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br>고용서비스의 민간개방과 경쟁               | 덴마크 활성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망         |
|       |                 | ⑦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 탄력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br>고학력 여성의 '유리천정' 제거<br>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수집단우대정책<br>인터넷대학강의(KOCW) 등 평생교육 강화    | 프랑스 휴가적치제도 / 미국 인터넷 대학강의(OCW) |
|       | ④ 행복 인프라 확충     | ⑧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 보육 교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대<br>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br>성장-복지-재정 연계모델의 정립                                    | 스웨덴 연금개혁과 지속가능복지              |
|       |                 | ⑨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 법치주의 확립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선진화된 시민의식  | 북유럽 높은 사회자본                   |
|       |                 | ⑩ 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 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br>전자정부 업그레이드<br>정보공개 확대와 정책제안 마일리지   | 미국 국가성과평가 위원회(NPR)            |
| 대 외   | ⑤ 동북아 상생 경제 구축  | ⑪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 3대 기본원칙(政經/民官/商惠 분리) 확립<br>정치적 신뢰 형성, 남북 경협체제 공고화<br>사회문화 통합기반 확충                                 | 중국-대만 정경분리와 경협활성화             |
|       |                 | ⑫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 및 협력 강화<br>남북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물류허브 추진<br>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 참여                              |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
|       |                 | ⑬ 글로벌 경제영토의 확장              | FTA 지속적 확대를 통한 FTA 허브 추진<br>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br>ODA 공여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                                  | 중국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

## 1. 한국경제 재도약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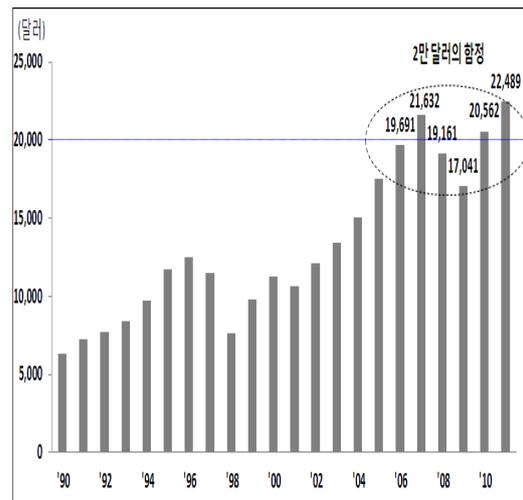
- (잠재성장률 급락) 장기 추세를 보면 1990년대 6.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3.7%까지 하락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 큰 과제로 대두됨
  - 1990년대 6.5%,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7%로 떨어졌으며,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
- (2만 달러 및 저성장 함정) 한국은 지난 2007년 처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5년 동안 2만3천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선진 23개국(2만에서 3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8.0년이 걸렸고, 선진 18개국(2만에서 4만 달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14.2년<sup>2)</sup>이었음
  - 한국은 지난 4년('07-'11년)간 1인당 GDP(명목)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그쳐, '2만 달러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3.7%)을 하회하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저성장의 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잠재성장률 급락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HP필터링을 이용.

< 2만 달러 함정 >



자료 : 한국은행.

2) World Bank의 'World Data Bank'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 중에서 3만 달러 경험국 23개국, 4만달러 경험국 18개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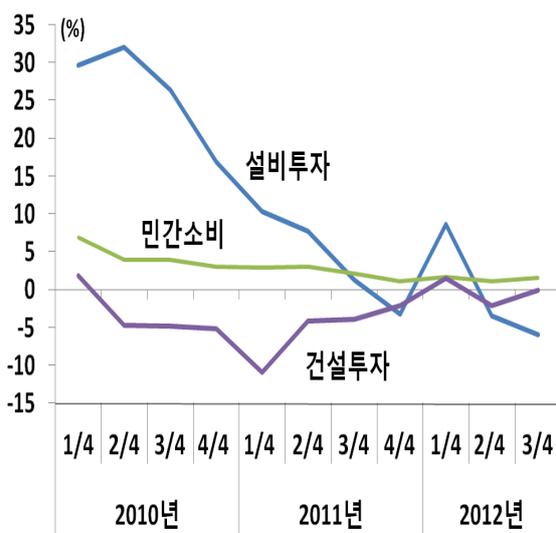
## 2.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달성되어야 할 5대 분야별 '10+3' 정책(국내10 + 대외3)을 도출하고, 각 정책별로 대안과 해외사례를 제시
  -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분야1)과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 ①내수기반의 확충: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②일류한국(Korea As No.1)시대의 개막: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인프라수출 활성화 등 ③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연구인력 확충, 민관 연구개발 역할 재정립 등
  -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분야2)와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 ④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대-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 설립 등, ⑤서민·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대형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화 등
  - '인적 자본 고도화'(분야3)와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 ⑥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 : 임금의 유연화, 실업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서비스 개방과 경쟁 등, ⑦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 탄력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Glass Ceiling)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등
  - '행복인프라 확충'(분야4)과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 ⑧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보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충, 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⑨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법치주의 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등, ⑩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등
  - '동북아 상생경제 구축'(분야5)과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 ⑪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3대 기본원칙 확립, 경험체제 공고화 등 ⑫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동북아에너지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관연결 등, ⑬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FTA허브, 해외자원 확보, ODA공여 확대 등

## 1) 내수 기반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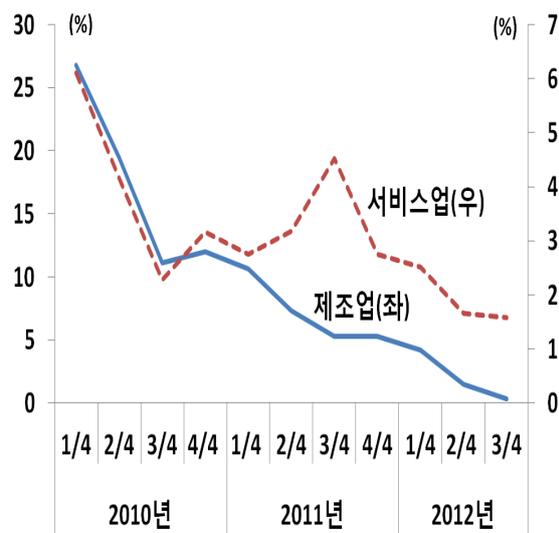
- (현황/문제점) 투자 및 소비가 최근 악화되며 내수 기반이 더욱 침체에 빠짐
  - 최근 설비투자가 악화되고 건설투자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 부문이 더욱 취약
    - 설비투자가 2012년 1/4분기 8.6%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5%, -6.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더욱 확대
    - 또한, 건설투자도 2012년 1/4분기 1.5%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4분기와 3/4분기 각각 -2.1%, -0.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마이너스를 지속
  -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비 증가세 약화
    -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신용경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2012년 1/4분기 1.6%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4분기 1.1%로 하락, 3/4분기 1.5%로 다소 반등했으나 소비 증가세 둔화
  - 내수 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도 지속적으로 하강하며 침체 국면을 나타냄
    -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3%에서 올해 1/4분기에 4.2%, 2/4분기 1.5%, 3/4분기 0.3%로 급락함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도 2011년 3/4분기 4.5%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20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각각 2.5%, 1.7%, 1.6%로 하락

< 설비/건설투자 및 민간소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정책 대안)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규제 완화, 신규 투자분야 발굴 및 신성장동력화,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자영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 기반을 확충

-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및 유턴(U-Turn)기업 지원

-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유턴(U-Turn)기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 핵심투자국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 신규 경제자유구역내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우선권 부여,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U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U턴 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동 R&D 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U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확대

-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투자 확대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확대, 표준·인증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촉진
- 의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적극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
- 선진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공학(service engineering)<sup>3)</sup>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혁신 지원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 수립

- 신규 투자 분야 발굴 및 신성장동력화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sup>4)</sup>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IT(정보통신) 분야 투자의 생산 및 투자 연관 효과를 제고
- 세일가스 개발과 전력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등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신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

3) 서비스공학이란 서비스의 개발, 설계, 관리에 등 다양한 측면을 공학적 또는 과학적 사고 및 기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나타냄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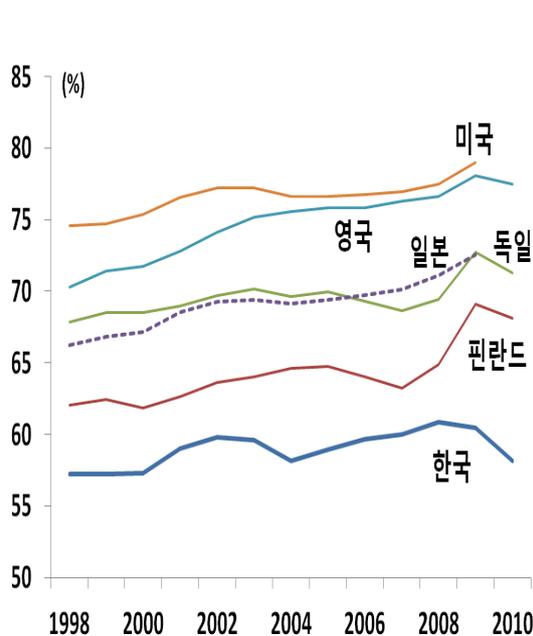
-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제조 산업과 IT를 연계해 'IT 융합(Convergence)'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부는 IT 융합 가속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R&D 현장적용, 사업화 연계를 위한 민관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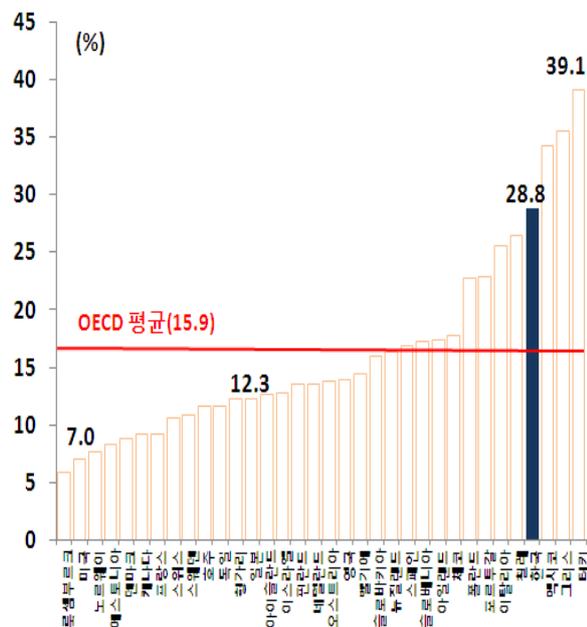
- 자영업 경쟁력제고

- 자영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영업 종사자들의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
-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상당수가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지원 정책' 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을 우선시하여 베이비부머들의 과다 자영업 진출 제한
- 창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춘 자영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

< OECD국 서비스업 비중 추이 >



< OECD국 자영업자 비율 현황 >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2011  
 주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합/총부가가치합)\*100

자료 : OECD 「Factbook 2011-2012」  
 주 : (자영업자/총취업자수)\*100

<해외사례 : 핀란드 서비스 혁신기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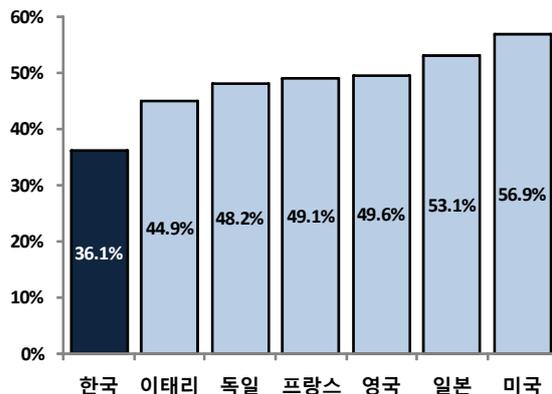
- 목적 :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구조 확립을 통해 전체 산업 및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 지원 대상 분야
  - 산업과 관련한 서비스(Industrial Services)
  - 지식 집약적인 비즈니스 서비스(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 금융과 보험(Financing and Insurance), 무역(Trade), 물류(Logistics)
  - 자산관리서비스(Asset Management Services)
- 프로그램 추진 내용
  - 기술과 제품에 기반을 둔 혁신: ICT 기술, 서비스 프로세스
  - 새로운 네트워크와 가치사슬의 형성: 파트너십 형성
  - 소비자와의 상호작용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의 혁신: 물류, 자가 서비스, 공동 생산
  - 조직에 있어서의 혁신: 구조적 모델, 경영과 리더십 방식, 근로자의 역할
- 핀란드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TEKES(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가 프로그램을 추진
  - TEKES(1970년 설립)는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핀란드의 산업과 서비스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각 레벨별 목적 달성을 위한 3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전략적 레벨 (strategic level): 혁신 정책 수행
    - 핀란드와 EU, OECD가 함께하는 혁신 정책 지원
  - ② 기능적 레벨 (operational level): 기술프로그램 서비스
    - 프로그램의 집중 부분 선정, 자원배분 연구, 실행 수단 개발
  - ③ 프로젝트 레벨(project level):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세스
    - 프로젝트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연구
    - 서비스 기업, 서비스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교의 프로젝트 활성화
- 시사점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

## 2) 일류한국('Korea As No.1') 시대 개막

- (현황 및 문제점)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저부가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음
  - 성장잠재력 약화 :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기존 주력 산업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
    - 7, 80년대 고성장한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이 현재도 주력 산업 역할을 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산업의 부재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
  - 저부가 산업구조 : 한국의 부가가치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sup>5)</sup>
    -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율은 2009년 기준 36.1%로 G7 국가 평균인 50.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에 불과한 수준<sup>6)</sup>
    - 소재-부품 국산화율 미흡, 핵심 요소 생산성 미약, 비가격 경쟁력 취약, 에너지 다소비, 부존자원 부족 등이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됨
  -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 : 국내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추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우려 증대
    -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유화,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부문에서도 중국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주요국 부가가치율(2009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2)  
 주 : 프랑스는 2008년, 영국은 2007년 기준

< 한·중 주력 품목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

|     | 2000년 |       | 2011년 |       |
|-----|-------|-------|-------|-------|
|     | 중국    | 한국    | 중국    | 한국    |
| 유 화 | 2.8%  | 3.3%  | 17.3% | 9.9%  |
| 철 강 | 4.6%  | 4.3%  | 19.4% | 8.4%  |
| 자동차 | 0.8%  | 2.8%  | 6.9%  | 9.3%  |
| 선 박 | 4.2%  | 21.2% | 29.5% | 36.6% |
| 기 계 | 3.2%  | 2.9%  | 26.8% | 6.2%  |
| 전 자 | 4.9%  | 4.9%  | 37.1% | 9.8%  |
| 반도체 | 4.3%  | 3.1%  | 32.0% | 4.8%  |

자료 : UNcomtrade  
 주 : HS code 2, 4단위 기준<sup>7)</sup>

5) 현대경제연구원(2012), 「'고성장-저부가'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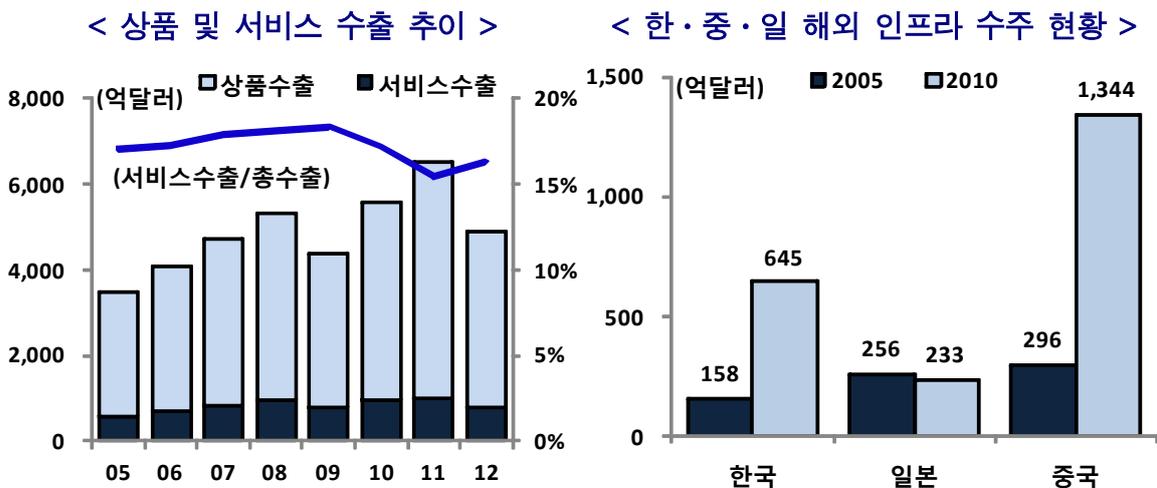
6) 주요국 제조업 부가가치율: 미국 35.8%(2009년), 독일 29.6%(2008년), 일본 31.9%(2007년)

- (정책 대안)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 수출 산업화,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 확대, 5대 글로벌 TOP 신성장산업 육성, 인프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 일류 한국 시대를 개척
  - 기존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융·복합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도록 고기술·고부가가치화에 집중할 필요
    - 반도체, IT 전자 등과 같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지속적인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에코선박<sup>8)</sup>, 인공지능 자동차와 같이 IT,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수출 경쟁력 지원
    - 한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중고 제품 유통 활성화, 금융상품 연계 등과 같이 제조업 위주의 기존 주력 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부가가치율이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주력 수출 산업과 연계 및 해외 시장 정보 제공, 세미나 및 전시회 지원, 해외 특허 지원 등 수출 지원 정책의 활성화 필요
  - 서비스업이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R&D 투자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확대
    -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 등의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콘텐츠, 프랜차이즈, 이커닝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범위가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함
    -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 간의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
    - 해외 진출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업과 정부의 체계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시장 공략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7) HS code는 석유화학 29, 철강 72+73, 자동차 87, 선박 89, 기계 84+90+91, 전자 85, 반도체 8541임.

8) 에코선박이란 친환경 엔진, 폐기가스 재회수를 통한 에너지 재활용 등을 통해 연료 소모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의미

- 5대 글로벌 New Top(5NT)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를 지원
  -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녹색기술 등 5대 신성장동력 산업(5NT) 관련 R&D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 현재의 개발 실적 위주 지원보다 개발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
  - 신성장동력 산업이 산업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공공구매 확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요 확보 지원이 필요
- 새로운 사업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인프라 수출에 대해 국제 협력, 홍보 및 금융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인프라 개발 유망국 정부와 선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 현지 전문가를 통한 정보 수집 채널 확보 등으로 해외 인프라 개발 수주 역량을 제고
  - 정부 차원에서 기업간 국제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
  -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산업시찰 지원과 더불어 연수생 초청, 국내 전문가 파견 등의 인적교류 확대, 국내 신도시 건설 경험 등을 적극 홍보
  - 인프라 수출에 대한 용자 및 세제 혜택,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책 마련 및 보증·보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2년은 1-3분기 누적 기준임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해외사례 :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9)>**

- 프로그램 내용 : 인프라 수출에 대한 종합적 수주 능력 및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무·재무·총무성의 관련 시책을 종합한 대책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상대국과 협력 체계 구축,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의 대아시아 영업 강화 등 종합적인 수주 능력 제고를 목표

**① 국제연계 촉진에 의한 코스트 경쟁력 강화<sup>10)</sup>**

- 해외현지법인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국제컨소시엄 형성 지원
- 해외에서 개발제조거점 활용을 위한 인재육성지원
- 기업의 코스트경쟁력 강화(국제연계, 해외기업 M&A 등)

**② 수주경쟁력 강화**

- 저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개발
- 안건 실현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 정보수집기능의 강화(JETRO와 상대국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③ 포괄적 안건 수주 개발 지원**

-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위해 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
-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장기자금 지원 실시

**④ 포괄적 안건 수주 개발 지원**

- 연수생 수용, 요인 초청, 전문가 파견
- 일본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일본의 우위성 홍보

**⑤ 파이낸스 지원 강화**

- 현지통화로 공적 파이낸싱 확충
- NEXI(일본무역보험)의 중소기업 보험 확충, JBIC 직접 융자 확대

- 시사점 : 한·일 연계 강화를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등 신흥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IT 인프라의 강점을 교통·하수도·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인프라 구축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산업연구본부 조규림 선임연구원(2072-6240, jogyurim@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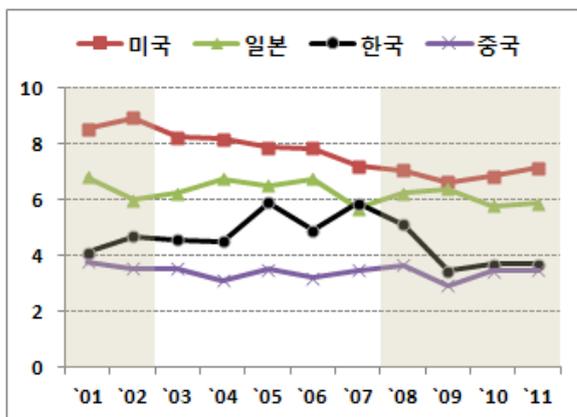
9) 「日本企業のインフラ・システム輸出に係る競争力強化策(経済産業省, 2012.6.22)」,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자료를 재구성)

10) 중국(上海)의 엔지니어 임금은 일본(요코하마)의 14% 수준이며, 한국(서울)은 일본의 40% 수준 (JETRO)

### 3)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7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연구개발 환경 및 질적 성과의 개선은 미흡
  -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해외 유출 심화 : 이공계 인력양상 시책의 강화로 이공계 졸업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박사급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한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 지수는 2007년 이후 하락하여 2011년에는 3.68로 조사 대상국가 59개국 중 44위를 차지함<sup>11)</sup>
  - 연구수행주체(산-학-연) 중 대학의 R&D투자 부진 :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이 사용하는 비중은 10.8%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프랑스 20.6%, 영국 26.5%, 독일 17.6%, 일본 13.4%, 미국 12.8% 등으로 나타남
  - 창의적 연구 수행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수행 구조 : 과학기술 어젠다가 미리 설정되고 연구자들은 프로젝트 수주에 매달리는 구조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연구기관·연구자 간 과당경쟁은 연구역량의 안정성 저하, 연구역량 분산, 연구소 간 차별성 약화 등의 부작용 초래

#### < 주요국의 두뇌유출지수 추이 >



자료: IMD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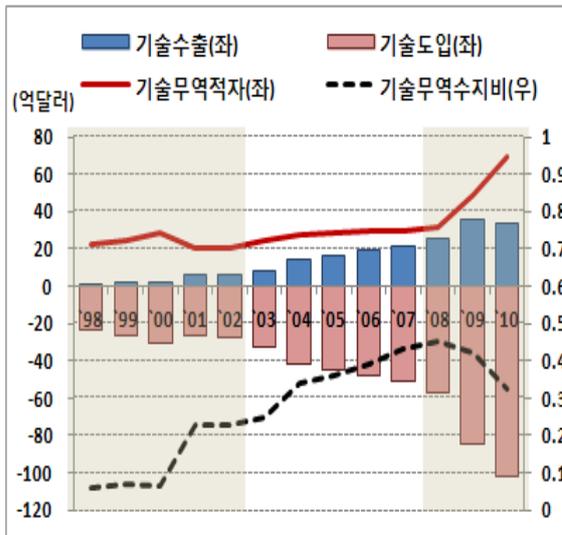
| 구분     | 연구개발비   | 비중     |
|--------|---------|--------|
| 대기업    | 242,129 | 55.2%  |
| 중소기업   | 48,503  | 11.1%  |
| 벤처기업   | 37,401  | 8.5%   |
| 공공연구기관 | 63,061  | 14.4%  |
| 대학     | 47,455  | 10.8%  |
| 계      | 438,549 | 100.0% |

자료: 국과위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2010년 기준

1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조사하는 두뇌유출지수는 0~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두뇌 유출이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고, 10은 '두뇌 유출이 국가 경제에 영향이 없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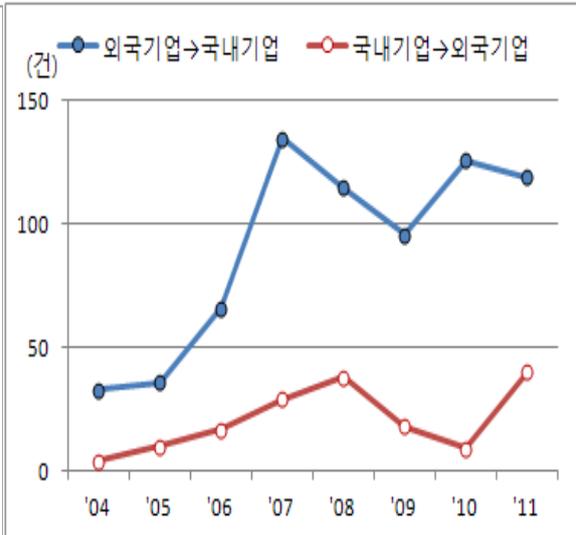
- 기술무역수지 악화 : 기술무역수지비<sup>12)</sup>는 2007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하락 반전
  - 2010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33.5억달러, 기술도입액은 102.3억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는 68.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지식재산권 인프라 취약 : 오랜 특허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부족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정부 R&D의 사회·공공적 역할 미흡 : 환경, 보건, 교육 등 민간 R&D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부족

< 연도별 기술무역수지 추이 >



자료: 국과위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현황 >



자료: 특허청

○ (정책 대안) 정부와 민간 R&D 역할 정립, 연구인력 확충, 금융 시스템 개선,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R&D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

-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일관성 유지 :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의 단절적 운영, 잦은 조직 개편,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을 지양
  - 과학기술인의 의견 수렴에 근거한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을

12) 기술무역수지비는 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1 이상은 기술무역수지 흑자, 1 이하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함.

통해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기술 선진국 진입을 주도

- **정부와 민간 R&D의 역할 정립** : 민간 R&D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분야를 정부·공공 R&D가 담당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
  - 정부 R&D는 사업화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로 기초연구 분야의 장기적·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 **연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확충,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발굴, 육성, 안착에 기여
  -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을 축소하고 정규직 연구원의 고용 확대
  
-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 시장친화적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간 자본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유인 확대
  -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기업체의 연구개발(R&D)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
  - 기술금융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가치 평가시장의 구축 필요
  
- **중소·벤처기업 정책적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지식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정비 등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 및 세제 지원 확대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지원 확대, 상시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해외사례 : 미국 잡스법(JOBS ACT) 제정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 **내용** : 2012년 4월 미국에서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및 주식시장 상장을 쉽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
  -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실리콘 벨리의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킵스타터(Kickstarter.com)'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유치 활성화에 기여
- **2012년 4월 제정된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은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및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중소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대중들로부터 연간 100만 달러까지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거래소(SEC)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비상장기업의 주주 수를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IPO) 절차와 규정을 대폭 간소화
- **킵스타터(Kickstarter.com)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아이폰 용 엘리베이션 독(Elevation Dock), 페블 시계(Pebble E-Paper Watch) 등의 개발에 성공**
  - 개인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기금을 정한 뒤 승인이 되면 프로젝트 기금 모집에 착수
  - 페블 시계는 벤처캐피탈 펀딩에 실패한 후 킵스타터에서 6일만에 470만 달러 모금에 성공
- **시사점** : 기술금융 시스템의 포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업체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은행 및 벤처캐피탈 등에서 소외된 소규모 업체의 자금 지원에 기여 가능
  -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부작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제도적 정비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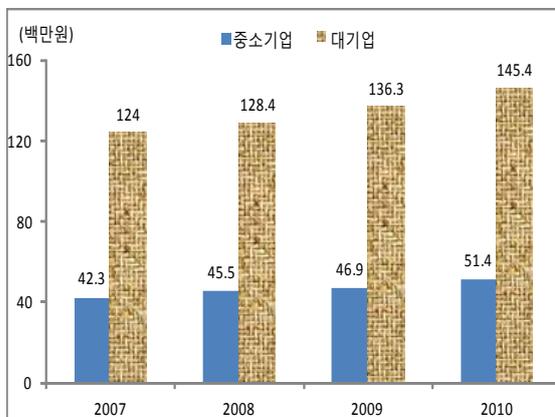
산업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2072-6237, jangws@hri.co.kr)

#### 4)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 (현황)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소기업 경쟁력은 낮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유기적 성장은 정체되고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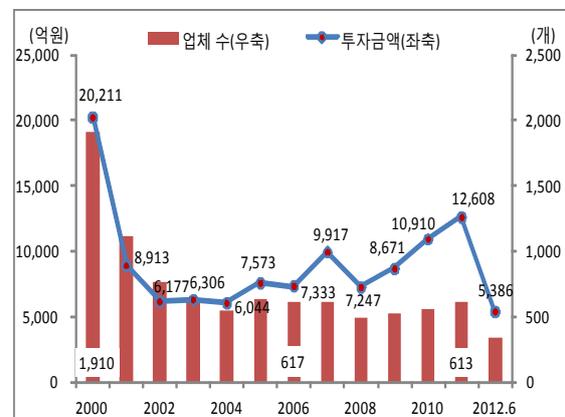
- **양극화 확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경쟁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7%,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지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2010년 기준 5,100만원으로 대기업 1억 4,500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함
  - IMD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은 59개국 중 51위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하락
- **기업 성장은 정체:**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의 유기적 성장도 정체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291개사로 사업체 비중이 0.2%에 불과해 일본 1.1%, 독일 8.2%에 비해 매우 낮음
  -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1%에 불과해 기업 성장 구조가 매우 허약함
- **창조적 창업도 부재:** 생계형 및 고령자 위주의 창업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투자의 성향도 보수화됨
  - 전체 제조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은 한국이 82%(2007년 기준)로 미국 52%, 일본 53%, 독일 61%에 비해 20%p 이상 높은데, 이는 창업 활동의 대부분이 생계형과 40~50대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신규 벤처투자금액도 2000년 2조 211억원에서 40% 이상 하락했고 투자도 신생기업보다는 업력이 4년 이상이 71%에 달해 보수적인 투자성향이 강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벤처 신규투자 금액과 지원기업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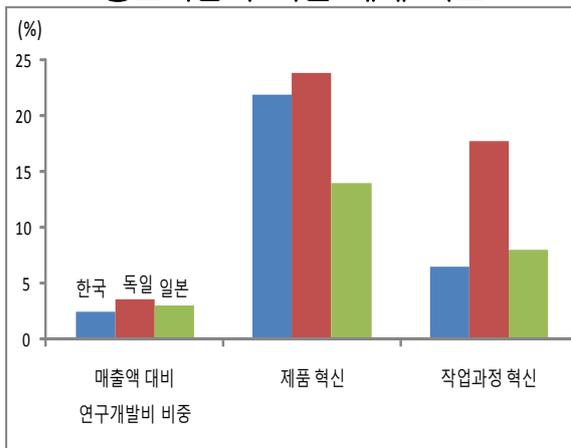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통계.

○ (정책 대안) 중소기업의 내적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글로벌 동반성장 장려,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 조성 등 글로벌화 지원으로 기업 진화형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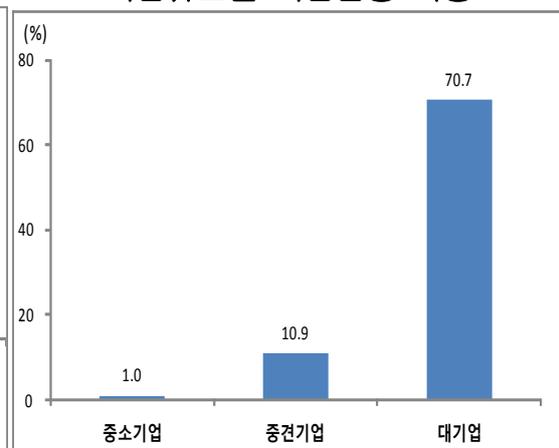
- **내적역량 확충:** 중소기업의 R&D를 제품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센터 내에서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까지도 혁신할 수 있는 R&D 지원 체계로 변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작업 환경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
  - 또한,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

- **직접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 재무역량을 제고:** 벤처·중소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중소기업 주식 거래소로 논의되고 있는 '코넥스'의 조기 설립으로 은행(62.1%)과 정책자금(30.8%)에 쏠려있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
    - 또한, 중소기업들의 유기적 성장을 위해 M&A 자금 조달, 투자펀드 조달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도 정비
- \* 코넥스(KONEX)는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장내주식시장'으로 창업 후 3~8년, 매출 30억~300억원 정도의 벤처 또는 중소기업이 상장대상임

< 중소기업의 혁신 체계 비교 >



< 기업규모별 직접금융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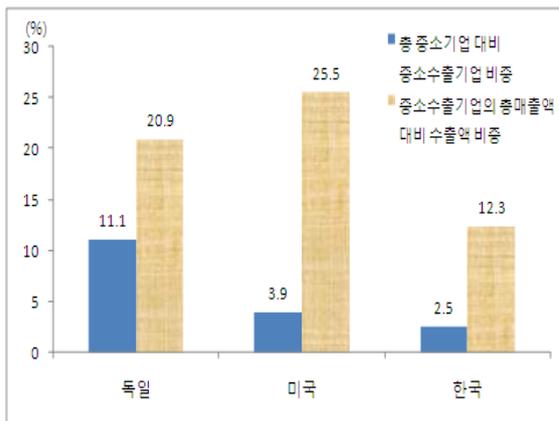
자료: 각국 통계청, OECD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2010.

주: 연구개발비 중 제품혁신과 작업과정 혁신 비중이 한국, 일본은 2002~4년, 독일은 2002~6년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 **대-중소기업 간 글로벌 동반성장 장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동시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동반성장을 확대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해외시장 동반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문화를 조성. 즉, 협력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글로벌 동반성장을 장려
-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조성:**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지역에 'Korea Center'라는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조성
  -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지원 센터(가칭, Korea Center)<sup>13)</sup>를 주요 수출 지역에 개설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진출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도 조성
- **히든 챔피언 전략의 효과성도 제고:**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히든 챔피언 전략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멘토링 확대로 효과성을 제고
  - 2012년 현재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컨설팅, 금융, 인력 등으로 전문화하여 일원화된 히든 챔피언 육성 체계를 구축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20만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독일 중소기업연구원.  
 주: 독일과 미국은 500인 이하, 한국 300인, 다만 200인 이하가 기준임.

<국내 기관별 히든 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기관명   | 프로그램명          | 지원기업 수 |
|-------|----------------|--------|
| 중소기업청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100여개  |
| 수출입은행 |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 230개   |
| 한국거래소 |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 26개    |
| 기업은행  | 수출강소기업 Plus500 | 356개   |
| 지식경제부 | 월드클래스 300      | 6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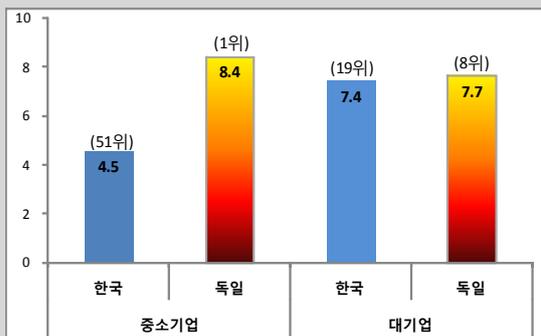
자료: 기관별 보도자료 재정리.  
 주: 2012년 8월말 기준 지원 또는 선정기업임.

13) 독일의 히든챔피언 1,500개사 중 25%인 359개사 몰려있는 바덴뷔템베르크 주는 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독일 센터(German Center)를 싱가포르(1995), 베이징(1999), 멕시코(2001), 텔리(2008), 모스크바(2011) 등에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해외사례 : 히든챔피언<sup>14)</sup>의 메카, 독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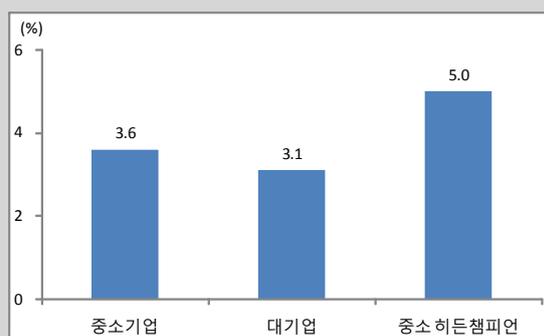
- 중소기업 경쟁력 세계 1위: 독일 중소기업(Mittelstand)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제 중심축으로서 기능
  - 2012년 IMD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세계 1위이며, 반면 한국은 51위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임
  - 세계 1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덕분에 독일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세계 수출비중을 확대하고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히든챔피언들 계속 증가: 독일 히든챔피언의 90%는 중소·중견들이 차지
  - 최근 독일의 베른 베노어(Venohr) 교수<sup>15)</sup>는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 안의 독일 히든챔피언이 1990년 500여개에서 2010년 1,500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1,350개가 중소기업(Mittelstand)으로 분류된다고 밝힘
  - 이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공학, 산업 생산품&서비스, 소비자 생산품, 자동차 및 부속품 등 5개 주요 제조업 분야임
-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 대학, 非대학 공공 연구기관, 연방 및 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 네트워크들이 중소기업 R&D와 혁신을 지원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 직업학교와 지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현장형 직업교육체계를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 대-중소기업 효율성 순위 >



자료: IMD, 2012.  
주: 10점 만점 기준. ( )는 국제 경쟁력 순위

< 독일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 >



자료: 독일 학문통계 진흥원, 베른 베노어.  
주: 2007년 기준임.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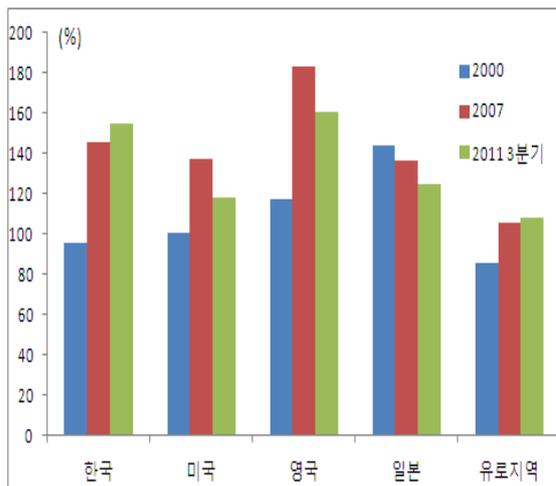
14)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대륙에서 수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명명

15) 베른 베노어(2010), "The power of uncommon common sense management principles- The secret recipe of German Mittelstand companies".

### 5) 서민·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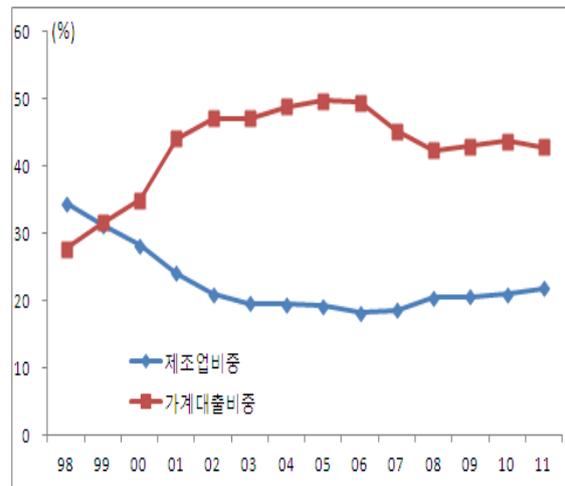
- (현황과 문제점) 제2금융권의 건전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서민 등으로의 자금흐름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음
  - 금융시스템 불안 재현 : 금융위기 이후 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제 2금융권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가계부채 위기 : 주택가격 상승기에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
    -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성장률 둔화,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소외계층 금융지원 미흡 : 금융위기 이후 서민,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은행의 안전성 위주 영업으로 서민금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큰 제조업 대출을 은행들이 크게 늘리지 않고 있음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



자료: OECD

< 은행'제조업 vs 가계'대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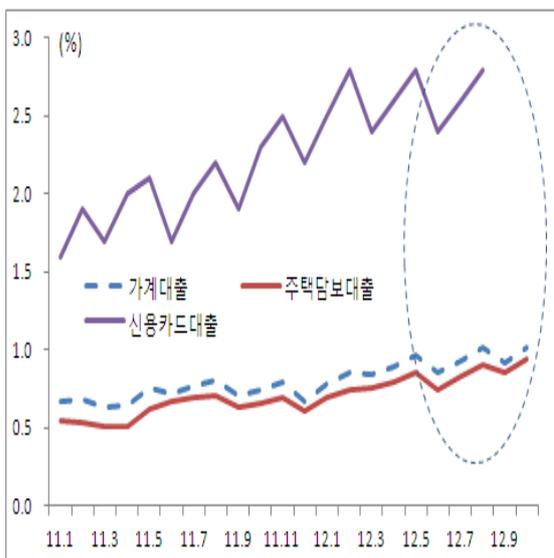
자료: KB국민은행

○ (정책 대안) 가계부채 문제 완화, 서민금융시스템 안정, 소외층 금융지원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함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주택시장 침체와 가계부채발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함
  -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 2금융권으로의 몰이'를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전세제도 개선을 통한 전세자금의 금융저축화 등으로 실물자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유동화
  -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 유도
  
- 건전 서민금융기관 확충 : 실추된 서민금융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게끔 지원 필요
  - 현재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절실
  - 부실서민금융기관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의 우량정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차별화된 감독정책 실시
  - 부실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 대형 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화 : 구조조정 중인 대형 저축은행을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의 전환
  -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간의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금융'이 절실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하여 대형 저축은행을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된 일본의 제2지방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자산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화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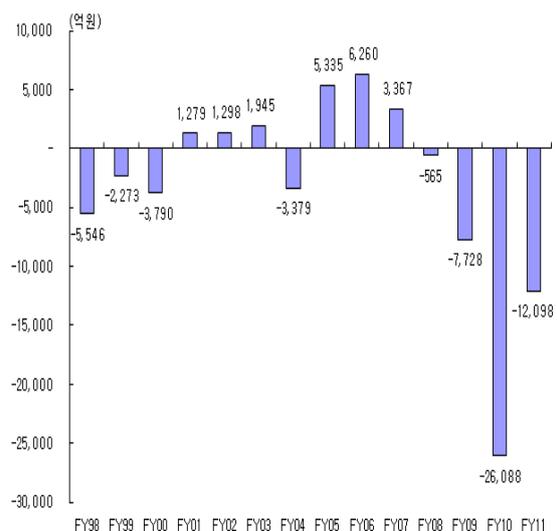
-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 여신과 수신 등에 있어 저축은행 영업의 지역화가 매우 중요한 바, 지역에서 수신한 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벤치마킹할 필요
- 수요자 위주의 서민금융 확립 : 공급자위주로 난립되어 있는 서민금융 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여 정책적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는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로 공급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
  - 다양한 공급원을 통합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 창업·취업지원, 서민우대금융 지원, 재무컨설팅 및 신용교육, 사회공헌지원 등 서민을 위한 종합자활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구조로 고도화
  - 서민금융과 자활기능을 연계시키고, 서민의 니즈에 맞는 효과적 지원을 위해 종합자활지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서민금융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수행 필요
  -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자료: 한국은행 ECOS  
 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연체율은 한국은행 자료임

< 국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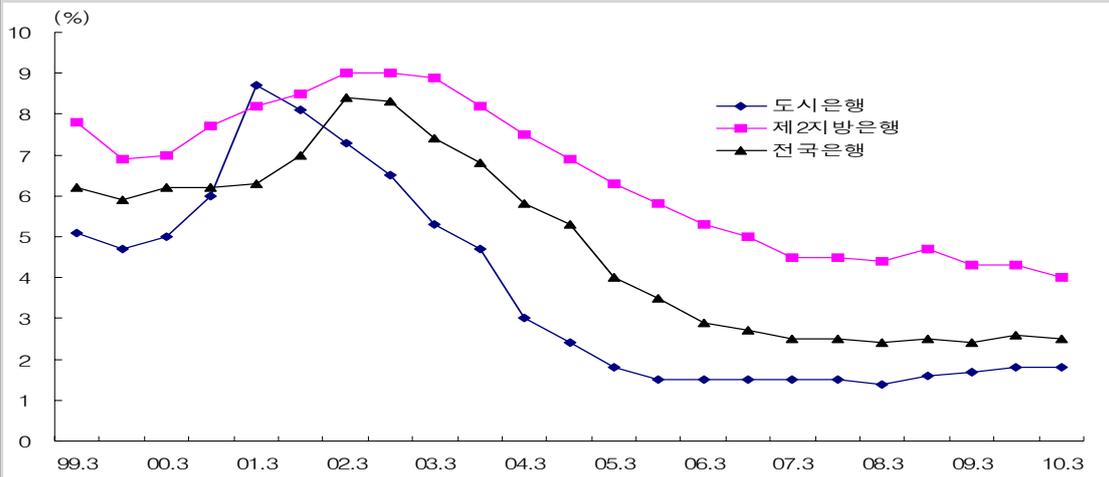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주: 회계연도 기준

< 해외 사례 : 일본 (제2)지방은행의 서민·중소기업 금융기관 변신 >

-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에 지역밀착형 영업에 집중하면서 도시은행 못지않은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음<sup>16)</sup>
  - (제2)지방은행은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다른 금융기관들과 같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함
    - 1995년 효고은행(兵庫銀行)이 파탄한 후 11개 (제2)지방은행이 파탄되었으며, 파탄 후 대형 도시은행의 지방은행자회사 또는 관련회사로 편입되거나 외자계 펀드에 매수되는 등 다양한 재생과정을 겪게 됨
  - (제2)지방은행은 가계보다 중소기업에 역점을 두며 지역밀착형营业을 강화하면서 건전성 개선 추세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
    - 기업대출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지만 대부분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낮음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예: 지자체 직원파견으로 업무 편의, 컨설팅 등)으로 부실자산 비중이 높지 않음
    - (제2)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비율이 도시은행 못지않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

<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



자료 : 일본 금융청

주 : 전국은행은 일본의 은행 전체의 평균 부실채권비율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02-2072-6216)

16) (제2)지방은행은 서민금융을 영위하던 사금융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여수신 금융기관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점에서 私金融 양성화 차원에서 설립된 국내 저축은행(구 상호저축은행)과 유사

## 6)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 및 미스매치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하고, 고용창출력은 떨어지고 있음
  - 낮은 고용률 : 실업률은 3%내외로서 고용 사정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률은 60%정도에 그쳐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청년 고용률은 40%정도에 불과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2011년 63.9%로 일본 70.3%, 덴마크 73.1%, 스웨덴 74.1%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 (OECD평균 64.8%)
  - 고용창출력 저하 : 해외투자의 증가와 부품소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취업자 증가율이 1970년대 연평균 3.2%에서 최근 1.3%까지 떨어졌으며,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도 1970년대 0.356에서 최근 0.290으로 하락
  - 고용경직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 대졸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미스매치가 여전함
    - 한국의 고용경직성은 세계 94위 수준으로 매우 경직적이라고 평가됨
    - 2010년 중소기업의 부족인원비율은 24.4%로서 대기업(6.0%)보다 매우 높음
    - 2011년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취업률은 54.5%에 불과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단위: 천 명,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
| 취업자증가 | -72  | 323  | 415  | 353  |
| 청년층   | -127 | -43  | -35  | -70  |
| 남자    | 31   | 181  | 238  | 169  |
| 여자    | -102 | 142  | 177  | 184  |
| 실업률   | 3.6  | 3.7  | 3.4  | 2.8  |
| 청년층   | 8.1  | 8.0  | 7.6  | 6.7  |
| 고용률   | 58.6 | 58.7 | 59.1 | 59.7 |
| 청년층   | 40.5 | 40.3 | 40.5 | 3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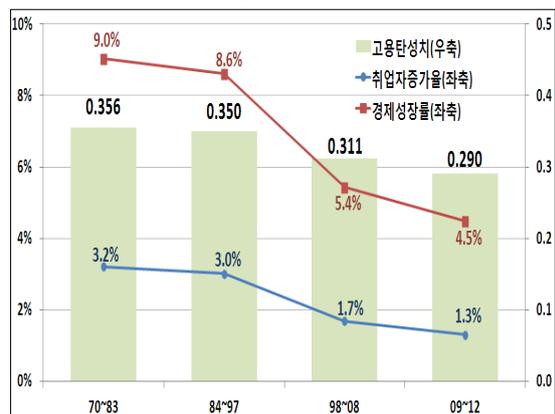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3) 2012년은 11월 기준

<기간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현안과 과제 12-15)

주: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해당기간의 연율 환산 증가율이며, 2012년은 IMF 전망치(WEO 2012. 4.)를 사용했음

○(정책 대안) 직무급을 도입하여 임금을 유연화하고,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의 보장을 토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며, 파트타임과 탄력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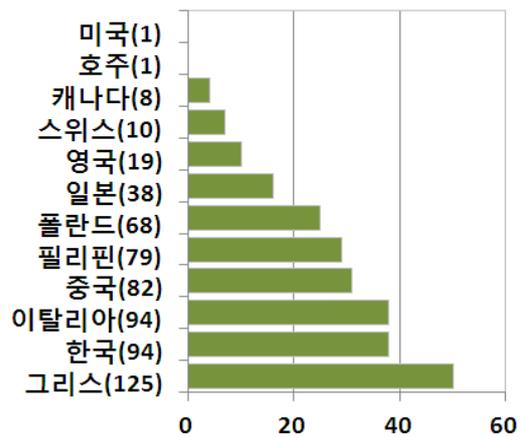
- **직무급의 도입과 임금의 유연화:** 연공급 체계의 경직성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직무형 임금(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직무와 숙련의 가치에 맞춰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확산해야 함<sup>17)</sup>
  - 직무형 임금체계는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비를 줄일 수 있고, 노동이동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장기고용과 정년연장, 정규직 전환의 토대가 됨 (※例 : 무기계약직, 임금피크제)
  -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평가와 숙련표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고 업종단체와 전문기관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함
- **직업훈련 내실화와 실업수당 인상 등 고용안전망 강화 :** 직업훈련의 내실화, 실업수당 인상,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 서비스와 제도를 혁신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실업수당을 강화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토대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勞使政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함

<기업규모별 일자리 미스매치>

| 구분      | 구인인원 (A) | 채용인원(B) |         | 부족인원 (미스매치) (A-B) |
|---------|----------|---------|---------|-------------------|
|         |          | 상용      | 기타      |                   |
| 전체      | 563,341  | 335,835 | 110,562 | 116,944 (20.8)    |
| 300인 미만 | 450,046  | 255,381 | 84,863  | 109,802 (24.4)    |
| 300인 이상 | 113,295  | 80,453  | 25,698  | 6,730 (6.0)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0.  
주 : ( )은 부족률(구인인원대비 부족인원 비율)

<주요국 고용경직성 비교>



자료: WEF, 국제경쟁력보고서, 2012  
주: 2009년 기준. 국가 옆의 괄호는 순위이며, 순위가 높을수록 고용경직성이 높음

17) 최영기(2010.12,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

- 실업급여의 낮은 보장성(최장 9개월, 1일 최고 4만원)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2,500만 명(피용자 1,600만)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0만 명에 불과하고 실제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10%에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
- **중소기업 일자리 환경 개선:**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써,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및 주변 인프라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 '3D'(Dirty, Dangerous, Difficult) 환경을 '3C'(Clean, Creative, Cool) 환경으로 개선
- **고용서비스 민간 개방:** 직업훈련과 일자리 안내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와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
  - 구인구직 정보제공 시스템을 혁신하여 정부 기관과 민간 서비스업자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방식을 검토함.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구인구직 정보제공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의 확대:** 직업능력개발과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림
  -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의 비중을 2007년 0.13% 수준에서 0.5% 수준까지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선진국(GDP 1%) 수준까지 끌어 올림

< 복지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비교 >

(단위: GDP 대비 %)

|                | 노령  | 유족  | 장애  | 보건  | 가족  | 실업  | 적극적 노동시장 | 주거  | 기타  | 합계   |
|----------------|-----|-----|-----|-----|-----|-----|----------|-----|-----|------|
| 한 국(2007)      | 1.6 | 0.3 | 0.6 | 3.5 | 0.5 | 0.3 | 0.1      | -   | 0.8 | 7.5  |
| OECD(2007)     | 6.4 | 1.0 | 2.1 | 5.8 | 2.0 | -   | 0.5      | -   | 0.7 | 19.3 |
| 일본(90) (가족주의)  | 4.1 | 0.9 | 0.6 | 4.5 | 0.4 | 0.3 | 0.3      | -   | 0.1 | 11.3 |
| 영국(90) (자유주의)  | 4.8 | 0.3 | 2.2 | 4.9 | 1.9 | 0.7 | 0.6      | 1.3 | 0.2 | 16.8 |
| 독일(90) (조합주의)  | 9.4 | 0.5 | 1.5 | 6.3 | 1.7 | 0.8 | 0.9      | 0.1 | 0.5 | 21.7 |
| 스웨덴(90) (사민주의) | 8.6 | 0.7 | 5.5 | 7.4 | 4.4 | 0.9 | 1.6      | 0.6 | 0.5 | 30.2 |
| OECD(1990)     | 5.9 | 0.8 | 2.3 | 4.7 | 1.6 | -   | -        | -   | 0.4 | 17.6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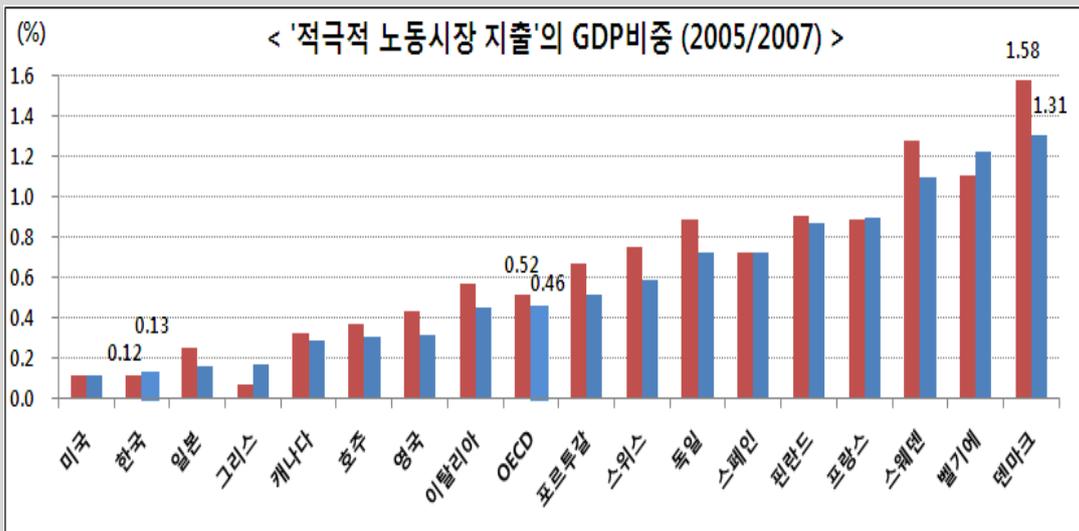
주: 1. 가족·자유·조합·사민주의 구분은 Esping-Anderson(1990)과 Huber & Stephens(2001) 참고

2. 정부 공공(public)부문의 지출에 한정했으며, 법정 민간지출은 제외함

3.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 1인당 소득 2만 달러 내외에 있었던 1990년 데이터

< 해외사례 :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유연안정성 >

-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경영사정에 따라 해고가 자유롭지만 정부가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으로 뒷받침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
- 국민 행복도 순위가 높은<sup>18)</sup> 덴마크는 2007년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GDP의 1.3%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IMD의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종업원의 훈련'과 '근로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함
  - 기업 입장에서는 잘 훈련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담이 크지 않음
  -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수당으로 생활이 충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바로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덴마크는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 빈부격차가 최소화된 나라며, 이와 같은 분배구조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국민 행복감을 높여줌



자료 : OECD SOCX Data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주 :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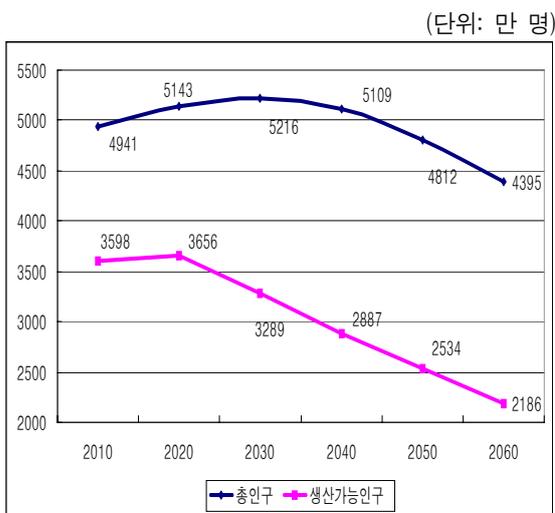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18) 2010년 7월21일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사이 전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한 결과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으며 한국은 56위에 불과. 155개국 중 덴마크가 1위, 핀 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 7)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생산가능인구감소로 기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만 고학력여성의 낮은 취업률,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에서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높은 학업 중도포기, 부실한 평생교육시스템 등이 걸림돌로 작용
-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태로 한국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인구는 2030년 5,216만 명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0년 11.0%, 2030년 24.3%, 2060년 40.1%까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년과 노년 부양인구비율은 2010년 37.3%, 2030년 58.6% 그리고 2060년 세계최고수준인 10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 이를 역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미혼인구의 증가, 만혼의 일반화 그리고 출산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
  - 2010년 기준 서울시의 25~40세 미혼인구는 1,486,569명으로 지난 40년간 7배 가까이 늘어났고, 2011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4세(29.5→31.9세), 여성은 2.3세(26.8→29.1세) 상승
  -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3으로 2005에 기록한 1.08보다는 높아졌지만 대체출산율 2.1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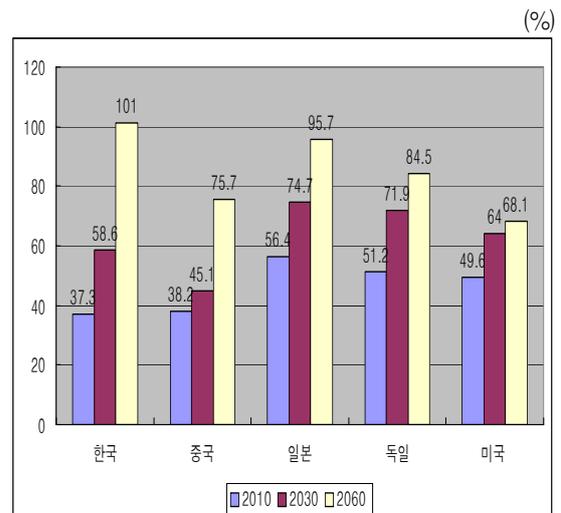
<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



자료: 통계청

주: 총인구는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頂點

< 부양인구비율 추계 >



자료: 통계청

주: (14세 이하+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 100명)

- 낮은 고학력 여성 취업률 : 여성이 빠르게 고학력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지

속적인 경제활동은 여전히 미흡

-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현재 49.2%로 OECD국가 평균인 61.3%와 큰 차이
-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82.4%로 남성의 81.6%를 앞섰지만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OECD국가 평균 82.4%에 크게 못 미침
- 이 결과 100대 기업의 여성등기임원 비율이 2012년 조사에서 1.5%에 불과

- 일·가정 양립의 여건 미성숙 : 탄력근무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육아휴직의 활용도 아직 낮은 수준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의 비중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육아휴직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여성 취업률과 임원비율 국제비교>

(%)

| 국가      | 대졸여성 취업률 | 여성등기임원 비율 |
|---------|----------|-----------|
| 스웨덴     | 91.2     | 27.3      |
| 노르웨이    | 90.3     | 40.1      |
| 영국      | 87.3     | 15.0      |
| 미국      | 80.7     | 16.1      |
| 한국      | 62.6     | 1.5       |
| OECD 평균 | 82.4     | -         |

자료: 통계청, 카탈리스트(catalyst.org)  
주: 취업률은 통계청, 임원비율은 카탈리스트

<출산·육아 휴가 활용 추이>

(단위: 명, 억 원)

| 구분     | 2005년           | 2010년         | 증가 ('10/'05)  |      |
|--------|-----------------|---------------|---------------|------|
| 産前後 휴가 | 수혜자 (A)         | 41,104        | 75,742        | 1.8배 |
|        | 지급액             | 460           | 1,926         | 4.2배 |
| 육아 휴직  | 수혜자 (B) (남성, %) | 10,700 (1.9%) | 41,733 (2.0%) | 3.9배 |
|        | 지급액             | 282           | 1,781         | 6.3배 |
|        | 비중(B/A, %)*     | 25.5%         | 54.0%         | 2.1배 |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주: 육아휴직 비중(B/A)에서 남성은 제외됨

- 다문화가정 자녀의 높은 학업 미등록률 : 한국사회의 빠른 다문화 추세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중도포기(미등록률)는 매우 높은 수준임

- 2004년 이후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은 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배우자의 국적도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으로 다양
- 2012년 경기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미등록률이 평균 43.8%, 학교별로 초등학교 35.9%, 중학교 50.7% 그리고 고등학교 68.6%로 추정

-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평생교육 제도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학력보완,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 예술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에는 크게 부족

- 2011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한 사람이 2,892만 명으로 2008년의 1,140만 명과 비교해서 4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이미 국민들도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

< 국제결혼비율 >

(단위: 건, %)

<형태별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

(단위: 개, 명)

|      | 총 혼인건수  | 국제결혼   | 국제결혼비율 | 준형식(학교형태) |       | 비형식     |       |            |
|------|---------|--------|--------|-----------|-------|---------|-------|------------|
|      |         |        |        | 학교        | 학생    | 기관      | 학생    |            |
| 2003 | 302,503 | 24,776 | 8.2    |           |       |         |       |            |
| 2005 | 314,304 | 42,356 | 13.5   | 2008      | 947   | 730,016 | 2,620 | 11,403,373 |
| 2007 | 343,559 | 37,560 | 10.9   | 2009      | 959   | 725,866 | 2,807 | 22,454,539 |
| 2009 | 309,759 | 33,300 | 10.8   | 2010      | 980   | 723,069 | 3,213 | 27,026,042 |
| 2010 | 326,104 | 34,235 | 10.5   | 2011      | 1,013 | 754,472 | 3,591 | 28,920,780 |

자료: 통계청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 (정책 대안) 고학력 여성의 승진을 방해하는 유리천장 제거,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인터넷 대학강의'(Korea Open Courseware) 활성화, 그리고 은퇴·노령인력 활용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유리천장(glass ceiling)' 제거 : 여성들에 대한 사회곳곳의 보이지 않는 불편 해소와 차별 철폐
  -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는 조치 외에 승진과 직업선택에 있어 여성에게 묵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작과 사회의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제거
- 탄력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동반상승 가능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실시 : 사회적인 약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서툰 한국어와 편견으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국판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필요

- 인터넷 대학강의(Korea Open Courseware)를 확대·강화 : 늘어나는 고급 평생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대학 강의에 대한 실시간 접근을 보장
  - 인터넷으로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대학강의(Korea Open Courseware; KOCW)에 모든 대학의 모든 강의를 의무적으로 업로드
  - 이에 더해 실시간으로 강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급의 평생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강의 공개를 통해 대학교육에 경쟁체제 도입
- 은퇴·노령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주거나 노령인력의 취업기회를 보장해주는 노력 필요

<해외사례 : 프랑스의 휴가적치제도 등>

- EU의 기업이사 여성비율 40% 의무화 계획 : EU는 2012년 9월 5일 2020년까지 대형 상장기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여성비율을 4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 발표
- 프랑스의 휴가적치제도 : 프랑스는 1998년 제1차 오브리(Aubry)법에 의거, 연간 탄력근로시간제 및 여러 해에 걸친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 등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2000년), 독일의 6개월 이상 고용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2001)<sup>19)</sup>등도 성공 사례
- 미국 소수계는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부터 대학입학에 큰 도움 : 2005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는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되면 흑인들의 주요대학 합격률이 33.7%에서 12.3%로 2/3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인터넷 대학강의(Open Courseware, OCW)확대는 고급의 고등교육확대로 발전 : 2002년 10월 미국 MIT대학에서 시작된 OCW는 하버드 등 주요 명문대학들이 참여하고 과정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강연을 넘어 연구와 대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형태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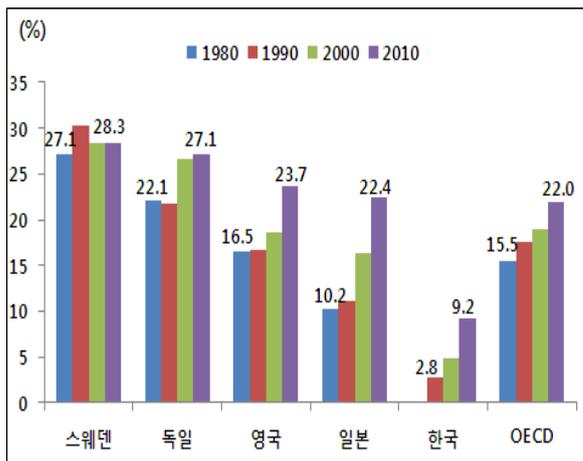
산업연구본부 예상한 연구위원(2072-6232, syeahk@hri.co.kr)

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 8) 공동체 인프라<sup>20)</sup>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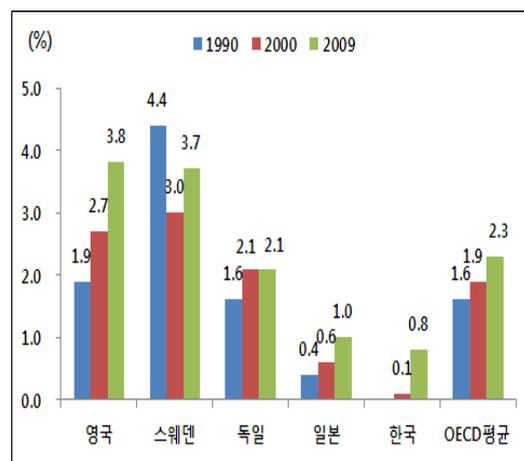
- (현황/문제점) 낮은 복지지출 수준과 고령화의 진전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임을 예상케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재정 건전성 훼손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
- 낮은 복지지출 수준 :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대비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최근 5년('08~'12) 복지지출 증가율(7.7%)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상회
  -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2010년 9.2%로 OECD 평균 22.0%에 크게 못 미침
  - 보육서비스 지원 등 가족(Family)과 관련된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0.8%로서 OECD 평균 2.3%의 1/3수준에 불과
-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건전성 :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향후 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계속 되어야 함
  - 고령화율이 2010년 11%에서 2050년 38.2%(OECD평균 25.7%)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지출 비중도 2010년 9.2%에서 2050년 20.8%로 증가할 전망이다<sup>21)</sup>
  -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45%)은 향후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OECD평균 13.3%)<sup>22)</sup>

< 복지지출 비중 비교 >



자료: OECD  
 주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비중 추이  
 주2: 한국 1980년 자료 없음. 일본은 2009년 자료

< 가족 관련 복지지출 비중 비교 >



자료: OECD  
 주1: 가족관련 복지지출의 GDP비중 추이  
 주2: 한국 1990년 자료 없음.

20) 보육과 교육, 직업훈련 등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달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분류되어야 함

21)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 2010)

22)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미국 24%, 일본 22%, 독일 8%, 스웨덴 6%

- (정책 대안)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보육, 교육, 직업훈련 등이며, 성장-복지-재정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보육분야 지출과 공교육 강화, 직업훈련 강화 등 공동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2002년 GDP의 0.1%에서 2007년 GDP의 0.5%로 5년 만에 5배 급상승했으나, 2007년 OECD 평균(2.0%)의 1/4, 1990년 OECD평균(1.6%)의 1/3에 불과
    - 82.4만 가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13.0%)에 달하는 에듀푸어<sup>23)</sup>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 투자와 사교육비 감소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가운데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지출의 GDP 비중은 2007년 0.1%로서 OECD 평균 0.5%에 크게 뒤지고 있음.
  - 주거복지 강화 :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거복지 수준<sup>24)</sup>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친환경 그린주택을 보급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
    - 주택 내부에 전용 온수 목욕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비율이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95%에 달하지만, 나머지 5%는 대부분 郡지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을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로 업그레이드하는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전개
    - OECD 회원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에 있는 바, 우리도 전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와 정부 지원을 강화
  -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은 약 6.6%로, OECD국가 평균인 16.1%의 절반<sup>25)</sup>에도 못 미치며, 의료·보건·사회복지의 고용탄력성은 우리나라(1.84)가 선진국(0.49~1.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높을 것임
  -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의료비 지출과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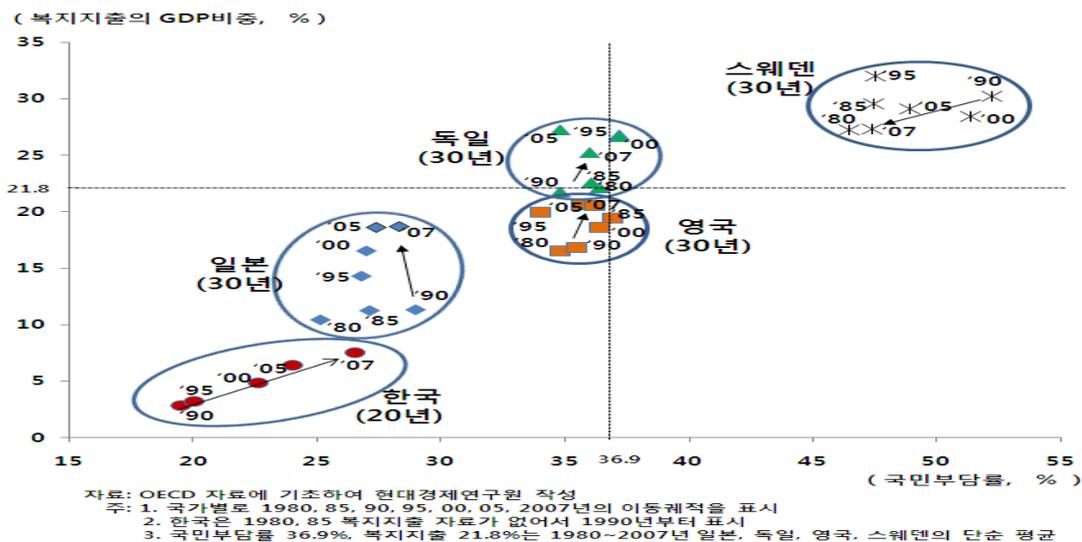
23)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2-31 (통권 제 502호), 2012.8.24)

24) 주거복지 평가와 개선 방안(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1-18 (통권 제445호), 2011.5.13)

25) 김용하('고용창출형 복지 정책 방향',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1.12.7)

- 2010년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sup>26)</sup>가 6조 원을 넘었고, 국고지원은 5조 원에 근접하며,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0년 32%로 증가
- **성장-복지-재정 연계모델의 정립<sup>27)</sup>** :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독일과 영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복지지출의 GDP 비중, 국민부담률, 경제성장률(복지-재정-성장)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20여년간 2배 이상(2.8%→7.5%), 국민부담률은 7%p(19.5%→26.5%) 급증했으며, 향후 어떤 경로를 밟아서 선진국의 2만 달러 수준(복지지출 20%, 국민부담률 35%)에 도달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 일본은 1990년 이후 20여년간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복지지출 비중만 늘어난 결과,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음
  - 스웨덴은 1990년에 고부담-고복지 모형이었으나, 이후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 비중을 함께 줄여 2007년 현재 30여년前인 1980년 수준으로 복귀함
  - 조세부담은 소폭 올리면서 복지지출 비중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면 복지프로그램 내부의 구조조정, 정부지출 내부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세원을 확충하는 '스마트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의 과거 경로(path) >



26)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국고지원을 감안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10년 1.2조, '20년 15.9조, '30년 47.7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됨

27)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1-07 (통권 434호), 2011.2.25)

< 해외사례 :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sup>28)</sup> >

-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복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스웨덴은 1870년부터 1970년까지 100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조세 부담율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했으며, 그 배경에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대외개방체제 및 경쟁, 대규모 인적자본 투자, 사회적 안정 등이 있었음
- 그러나 '91~'93년 3년 연속 마이너스성장과 경제위기를 겪은 후 복지 분야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정부지출 상한제, 사회보장수당 삭감, 공기업 민영화, 연금개혁<sup>29)</sup> 등을 통해 '90년대 후반 이후 건전재정을 달성함
- ※ 재정수지 (GDP비중, %) : -12.3('93)→ -7.9('95)→ 4.1('00)→ 2.4('05)→ 2.5('08)
- 통신, 우편, 철도,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3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
- 재정수지 목표를 'GDP 2% 흑자'로 정하고 다년도 예산계획을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하며 정부지출 상한을 도입<sup>30)</sup>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

< 스웨덴의 1998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

| 분야              | 내용  |
|-----------------|---|
| 급여수준 결정         |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 구성된 전체 연금 중에서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점차 감소되도록 재설계   |
| 평균보수 결정         | 평균보수 결정은 15년 최고소득 구간에서 평생소득 구간으로 변경   |
| 급여를 성장률과 물가에 연동 | 실질 성장률이 일정 기준을 미달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낮아지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높아짐   |
| 수급연령            |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변화 없지만, 61세부터 수급 개시하면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67세로 수급을 연기하면 증액된 금액을 지급함 (예: 61세 72%, 65세 100%, 70세 157%) |
|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8.5%로 조정, 근로자 기여율 1% → 9.25%로 대폭 인상  |

자료: 전주성 외(2001)를 참고로 재작성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28)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0-18(통권 398호), 200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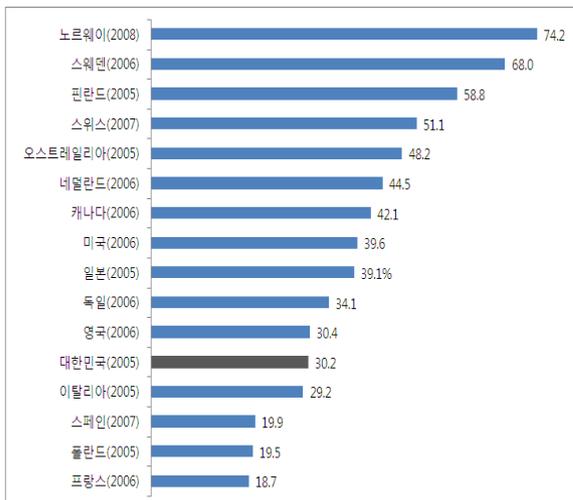
29)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급부형; DB형)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기여형; DC형)로 대전환함으로써, 부담금(사회보장세)을 올리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됨

30)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예산법'(State Budget Act)을 '96년도에 제정하여, '97년부터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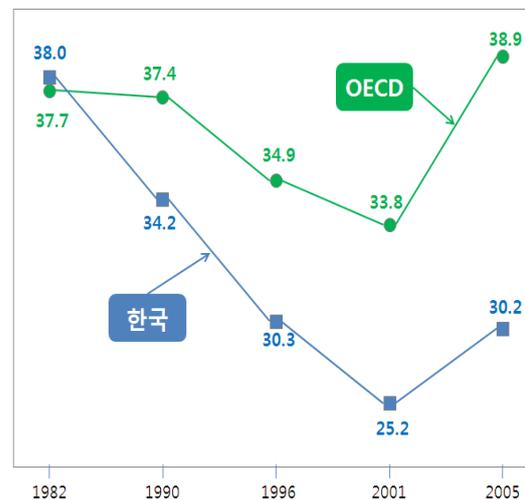
## 9)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 (현황/문제점)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sup>31)</sup>의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우리의 신뢰지수는 30.2%로서, 노르웨이(74.2%), 스웨덴(68.0%), 핀란드(58.8%) 등 북구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38.9%)에도 못 미치고 있음<sup>32)</sup>
  -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다 2005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음
    -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38.0% → 34.2% → 30.3% → 27.3%)을 그리다 이번 2005년 조사에서 30.2%로 상승
    - 하지만 OECD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신뢰지수 수준(%) >



< 한국 vs. OECD 신뢰지수 비교(%) >



자료: World Values Survey(미시간대)

31) 사회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있음

32) 미시간대학에서 실시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각국의 신뢰지수를 측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신뢰지수임

-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44개 국가 중 19위이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 점수는 전체 144개 국가 중 62위에 불과함
-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1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7위), '정부규제 부담'(114위), '소수 주주의 이익보호'(109위), '정부지출의 낭비 여부'(107위) 등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됨

<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 >

|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 재산권 보호          | 52  | 정책 결정의 투명성         | 133 |
| 지적재산권 보호        | 40  |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 서비스 | 46  |
| 공공자금의 전용        | 58  |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 74  |
|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 117 |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   | 44  |
|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 50  | 조직범죄               | 57  |
| 사법부 독립성         | 74  | 경찰 서비스 신뢰성         | 39  |
|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 89  | 기업경영윤리             | 56  |
|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 107 |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 75  |
| 정부규제 부담         | 114 | 기업 이사회 유효성         | 121 |
| 법체계의효율성(논쟁해결측면) | 80  |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 109 |
|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측면) | 96  | 투자자 보호의 강도         | 65  |

자료: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주: '순위'는 144개 국가 중 우리의 순위

- (사회자본 취약의 원인)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이 낮은 이유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의 보존과 육성에 소홀했기 때문
- 첫째, 식민지 경험과 6.25전쟁이라는 한계 상황, 해방 후 정치 혼란기 등의 굴곡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불신 문화가 팽배해졌음
  -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사라짐
- 둘째, 이런 과정에서 가족, 친족, 연고집단(학연·지연) 중심의 특수주의(particularism)적 사회관계만이 기형적으로 발달
  - 모르는 사람과의 신뢰, 공공성이 높은 사회, 시민단체 가입과 같은 공적 사회관계나 보편주의(universalism)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미성숙
  - 퍼트남(Putnam)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 사회는 '시민적 참여'보다는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임<sup>33)</sup>

33) 퍼트남(Putnam)은 한 사회의 주어진 문화적 전통이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를 강조하는가 혹은

- 셋째, 부패의 만연과 지도층의 윤리의식도 미흡함
  - 법과 규칙을 넘어서서 행사되는 특권, 정경유착, 투명하지 않는 제도와 관행, 엘리트들의 사익 추구 및 부정부패 등 불신 요소가 팽배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사회자본이 발달할 수 없었음
  - 2011년도 우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83개 국가 중 43위에 머물렀고, OECD 회원국 34개 국 중에서는 27위로 완전히 바닥권임

**< 한국의 부패 수준 >**

| 년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지수 | 4.5          | 4.3          | 4.5          | 5.0          | 5.1          | 5.1          | 5.6          | 5.5          | 5.4          | 5.4          |
| 순위 | 40위<br>/102국 | 50위<br>/133국 | 47위<br>/146국 | 40위<br>/159국 | 42위<br>/163국 | 43위<br>/180국 | 40위<br>/180국 | 39위<br>/180국 | 39위<br>/178국 | 43위<br>/183국 |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 (정책 대안) 사회자본 제고를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 지도층의 솔선수범, 통합의 정치리더십, 시민단체의 신뢰성 제고, 선진시민의식 교육 등이 요망됨
  - 법치주의 확립 :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일은 공공의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집단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함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확립
    - 아울러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성숙된 시민윤리를 형성하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근절해야 함
  -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 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 정착을 통해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한국 사회 상층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해소함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양극화로부터 야기되는 분열과 대립을 막고 공동체 강화의 인프라를 마련함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에 함몰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의 82%는 사회 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5년 조사),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144개 국가 중 117위에 머물러 있음(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 공직사회의 도덕성 개혁, 기업의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실천 등 지도층부터 자성하고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위로부터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 사회의 실추된 사회적 권위를 복원하여 다른 계층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뢰집단이 형성되어야 함
- 통합의 정치 리더십 발휘 : 사회통합을 위해선 국가 지도자의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임
- 계층, 노사, 지역,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시대적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망
  - 현대사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 이기주의는 충돌하기 마련인데, 이때 중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분열적 리더십'이 아닌 '통합적 리더십'임
- 시민단체 등의 신뢰성 및 권위 제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학계 등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여, 사회갈등 발생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도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권위를 지닌 조직이나 단체, 원로, 명망가, 전문가 등이 복원되어야 함
  - 아울러 언론의 정론 형성 능력이 제고되어 사회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높이는 것이 요망됨
- 선진화 시민의식 교육 : 선진 경제에 걸맞는 일류 시민의식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민 교육 실시
-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시민과 질서 의식, 법 제도 준수 등에 대한 올바른 시민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적 인프라를 키울 필요가 있음
  - 특히 청소년 시절부터 부, 기업,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
  - 이를 통해 反기업 정서, 부와 부자에 대해 적대감정을 갖는 척부(斥富) 의식을 최소화하여,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

- 우리 사회 부문 및 개인이 공익적 역할보다는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자기 이익 극대화에만 집착하는 저급한 의식을 쇠신해야 함
- 자신과 다른 주의와 주장, 다른 종교와 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남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tolerance)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

< 해외사례 : 북유럽국가의 높은 사회적 자본의 배경 >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4개 국가는 대표적인 고신뢰사회이며, 이들 국가들의 사회적 신뢰가 높은 3가지 배경
- 첫째, 북유럽 국가들은 인종적으로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
  - 단일한 국가정체성은 '왕실'과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정신적 인프라에 바탕. 핀란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모두 왕실을 유지. 또한 개신교 국가들로서 국민의 90% 가량이 기독교인. 왕실과 교회, 이 두 가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통합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
- 둘째, 이들 국가들은 거의 완벽한 복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운영시스템과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음
  - 이러한 신뢰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인.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국민들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경쟁하지 않아도 됨.
  - 제도가 투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매우 적고,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길 수 있음
- 셋째, 노사정 사회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한 역사적 경험
  - 스웨덴의 살트세바덴 협약(1938), 핀란드의 사회협약(1993), 스웨덴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협약(1997) 등의 성공은 서로를 믿고 기다리면 바람직한 결과로 반드시 보답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음

컨설팅본부 박태일 본부장(02-2072-6260, tipark@hri.co.kr)

### 10) 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 (현황/문제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으로서 완만하게 향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적 요인은 62위로 후진국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2년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위로서 2011년 24위보다 다섯 계단이나 상승했으나, 정부 제도와 관련된 순위는 후진국 수준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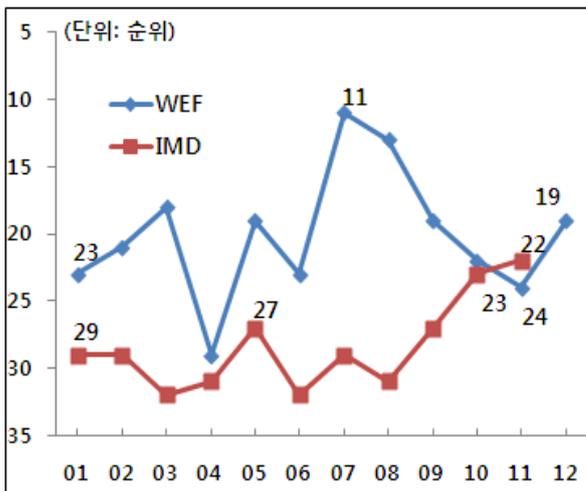
· 분야별로 보면 인프라(9위), 거시경제(10위), 시장규모(11위), 기업혁신(16위) 등은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19위)보다 앞서 있음

· 반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 불과하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 정부규제의 부담(114위), 정부지출의 낭비여부(107위) 등은 비교대상 144개국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낮음

- 2009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정부 규제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에서 규제로 계산하지 않는<sup>34)</sup> 규제들도 늘어나고 있음

· 규제순증<sup>35)</sup> 추이: 14건('08)→ -171건('09)→ -80건('10)→ -48건('11)→ 181건('12(上))

< 연도별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자료: WEF(세계경제포럼),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열위 및 우위 요인>

|       | 중분류          | 소분류       | 순위   |
|-------|--------------|-----------|------|
| 열위 요인 | 제도적 요인 (62위) | 정책결정의 투명성 | 133위 |
|       |              | 정부 규제 부담  | 114위 |
|       |              | 정부지출 낭비여부 | 107위 |
| 우위 요인 | 기업 혁신 (16위)  | 기업의 혁신능력  | 19위  |
|       |              | 국제특허출원건수  | 9위   |
|       | 인프라 (9위)     | 유선전화 가입자  | 4위   |
|       |              | 도로 인프라    | 17위  |

자료: WEF(세계경제포럼, 2012년 보고서)

주: 2012년 국가경쟁력 순위 = 1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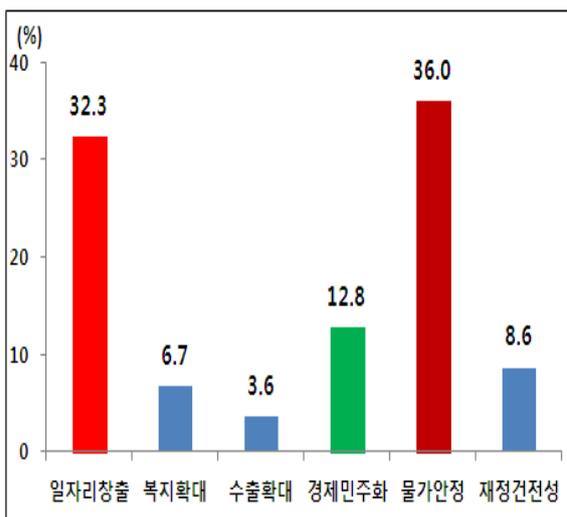
34)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차원에서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규제로 계산하지 않음

35) 연도별로 신설된 규제 건수에서 폐지된 건수를 제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 (정책 대안) 정부혁신과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민생관련 역할 강화,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임

-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함
  -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활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까지로 확대하고, 규제영향평가를 강화
  - 총리실 산하에 있으면서 총리와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처럼 독립성이 강한 장관급 부서로 상설화
  -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지만, ‘규제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정책 효과가 비슷한 규제라면 가급적 事前 규제보다는 事後 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규제 품질’을 제고
- 민생 관련 역할 강화 : 기업 관련 규제는 대폭 축소시켜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되, 복지와 민생 관련 정부의 역할은 강화함으로써 ‘민생 정부’(People First Gov.) 구현
  - 치안, 소방, 복지, 환경, 교육 등 민생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감

<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2년7월)

< 규제건수의 증감 추이 >

|       |    | 2008 | 2009 | 2010 | 2011 | '12(상) |
|-------|----|------|------|------|------|--------|
| 전체 규제 | 신설 | 45   | 247  | 59   | 109  | 221    |
|       | 폐지 | 31   | 418  | 139  | 157  | 40     |
|       | 순증 | 14   | -171 | -80  | -48  | 181    |
| 경제 규제 | 신설 | 10   | 183  | 10   | 41   | 80     |
|       | 폐지 | 14   | 350  | 43   | 72   | 10     |
|       | 순증 | -4   | -167 | -33  | -31  | 70     |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 2010년과 2012년 연속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차지했으나, 활용, 연계, 통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정부'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 전자정부 사업의 기관별 중복은 최소화하고, 기관간 연계와 통합은 최대화
  - 모든 부처를 하나로 모은 대한민국 통합 전자정부 시스템(KOREA.KR)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콘텐츠를 보완
  
-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제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정책의 운용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소통과 국민 통합에 있어서 차별화된 정부
  
-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보공개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어야 함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
  - 지방정부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 수준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므로,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지방의회의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어야 함
  
- 위원회 조직 신설의 최소화 :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와 중복되는 위원회 조직의 신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함
  - 과거 정부에서 집권 초기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위원회 조직을 대거 신설했다가 집권 말기에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음
  -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위원회 신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해외사례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성과평가(NPR) 프로그램 >

- 1993년 클린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정부성과평가(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는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정부를 성과중심의 고효율 조직으로 혁신
-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집권 초기에 고어 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혁신TF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NPR(정부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 조직을 성과중심의 고효율 조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음
- NPR의 목표 : 업무 성과는 높고, 비용은 적게 드는(Works better and Costs less) 정부를 목표로, 전담조직(TF)을 만들고 평가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함
- NPR의 성과 : 연방 공무원의 19%에 해당하는 42만 7천 명을 감축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평가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확립

< 美 클린턴 정부 행정개혁(NPR)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 주요 내용 |  | 주요 성과    |   |
|-------|--|----------|---|
| 전담조직  | - NPR(정부성과평가단)   | 인력감축     | - 42만7천명 (연방공무원의 19%)                         |
| 시기    | - 1993-1999  | 예산절감     | - 1,770억 달러                                   |
| 수단    | - 예산 압력  | 직무만족     | - 직무만족도 2배로 증가                                |
| 취지    | - 행정 비용 줄이기<br>(행정부 전반의 인원 감축)   | 규제완화     | - 64만 쪽 내부규칙과 16만 쪽 연방규제 철폐                   |
| 주요 내용 | - 중간 관리자들의 조직 간소화<br>- 자발적 방법 원칙 (직권 면직과 강제 감축 최소화)<br>- 명예퇴직제 (Buyout) 도입<br>- 민영화 / 규제완화<br>- 목표관리제(MBO) 도입<br>-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서비스 개혁   | - 570개 연방조직이 4천개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       |  | 조직 개혁    | - 1,200개 연방 팀의 성과 향상<br>- 325개 '재창조 실험실' 탄생   |
|       |  | 권고안 달성실적 | - 1,500개 액션 중 58% 완료<br>- 1,250개 권고안 중 68% 달성 |

자료: 배귀희(2007), 김태룡(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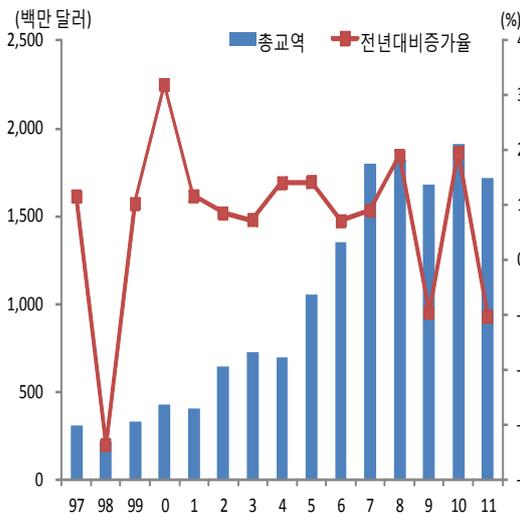
주: 주요 성과의 내용은 1998년 8월 기준이며, 인력감축은 2000년 기준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 11)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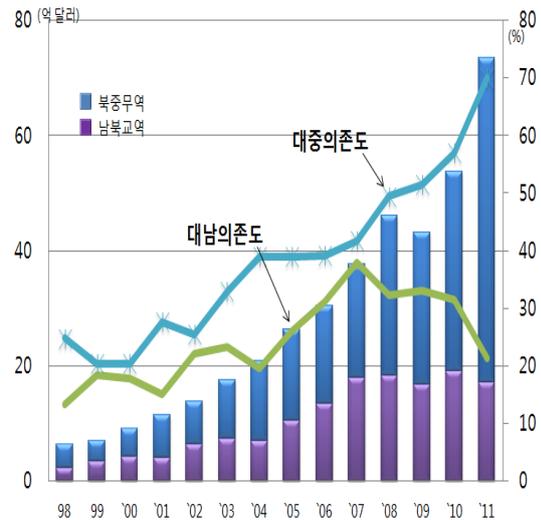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남북 관계 단절의 장기화로 정치·외교적 측면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
  -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 북한은 세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감행에 이어,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킴
  - 경제 교류 위축 : 2011년 17.1억 달러로 지난 정부의 말년인 2007년 18.0억 달러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일반교역은 거의 중단 상태임
    - (총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 DJ 정부 15.8%와 노무현 정부에 22.9%로 상승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1.2%로 급감
    -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7년 41.7%에서 2011년 70.1%로 급등한 반면, 동 기간 대남 의존도는 37.9%에서 21.3%로 하락
  - 인도적 접촉 급감 : 정치·경제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
    -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만 850명 대면 상봉과 3,750명의 화상 상봉이 이루어졌으나, 현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은 2009~10년 2차례에 1,770여명만 성사
  - 정서적 갈등 증폭 : 민간의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의 마음 얻기' 효과가 상실되었으며, 남남 갈등도 초래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남갈등 확산

< 남북 총교역 추이 >



자료 : 통일부, KOTRA

< 북한의 대외의존도 추이 >



○ (정책 제언) 남북한의 비교 우위를 토대로 한 상호 경제 협력을 확대·심화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실현

- 3대 기본 원칙 : 지속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경분리와 민관분리,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 등의 3대 기본 원칙을 확립

① 정경(政經)분리 :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현안이 경제 교류 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

- 정치·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민간의 경제 교류는 계속 허용
- 중국-대만은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정경분리 원칙 견지로, 최근에는 양안경제협정(ECFA)과 '화폐 청산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실상의 경제통합 추진

② 민관(民官)분리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 당국간 회담의 중단 속에서도 민간 교류는 지속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부는 남북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 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은 이를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면하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민간의 대북 협력 기능을 살려 나감

③ 상혜(商惠) 분리 : 상호 신뢰 유지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거래와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분리

- 비록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공식적이며 상업적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

- 추진 과제 : 최근 몇 년간 중단되었던 정치·경제 교류 활동을 재개 내지 복원하고, 남북 평화 정착과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① 정치적 신뢰 관계 구축 : 기존에 합의되었던 정례적인 당국간 회담 재개

- (기존 합의 공감대 형성) 기존 당국간 합의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노력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추진
- (6자회담 재개 주도) 미·중·러·일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수로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지원을 통한 북한 비핵화 유도

- ② 남북한 경제 협력 체제 공고화 : 5.24 조치 완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내 연기된 공사 추진과 개성관광 사업 복원
- (전략적 특구 개발) 단기간 내에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
  - 개성공단의 성공적 안착 후에는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서북부(해주, 신의주·황금평)를 개발하고, 동북부(원산, 나진) 지역도 개발·투자 확대
  - (개혁·개방 지원) 주변국들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고위층 경제 관료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통해 우리의 개발 노하우 전수
  - (SOC 개발사업 추진) 제철 및 정유 등 북한의 기간산업 개발과 전력, 철도·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노력
  - (광물자원 개발 협력 강화) 중단되었던 단천 지역 개발은 물론 북한의 개발 유망 광종에 대한 남북한 공동 개발을 통해 광물자원 개발 협력 강화
  - (남북 녹색성장 사업 추진) DMZ 생태관광 공동 개발과 대북 조림 탄소 배출권(CDM) 사업, 남북한 농업 협력, 남북 기상 협력 강화 등
- ③ 사회·문화 통합 기반 확충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제 체육 행사 남북 단일팀 및 공동 응원단 구성
- (이산가족)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적극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의약품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 추진
  - (체육 협력) 국제 체육대회 남북 단일팀 및 공동 응원단 구성 추진(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7월 광주 U-대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등)
  - (문화재 협력)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을 통한 UNESCO 문화 유산 등록 추진
  - (학술 교류 협력) 남북한 청년 및 대학생 학술 교류 사업 추진 등
- ④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며,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 사전 분산 투자라는 인식 제고

< 해외 사례 : 중국-대만 '양안경제협정(ECFA)'과 '화폐 청산 양해각서' >

- 개요 :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양국의 일치된 견해로 경제교류를 넘어 경제통합 시대에 안착
  - 2010년 6월 양안경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을 체결한 전후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
  - 특히 2012년 8월 대만 중앙은행과 중국이 '화폐 청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실상의 경제통합 시대로 진입
- 추진 현황 :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인적·경제 교류는 꾸준히 지속·확대되었음
  - 정치·군사적 긴장과 위기 속에서도 장기간의 경제교류를 지속
  - (경제 교류) 1995~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로 인한 긴장시기에도 수출입액은 1994년의 165억 달러 보다 많은 200~220억 달러를 기록
  - (인적 교류) 2002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로 2003년 교류 인원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04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후 꾸준히 증가

< 중국·대만 간 시기별 정경분리 현황 >

(단위 : 억 달러, 천 명)

| 단계                               | 주요 정치·군사적 사건   | 중국·대만 간 경제·인적 교류 |                         |                         |
|----------------------------------|--|------------------|-------------------------|-------------------------|
|                                  |  | 연도               | 교역총액<br>(전년대비<br>증가율 %) | 인원양태<br>(전년대비<br>증가율 %) |
| 장착적 긴장속<br>교류 확대기<br>(1995~2007) | 1995 - 1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 1995             | 209(27)                 | 1,574(12)               |
|                                  | 1996 - 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 1996             | 222(6)                  | 1,800(14)               |
|                                  | 2002 - 중국,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배치 강화  | 2002             | 374(25)                 | 3,800(7)                |
|                                  | 2005 - 중국, '반분열국가법' 통과로 정치적 갈등<br>· 반분열국가법 : 중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과<br>대만 독립 자지를 목적으로 제정 | 2003             | 463(24)                 | 2,856(-25)              |
|                                  |  | 2004             | 616(33)                 | 3,830(34)               |
| 2005                             | 717(16)  | 4,269(12)        |                         |                         |
| 경제 통합과<br>정치적 안정<br>(2008~현재)    | 2008 - 대만, 마잉주 총통 '新 3불 원칙'<br>· 3불은 대만독립, 중국통일, 무력충돌 금지                         | 2008             | 1,054(3)                | 4,646(-4)               |
|                                  |  | 2010             | 1,208(40)               | 6,802(26)               |
|                                  | 2010 - 중국·대만 경제협정(ECFA) 체결   | 2011             | 1,375(14)               | 6,989(3)                |

자료 :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www.sef.org.tw, 대만 경제부 (MOEA)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연구위원(2072-6226, hjlee@hri.co.kr)

## 12)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역내 국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역내 난제들이 존재
  - 동북아의 지리적 구분 : 지리적으로 동북아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가리키나, 이들 3국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을 포함
    - 러시아 극동지역은 아무르 주, चु치 자치구, 유대인 자치주, 캄차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마가단 주, 프리모스키 지방(연해주), 사할린 주의 8개 지역
  -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 : 세계 전체 면적의 12%(1,787.5km<sup>2</sup>), 인구의 22.1%(15.5억 명)에 이르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 위상이 상승
    - GDP는 1990년 약 3.8조 달러로 세계 전체 GDP(22.2조 달러)의 17.0%에서, 2011년 약 14.4조 달러로 세계 전체 GDP(약 70.0조 달러)의 20.5%로 상승
    -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1.4%(0.8조 달러)에서 2011년 17.8%(6.4조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액만 4.8조 달러로 세계 전체 외환보유액의 38.8%를 차지<sup>36)</sup>
  - 상호협력이 필요한 난제들이 산적 : 다만, 러·일(쿠릴열도), 중·일(센카쿠열도), 한·일(독도) 간 영토문제, 중국과 몽골 등의 환경문제 심화, 한중일 FTA 나 에너지·식량 협력 등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 동북아의 지리적 구분 >



주 :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동북아임.

< 세계 속의 동북아 위상 변화 >

| 구분                   | 한중일  | 동북아     | 세계      |          |
|----------------------|------|---------|---------|----------|
| 면적(km <sup>2</sup> ) | 2011 | 1,003.1 | 1,787.5 | 14,894.0 |
| 인구(억 명)              | 2011 | 15.2    | 15.5    | 70.2     |
| GDP(조달러)             | 1990 | 3.7     | 3.8     | 22.2     |
|                      | 2011 | 14.3    | 14.4    | 70.0     |
| 수출(조달러)              | 1990 | 0.4     | 0.4     | 3.4      |
|                      | 2011 | 3.2     | 3.3     | 18.0     |
| 수입(조달러)              | 1990 | 0.04    | 0.04    | 0.4      |
|                      | 2011 | 3.1     | 3.1     | 17.8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CIA, World Factbook.

36) IMF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세계 외환보유액은 약 12.4조 달러로 한국이 약 0.3조 달러, 중국이 약 3.2조 달러, 일본이 약 1.3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안) 동북아 지역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각국 수뇌급 협의체 구성,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작성 및 실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의 잠재력을 활용

- 동북아 지역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각국 수뇌급 협의체 구성

- 동북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 및 지역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통상, 군사·외교, 식량·자원·에너지, 과거사, 환경 및 빈곤문제와 같은 각론 수준에서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및 실천 장치 마련

-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로드맵 작성 및 실천

- 동북아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해서는 이미 현안이 되어 있는 한·중·일 FTA의 성립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이후 역내 FTA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함

<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연평균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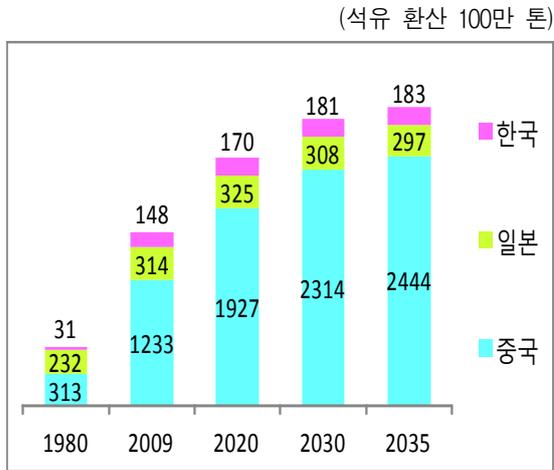
| 구분         | 국가 | 2006~2010년 | 2011~2015년 | 2016~2020년 | 2021~2025년 |
|------------|----|------------|------------|------------|------------|
| 경제적 후생증대효과 | 중국 | 0.06       | 0.21       | 0.31       | 0.37       |
|            | 일본 | 0.06       | 0.15       | 0.23       | 0.30       |
|            | 한국 | 1.35       | 1.74       | 2.17       | 2.79       |
| 수출증대효과     | 중국 | 4.18       | 3.6        | 3.4        | 3.4        |
|            | 일본 | 3.99       | 5.63       | 7.07       | 7.95       |
|            | 한국 | 6.05       | 6.41       | 6.49       | 6.25       |

자료 : 원자료는 DRC, NIRA & KIEP의 2008년 공동연구결과이며, 이창재·방호경(2011),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KIEP, p.73에서 재인용.

- 동북아 에너지 개발 및 활용 협력 강화

-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동북아 내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관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위원회(Senior Officials Committee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난항 거듭
- 정부 간 조약 등을 통해 강제력을 가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당면 현안 과제별 협력 방안을 도출·추진하고, 향후 경제협력체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질 경우 지역통합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

< 한·중·일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



자료 : 日本エネルギー經濟研究所(2011), 아시아·세계에너지아웃룩2011-不透明さをマ스國際エネルギー情勢とアジアの將來.

< 동북아 자원 보유 및 생산 현황(2011년말) >

| 구분   | 러시아         | 중국    | 일본    | 한국  | 북한  |     |
|------|-------------|-------|-------|-----|-----|-----|
| 원유   | 매장량 (억배럴)   | 882   | 147   | -   | -   | -   |
|      | 생산량 (만배럴/일) | 1,028 | 409   | -   | -   | -   |
| 천연가스 | 매장량 (조 m³)  | 44.6  | 3.1   | -   | -   | -   |
|      | 생산량 (조 m³)  | 607.0 | 102.5 | -   | -   | -   |
| 석탄   | 매장량 (억톤)    | 1,570 | 1,145 | 3.5 | 1.3 | 6.0 |
|      | 생산량 (백만톤)   | 157   | 1,956 | 0.7 | 0.9 | -   |

자료 : BP(June 2012),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주 : 몽골은 데이터 부재로 생략.

-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은 러시아의 '극동발전 2025' 전략<sup>37)</sup>과 연계·추진
  -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 이후 매년 10억 m³의 가스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입수단은 우선적으로 러시아측 제안에 따라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

< 러시아 극동지역 천연가스 생산 계획 >

(10억 m³)

| 구분     | 2005 | 2008 | ~2015   | ~2022   | ~2030   |
|--------|------|------|---------|---------|---------|
| 러시아 전체 | 641  | 664  | 685~745 | 803~837 | 885~940 |
| 극동 지역  | 사할린  | 2    | 31~36   | 36~37   | 50~51   |
|        | 기타   | 1    | 3~4     | 29~30   | 35~36   |
|        | 계    | 3    | 9       | 34~40   | 65~67   |

자료 :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2010), Energy Strategy of Russia-For the Preiod to 2030.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



자료 : KIEP(2009),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 정성 확보방안.

37) 러시아의 '극동발전 2025' 전략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15년까지 유망경제성장 지역에서의 공업·농업 프로젝트 및 인프라사업 추진, 2단계는 2020년까지 정부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대규모 에너지사업과 주요 교통망 개선 및 건설사업 추진, 3단계는 2025년까지 탄화수소 연료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혁신경제 및 첨단기술분야를 발전시킬 계획. 이승문(2012), 러시아가스수출·투자전략변화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를 통한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 대응
  - 지난 2005년 열린 장춘포럼에서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을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개칭하면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
  - 본 계획에는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의 5개 분야 협력 방안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전망
- 동북아 물류 허브의 구축
  - TCR(Trans China Railroad)과 TSR(Trans Siberian Railroad), Asian High Way를 활용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전략 마련
  -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IT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강화 등의 보완 전략이 필요
  - 동북아 물류 허브를 담당할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는 물론 물류 전문 인재를 육성·활용해야 함
-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러시아 연해주식량기지건설 공동프로젝트 추진
  - 연해주는 16.6만km<sup>2</sup>의 면적(한국의 약 1.7배)에 인구 약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 시베이라 동해 연안지역으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비가 많은 기후 특성을 가지며, 우수리강과 싱카이호 연안 중심으로 광활한 평야를 형성
  - 한국과 일본의 곡물자급도는 2009년 각각 33%, 26%로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식량안전보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곡물 수급기반 확보가 필요

< 연해주 주요 농작물 파종 면적 >

(천 헥타르)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총파종면적 | 313.3 | 308.3 | 348.3 | 236.2 |
| 곡물    | 101.5 | 109.7 | 116.7 | 43.4  |
| 벼     | 6.0   | 8.1   | 18.2  | 23.1  |
| 콩     | 12.0  | 116.3 | 146.9 | 137.5 |
| 옥수수   | -     | 14.5  | 10.2  | 9.1   |
| 메밀    | -     | 2.1   | 1.2   | 1.4   |
| 감자    | 29.1  | 30.1  | 30.9  | 4.1   |
| 채소    | 8.2   | 8.6   | 9.4   | 4.4   |

< 연해주 주요 농산품 생산 추이 >

(천 톤)

| 구분       | 2008  | 2009  | 2010<br>(전망치) |
|----------|-------|-------|---------------|
| 곡물       | 164.1 | 192.7 | 210           |
| 콩        | 102.7 | 125.3 | 135           |
| 감자       | 323.3 | 369.6 | 375           |
| 채소       | 125.0 | 153.6 | 155           |
| 육류(생체중량) | 48.4  | 48.2  | 55            |
| 우유       | 108.2 | 105.1 | 115           |
| 계란(백만 개) | 259.9 | 284.7 | 284.7         |

자료 : 권태진 외(201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사례 : 주요국 극동지역 경제협력 >

- 최근 러시아가 ‘극동발전전략 2025’를 수립하는 등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러시아는 ‘극동발전전략 2025’ 수립을 통해 에너지 등 자원 뿐 아니라 극동지역 발전을 통한 러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꾀하고 있음
    - 본 전략은 극동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2009~15년), 에너지 관련 제품이 수출 비중 증대를 위한 2단계(2016~20년), 러시아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치 제고 및 극동지역의 세계 경제와의 통합 강화 등을 위한 3단계(2021~25년)으로 나누어지는 국가전략임
    - 한편, 본 전략의 추진을 통해 극동지역은 2011~2025년에는 극동지역이 러시아 전체 성장률보다 0.5%p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 및 교통과 같은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
    - 이로 인해 극동지역은 관련 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사회 인프라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확대, 세계 주요국 및 관련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 뿐 아니라 중국도 최근 자원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등 對 러시아 경제협력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미러 투자기금(TUSRIF) 설립, 고어-체르노미르딘 위원회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 서부해안 간 실무회의 구성 등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 일본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에너지 자원 개발 참여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양국 정부가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및 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EU는 거대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에 개별 진출하고 있는데,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뿐 아니라 광물자원과 인프라 부문에도 관련 러시아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러시아의 극동 지역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2018년까지)하고 있는데 에너지 협력은 물론 자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연계하면서 국경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의 對 러시아 협력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수입, 농업과 임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對 러시아 협력은 부재, 향후 국가 차원에서 對 극동지역은 물론 러시아와 중일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 13) 글로벌 경제영토의 확장

- (현황과 문제점)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내수 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석유 등의 소비증가로 자원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음
  - 내수 소비시장 협소 : 우리 경제의 내수 소비시장 규모는 5,351억달러(GDP 대비 52.7%)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협소
    - 미국은 내수 소비시장 규모가 10조달러를 초과하며 GDP대비 비중도 70.9%에 달하며 일본은 3조 2,518억달러로 내수 비중은 59.2%를 나타내고 있음
    - 협소한 내수 여건으로 잠재적인 성장 여력이 부족하고, 고용과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우려<sup>38)</sup>
  - 자원 부족 우려 : 일일 석유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50%이하로 하락하는 등 자원 부족 문제 심각
    - 일일 석유소비량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239만 배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일 가스소비량도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
  - 국제사회 영향력 부족 :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부족으로 국가 인지도가 낮고, 국제 기구 및 국제협력체 등으로의 진출이 미약
    -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세계 GDP 15위(PPP 기준), 무역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 공헌 부족으로 국가 인지도와 영향력이 미미
    - IMF나 OECD, G20 등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부족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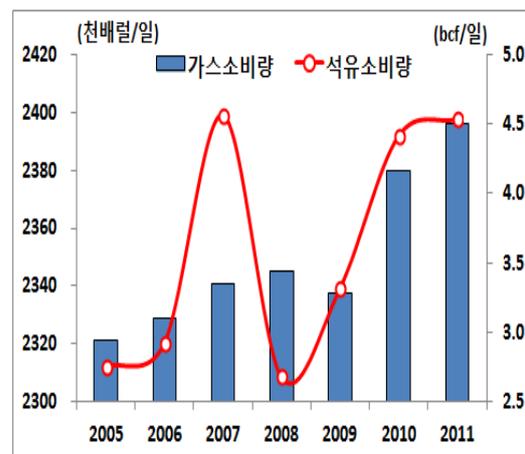
< 주요국 내수규모와 GDP대비 비중 >

(단위: 십억달러, %)

|      | 내수소비 규모 | GDP    | 내수비중 (GDP대비) |
|------|---------|--------|--------------|
| 미국   | 10,245  | 14,447 | 70.9         |
| 일본   | 3,251   | 5,488  | 59.2         |
| 독일   | 1,872   | 3,259  | 57.5         |
| 프랑스  | 1,479   | 2,549  | 58.0         |
| 영국   | 1,442   | 2,252  | 64.0         |
| 이탈리아 | 1,239   | 2,044  | 60.6         |
| 캐나다  | 913     | 1,577  | 56.5         |
| 한국   | 535     | 1,015  | 52.7         |

자료: World Bank.  
주: 2010년 기준.

< 일일 가스 및 석유소비량 추이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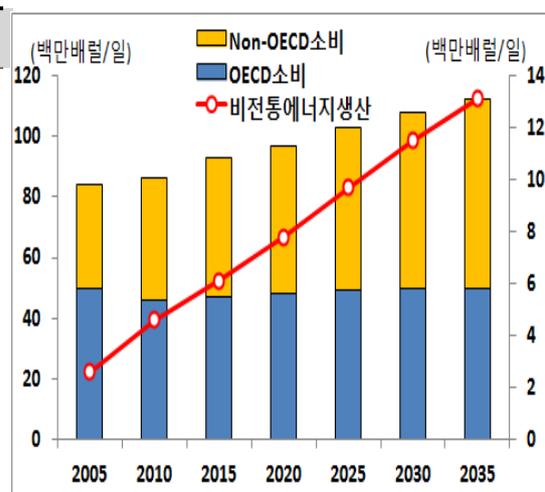
38)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12년 현재 3.7%로 하락

○ (정책 대안) FTA 지속적 확대, 해외 자원 개발 및 식량기지 확보, ODA 공여 확대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영토를 확장해나가야 함

- FTA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글로벌 무역 영토를 확장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10개국과 FTA 협정이 발효 또는 체결되었으며, 세계 GDP 대비 60%이상이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
  - 중장기적 FTA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및 신흥국들과의 FTA를 확대하여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함
  - FTA 관련 전략과 정책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지원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한편 효과적 원산지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질적인 발전 도모
- 해외 자원개발 사업 및 비전통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글로벌 자원 영토를 확장해야 함
  - 현재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3.7%로 향후 생산 광구 인수 및 우량 에너지 기업 M&A 등을 통해 자원 자주개발률 20%대 달성
  -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외교 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자원 분야의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탐사기술의 향상을 통해 개발 사업의 리스크 최소화
  - 특히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필요

< 한국,중국,일본의 FTA 체결 현황 > <세계석유소비 및 비전통석유생산 전망>

| 한국(10)       | 중국(10)  | 일본(13)  |
|--------------|---------|---------|
| - 칠레('99)    | - ASEAN | - 싱가포르  |
| - 싱가포르('06)  | - 뉴질랜드  | - 멕시코   |
| - ETFA('06)  | - 마카오   | - 말레이시아 |
| - ASEAN('09) | - 싱가포르  | - 칠레    |
| - 인도('10)    | - 칠레    | - 태국    |
| - EU('11)    | - 파키스탄  | - 인도네시아 |
| - 페루('11)    | - 페루    | - 브루나이  |
| - 미국('12)    | - 홍콩    | - ASEAN |
| - 터키('12)    | - 코스타리카 | - 필리핀   |
| - 콜롬비아('12)  | - 대만    | - 스위스   |
|              |         | - 베트남   |
|              |         | - 인도    |
|              |         | - 페루    |



자료: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자료: EIA

- **ODA 공여 확대** : ODA의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 2011년 ODA규모는 13억달러로 GDP대비 0.1%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ODA규모가 307억달러, 일본은 110억달러로 우리의 8.5배 수준
  - ODA를 GDP 대비 0.2%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및 원조역량 강화를 위해 원조전담기구 설립 및 사업 일원화, 평가역량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함
  
- **글로벌 인재 양성** :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 확대,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월드 클래스 인재 양성
  - 국제금융기구의 진출 비중이 2010년 0.62%에서 2012년 0.75%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제기구 진출 인력이 미약한 수준임
  - 해외 공관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인력의 해외 진출 확대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국제기구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발교육 강화 및 인재 양성과 글로벌 취업을 연계한 전문고등교육기관 설립 추진

< 주요국 ODA 규모 및 비중 2011 >

(단위 : 억달러, %)

|      | ODA규모 | GDP대비 비중 |
|------|-------|----------|
| 미국   | 30.7  | 0.2      |
| 일본   | 11.0  | 0.2      |
| 독일   | 14.5  | 0.4      |
| 프랑스  | 14.5  | 0.5      |
| 영국   | 13.7  | 0.6      |
| 이탈리아 | 4.2   | 0.2      |
| 캐나다  | 5.3   | 0.3      |
| 선진국  | 92.1  | 0.3      |
| 한국   | 1.3   | 0.1      |

자료 : OECD, World Bank.

< 주요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비중 >

(%)

| 구분                | 2010 | 2012 |
|-------------------|------|------|
| 국제통화기금 (IMF)      | 0.95 | 1.08 |
| 아시아개발은행 (ADB)     | 1.74 | 1.87 |
| 세계은행 (World Bank) | 0.46 | 0.38 |
| 미주개발은행 (IDB)      | 0.20 | 0.31 |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0.06 | 0.18 |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0.32 | 0.69 |
| 평균                | 0.62 | 0.75 |

자료 : 기획재정부

< 해외사례 : 중국의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

- '해외경제무역합작구(境外經濟貿易合作區)' -

- 중국은 자국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走出去)을 위해 현지의 인프라 건설과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국정부(상무부)가 허가·지원하고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해외단지로 생산·물류·서비스 전체나 일부 기능을 포괄함
  - 중국 상무부는 2006년 50개 대외경제협력단지 건설방침을 천명한 뒤 현재 19개의 합작구가 승인
  
- 설립방식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전문경영형 : 대기업 중심의 하이얼-파키스탄 경제협력단지와 러시아 우수리스크경제협력단지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화된 산업단지
  - 자원개발형 : 현지 자원에 의거하여 자원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단지. 예) 잠비아의 중국경제협력단지는 아프리카 동광(銅鑛)자원 개발이 목적
  - 특화산업형 : 중국의 전통 특화산업에 의거해 형성된 경제협력단지. 예) 모리셔스의 텐리(天利) 경제협력단지(방직, 의류, 가전 등)
  
- 특히 중국은 이러한 해외경제협력단지의 조성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현지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FTA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북 무안에도 경제협력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약 2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5년에 걸쳐 완공
  - 도입시설로는 한중국제산업단지, 수출전략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임가공수출입산업단지, 통합의학단지 등이 조성
  
- 시사점 :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경제 영토 확장에 기여
  - 해외경제협력구와 같이 진출 대상국가에 대한 소규모의 투자를 통해 시장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2072-6223, csk01@hri.co.kr)

### 3. 추진방안

-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4만 달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10+3'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3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함
- ① (장단기 정책 구분)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저성장 추세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검토해야 하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정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② (성장-복지 선순환)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재도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복지와 성장의 균형',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4% 이상 고성장'을 요구하고 있음
- ③ (사회적 합의와 통합)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각 주체별, 분야별 노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통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함
    -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통해 '중산층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냄

**MEMO**

**MEMO**

**MEMO**